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북한사회변동 2012-2020

김유연, 박상민·이혜원, 송원준,  
이종민, 정은미,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 제1장 연구 개요

- 1. 조사 목적 ..... 14
- 2. 설문조사방법 및 데이터 코딩 ..... 16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 20
-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 31

## 제2장 의식주와 정보화

- 1. 의식주 생활의 변화 ..... 36
- 2. 정보화의 진전 ..... 54
- 3. 계층별 의식주 생활 비교 ..... 66
- 4. 결론 ..... 82

## 제3장 경제-소득과 지출

- 1. 서론 ..... 90
- 2. 북한 주민들의 소득 추이 및 개인 특성과의 상관관계 ..... 92
- 3. 북한 가계의 소비 지출 구성 ..... 108
- 4.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실질소득 추이 및 소득분배지표 ..... 114
- 5. 평가와 시사점 ..... 125

## 제4장 보건 의료

- 1. 서론 ..... 132
- 2. 북한의 대외원조 수요변화 및 질병부담 ..... 133
- 3. 무상의료체제 붕괴와 환자의 개인부담 증가 ..... 159
- 4. 결론 ..... 163

## 제5장 교육 - 새로운 세대

- 1. 서론 ..... 168
- 2. 새로운 세대의 특성 ..... 170
- 3.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 175
- 4. 제1중학교 및 대학 진학 요인 ..... 196
- 5. 평가와 시사점 ..... 202

## 제6장 심화분석 - 대북제재와 주민생활

- 1. 서론 ..... 208
- 2. 생활상 변화 추이 ..... 209
- 3. 생활상 변수들의 인식 결정요인 ..... 218
- 4. 결론 ..... 223

## 제7장 총론 ..... 228

## 부 록 설문지 ..... 238

# 표목차

〈표 1-1〉 조사의 표본	17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19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20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2
〈표 1-5〉 탈북 전 최종거주지	23
〈표 1-6〉 재북 교육수준 분포	25
〈표 1-7〉 재북 직업별 분포	26
〈표 1-8〉 재북 당시 당원 여부 분포	27
〈표 1-9〉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8
〈표 1-10〉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29
〈표 1-11〉 결혼 상태 분포	30
〈표 1-12〉 자녀의 수 분포	31
〈표 2-1〉 시기별 하루 식사 횟수	37
〈표 2-2〉 시기별 주식 구성	38
〈표 2-3〉 시기별 고기 섭취 빈도	41
〈표 2-4〉 성별 고기섭취 빈도 (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	42
〈표 2-5〉 시기별 의류 구입 횟수	43
〈표 2-6〉 시기별 옷 원산지	45
〈표 2-7〉 시기별 의류 구입처	47
〈표 2-8〉 시기별 주택 유형	49
〈표 2-9〉 시기별 주택 마련 방법	50
〈표 2-10〉 시기별 가구 내 내구재 보유율	52
〈표 2-11〉 이동전화 보유 현황	54

〈표 2-12〉 젠더별 가구내 이동전화 보유 현황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55
〈표 2-13〉 연령대별 가구내 이동전화 보유 현황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56
〈표 2-14〉 이동전화 용도	57
〈표 2-15〉 연령대별 이동전화 용도 비교 (2018년, 2019년 통합 기준)	58
〈표 2-16〉 이동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	59
〈표 2-17〉 컴퓨터 보유 현황	60
〈표 2-18〉 컴퓨터 이용 경험	61
〈표 2-19〉 젠더별 컴퓨터 이용 경험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61
〈표 2-20〉 연령대별 컴퓨터 이용 경험 비교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62
〈표 2-21〉 컴퓨터 이용 장소	63
〈표 2-22〉 시기별 인터넷 이용 경험 변화	64
〈표 2-23〉 인터넷 이용 장소	65
〈표 2-24〉 시기별 계층 구성 (탈북 전 1년 기준)	67
〈표 2-25〉 시기별 계층과 월평균 (비공식)소득 비교	69
〈표 2-26〉 직업별 계층 분포	70
〈표 2-27〉 교육 수준별 계층 분포	71
〈표 2-28〉 계층별 주식의 곡물배합	73
〈표 2-29〉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	75
〈표 2-30〉 계층별 의류 구입 빈도	77
〈표 2-31〉 계층별 살림집 형태	78
〈표 2-32〉 계층별 살림집 마련 방법	79
〈표 2-33〉 계층별 살림집 내구재(가구 자산) 보유율	81

# 표목차

〈표 3-1〉 북한 주민의 부문별(공식/비공식) 개인 현금소득(월) 구성 .....	96
〈표 3-2〉 북한 주민의 개인 현금소득(월) 추이 .....	97
〈표 3-3〉 성별에 따른 개인 소득 분포 .....	98
〈표 3-4〉 성별에 따른 주 소득원 업종 .....	99
〈표 3-5〉 출신 지역별 개인 소득 분포 .....	100
〈표 3-6〉 기타 집단별 개인 소득 분포 .....	100
〈표 3-7〉 개인 특성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소득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	105
〈표 3-8〉 개인 특성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소득 규모 (OLS 회귀분석) .....	107
〈표 3-9〉 (주관적) 소득 계층별 지출 구성 .....	113
〈표 3-10〉 지출 측면의 소득 추정 시 단계별 가정 및 계산 방법 .....	117
〈표 3-11〉 월 실질소득으로 본 북한의 인구 집단별 생활 수준 .....	120
〈표 4-1〉 SDG 3 세부목표별 지표 .....	139
〈표 4-2〉 모자보건 관련 SDG 세부목표와 지표 .....	141
〈표 4-3〉 모자보건 관련 SDG 지표들의 비교, 북한, 남한, 그리고 지역별 평균 .....	142
〈표 4-4〉 북한 산모의 분만장소와 분만개조자 동행 현황, 2017년 .....	146
〈표 4-5〉 감염성질환 관련 SDG 세부목표와 지표 .....	147
〈표 4-6〉 감염성질환 관련 SDG 지표들의 비교, 북한, 남한, 그리고 지역별 평균 .....	148
〈표 4-7〉 북한과 남한의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비교표 .....	149
〈표 4-8〉 북한의료기관의 실태 (2018, 2019년) .....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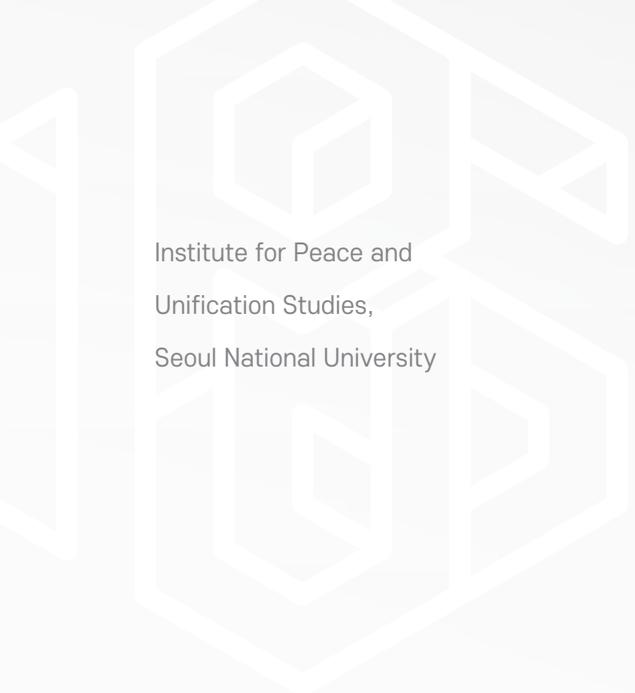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표 5-1〉 시기별 10-30대와 40-70대의 남한문화 경험도 .....	174
〈표 5-2〉 소학교 1학년 재학 아동 중 전년도 유치원 출석 아동 비율 .....	177
〈표 5-3〉 소학교 학령 1년 전 체계적 교육 참여율 .....	177
〈표 5-4〉 2017년 소학교 입학률, 순 출석률, 학교 밖 아동 비율 .....	178
〈표 5-5〉 2017년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순 출석률 .....	180
〈표 5-6〉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	181
〈표 5-7〉 2017년 7-14세 아동청소년의 읽기, 산수 문해율 .....	184
〈표 5-8〉 사교육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 .....	194
〈표 5-9〉 사교육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95
〈표 6-1〉 생활상 변인들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	219
〈표 6-2〉 생활상 변인과 북한 경제에 대한 인식 .....	221
〈표 6-3〉 생활상 변인과 통일/대남/주변국 인식 .....	222
〈표 6-4〉 종속변수 기술통계 .....	225

〈그림 1-1〉 조사 연도별 성별 분포	21
〈그림 1-2〉 조사 연도별 탈북 전 최종거주지	24
〈그림 1-3〉 조사 연도별 당원 여부 분포	27
〈그림 2-1〉 김정은 정권에서의 대중국 곡물수입 추이	39
〈그림 2-2〉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섬유 및 의류 수입 추이	46
〈그림 2-3〉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전자제품(전기기기, 음향영상설비, 부품) 수입 추이	53
〈그림 3-1〉 북한 주민의 지출에서 식비의 비중	109
〈그림 3-2〉 북한 주민의 지출에서 의복비 비중	110
〈그림 3-3〉 북한 주민의 지출에서 교육비와 저축 비중	111
〈그림 3-4〉 개인의 소득수준과 지출 구성의 관계	113
〈그림 3-5〉 1인당 일 평균 곡물 소비량 추이	118
〈그림 3-6〉 1인당 월 평균 소득 및 식비 지출	119
〈그림 3-7〉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북한의 지니계수	124
〈그림 3-8〉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북한의 지니계수 : 시기별	125
〈그림 4-1〉 북한 곡물 생산량에 따른 곡물 부족분 추정치 (2003-2015년)	134
〈그림 4-2〉 북한의 쌀 배급 현황 (2011-2013년)	134
〈그림 4-3〉 북한의 쌀 배분 현황 (2013-2014년)	134
〈그림 4-4〉 북한의 연도별 곡물 생산량	135
〈그림 4-5〉 북한의 연도별 재정적 지원의 수효변화	137
〈그림 4-6〉 북한 모성사망비 연도별 현황 (2014-2019년)	143
〈그림 4-7〉 북한 5세 이하 아동 사망비, 신생아 사망비 연도별 현황 (2014-2019년)	144

〈그림 4-8〉 도별 의료시설 외의 장소에서 분만하는 비율	145
〈그림 4-9〉 북한 결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50
〈그림 4-10〉 북한 결핵사망률과 사망자 수의 연도별 변화	150
〈그림 4-11〉 북한 연령대 및 성별 결핵 발생자 수 분포	151
〈그림 4-12〉 말라리아 대북지원 현황 및 말라리아 발생건수, 2005-2017년	153
〈그림 4-13〉 북한 질병부담 우선순위 변화 (1990년과 2019년 비교)	155
〈그림 4-14〉 남북한 노인인구 비율 변화추이	157
〈그림 4-15〉 남북한 노인 중 1개 이상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 비교	157
〈그림 4-16〉 북한 자연재해 및 사고 인한 사망 비율 현황, 1990-2017	158
〈그림 4-17〉 의료기관 이용 진료거절 사유	163
〈그림 4-18〉 북한에서 자가치료 경험	163
〈그림 4-19〉 The Impact of Covid-19 on DPRK's Health System	165
〈그림 5-1〉 조사 참여자 연령 평균 추세선	169
〈그림 5-2〉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 (탈북 연도 2017-2019년 기준)	171
〈그림 5-3〉 연령대별 남한문화 경험도 (탈북 연도 2010-2020년 기준)	173
〈그림 5-4〉 연령대별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182
〈그림 5-5〉 사교육 경험에 따른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182
〈그림 5-6〉 탈북 직전 1년 중학교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185
〈그림 5-7〉 탈북 직전 1년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189
〈그림 5-8〉 북한이탈주민의 사교육 경험 및 남한 사교육 참여율 비교	192
〈그림 5-9〉 사교육 분야별 경험 (탈북 연도 2018, 2019년 기준)	193
〈그림 5-10〉 제1중학교 진학 요인 우선순위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198
〈그림 5-11〉 대학 진학 요인 우선순위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199

〈그림 6-1〉 하루 세 끼 이상 식사 응답률 .....	210
〈그림 6-2〉 거의 매일 육류 섭취 응답률 .....	210
〈그림 6-3〉 식비 지출 .....	211
〈그림 6-4〉 문화생활 지출 .....	211
〈그림 6-5〉 고수입원 중 외화벌이 응답률 .....	212
〈그림 6-6〉 고수입원 중 해외 파견노력 근무 응답률 .....	213
〈그림 6-7〉 고수입원의 재료출처 북한 응답률 .....	214
〈그림 6-8〉 고수입원 애로사항 물건/원료/자재 확보 .....	214
〈그림 6-9〉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최고영도자 .....	216
〈그림 6-10〉 북한이 잘살기 위해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필요 .....	216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연구 개요**

## 제1장 연구 개요

### 1. 조사 목적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는 권력 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북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 모색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층 사회에서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변화를 포함해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 전환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그리고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등장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 변화가 어떤 미래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변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일 것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의 중요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연구의 장애물들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1년 말 입국자 기준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북한사회변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를 설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 직전년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북한의 엄격해진 국경봉쇄로 인해 충분한 수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북한사회변동조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모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매해 해온 조사들보다 더 엄밀하게 양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파악

하러 노력하였다.<sup>1)</sup>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지역별 생활수준, 정보화, 시장화의 양상, 경제행위의 다양성,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

## 2. 설문조사방법 및 데이터 코딩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귀하는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 보통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또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본 조사는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연도 데이터는 사실상 그 1년 전 탈북민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다루는 2020년 데이터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 탈북민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2021년 탈북민 데이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코로나-19 이후의 북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기준 하에서 금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20년 즉 2011년 탈북민으로부터 2019년 탈북민까지의 9년 치 데이터를 모두 보게 될 것이다.

〈표 1-1〉 조사의 표본

(단위: 명)

조사 연도 \ 탈북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6-6/2	6/13-7/16	5/20-7/7	5/22-7/6	6/10-8/8	6/8-8/6	7/20-8/31	8/9-9/6	7/25-9/13
201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132			
2017							85		
2018							2	114	
2019								2	108
2020									1
총 계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려면 탈북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국 연도가 같더라도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보다 최근 북한사회의 실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탈북 시점과 입국 시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억과 인식의 변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표본의 구성을 조사 연도 직전년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민단체 및 탈북민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

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전국의 하나센터 등 관계기관들 외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례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간 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대상자의 탈북 연도로는 총 10년 간의 시점을 총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시계열적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의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실태, 정보·통신 환경 실태, 시장경제 활동과 소득 실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 실태, 보건 실태, 교육 실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표 1-2>와 같다.<sup>2)</sup>

총 9년 동안 이루어진 본 조사의 설문대상자 탈북 연도는 2011년부터 2020년에 달하는데, 이 시기가 김정은 정권의 집권 시기와의 일치하기 때문에 편의상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2011

2) 북한 주민의 교육 실태 설문문항은 2020년부터 추가되었다.

년~2014년), 2016년 5월에 있었던 제7차 당대회 시기 전후(2015년~2017년), 제재가 본격화 된 경제제재 시기(2018년~2020년)이다.<sup>3)</sup>

소득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는 outlier를 제거하는 등의 재가공을 하지 않고, 기본 데이터를 로그 처리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각주를 통해 비교 가능한 안정적인 수치(환율 등)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대푯값으로 평균과 중앙값을 모두 사용한다.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범주	설문내용	
의식주, 정보·통신환경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루 식사횟수</li> <li>주식의 구성</li> <li>고기 섭취 횟수</li> <li>의류 구매 횟수</li> <li>의류 원산지</li> <li>의류 주요 구매처</li> <li>가족 내 의사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림집 형태</li> <li>살림집 장만경로</li> <li>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li> <li>소유한 정보통신 기기</li> <li>인터넷 이용 경험</li> <li>인터넷 이용 장소</li> </ul>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li> <li>지역의 빈부격차</li> <li>직업의 빈부격차</li> <li>월 평균 지출 비중</li> <li>빈부격차의 발생요인</li> <li>일상생활의 고민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li> <li>식생활 형편</li> <li>사교육 경험과 분야</li> <li>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li> </ul>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수입 원천</li> <li>자재/원료의 원산지</li> <li>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li> <li>고용노동의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유화의 대상</li> <li>경제체제의 이유</li> <li>국가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li> </ul>
보건의료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 이용 실태</li> <li>의약품 구매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 실태</li> </ul>
교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출석률</li> <li>제1중학교 진학 요인</li> <li>대학교 진학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학생 학교생활</li> <li>중학교 교원에 대한 생각</li> </ul>

3) 김병연의 경우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한 UN 안보리 제재 2270호를 기점으로 UN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제제재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부터 제재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출처:김병연 외,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12 (2018): 35-64.)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 1) 성별, 연령별, 탈북-입국기간의 특징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의 여성 비율은 그보다 낮다.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율이 2019년과 2020년에는 약 65%, 2018년 56%, 2017년 47%, 2016년 62%, 2015년 61%, 2014년 66%,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5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자료의 연령대별 입국 현황에서 2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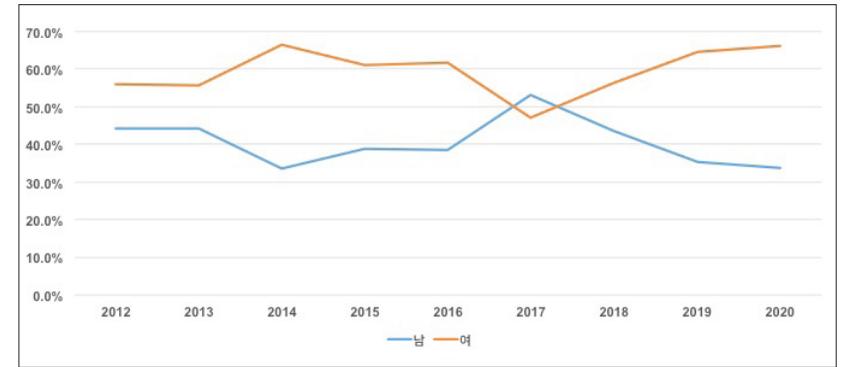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대	0 (0.0)	0 (0.0)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3 (75.0)	1 (25.0)	0 (0.0)	3 (100.0)	2 (50.0)	2 (50.0)
20대	23 (51.1)	22 (48.9)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42.4)	19 (57.6)	20 (54.1)	17 (45.9)	14 (38.8)	22 (61.2)
30대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52.4)	10 (47.6)	9 (34.6)	17 (65.4)	6 (33.3)	12 (66.7)
40대	11 (32.4)	23 (67.7)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40.7)	11 (50.0)	5 (50.0)	5 (50.0)	7 (29.2)	17 (70.8)	4 (28.6)	10 (71.4)
50대	5 (38.5)	8 (61.5)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26.3)	14 (73.7)	5 (25.0)	15 (75.0)	8 (33.3)	22 (73.3)
60대 이상	6 (50.0)	6 (50.0)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0 (0.0)	6 (100.0)	6 (42.9)	4 (57.1)
합계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37 (33.9)	72 (66.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 (rounding-error)에 해당한다.

〈그림 1-1〉 조사 연도별 성별 분포



〈표 1-1〉를 참고하여 응답자의 탈북 연도와 입국 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전체는 2011년에 탈북하여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2012년에 입국하였으며 2명은 2013년에 입국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149명 전원이 2013년에 탈북하여 이 중 141명이 2013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8명은 2014년에 입국하였다. 2015년 조사에는 전원이 2014년에 탈북하여 이 중 129명이 2014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17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135명이 2015년에, 3명이 2016년에 탈북 하였다. 이 중 99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으며 39명이 2016년에 입국하였다. 2017년 조사의 경우 2016년도에 탈북한 조사대상 132명 중 19명만이 2017년에 입국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총 87명 중 85명이 2017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68명이 입국하였고 19명은 2018년에 입국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총 116명 중 114명이 2018년에 탈북하였고 2명 만이 2019년에 탈북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총 109명 중 108명이 2019년에 탈북하였고 1명 만이 2020년에 탈북하였다.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 연도 소요 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개월 미만	0.0	0.0	3.4	0.0	1.4	1.5	2.3	0.9	2.8
1개월	1.6	0.0	26.8	30.8	21.0	27.3	27.6	22.4	14.7
2개월	18.1	29.3	48.3	29.0	22.5	32.6	21.8	31.0	35.8
3개월	48.8	47.4	8.1	14.4	15.2	12.1	10.3	11.2	12.8
4개월	14.2	8.3	2.0	6.8	14.5	8.3	20.7	18.1	18.3
5개월	6.3	5.3	4.7	2.1	15.2	8.3	5.7	8.6	3.7
6개월	4.7	1.5	2.7	1.4	2.9	2.3	4.6	5.2	6.4
7개월	0.8	3.8	2.0	0.7	1.4	0.8	1.1	0.9	2.8
8개월	2.4	1.5	1.3	0.0	0.7	3.8	0.0	0.9	1.8
9개월	0.8	0.8	0.7	1.4	1.4	2.3	4.6	0.0	0.0
10개월	1.6	2.3	0.0	3.4	0.7	0.0	0.0	0.0	0.0
11개월	0.8	0.0	0.0	0.0	1.4	0.8	0.0	0.0	0.0
13개월	-	0.0	0.0	0.0	0.0	0.0	1.1	0.0	0.0
14개월	-	0.0	0.0	0.0	0.0	0.0	0.0	0.9	0.9
무응답	0.0	0.0	0.0	0.0	1.4	0.0	0.0	0.0	0.0
평균(개월)	3.57	3.37	2.26	2.49	3.33	2.82	3.06	2.90	3.01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응답자들의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평균 3.57개월, 3.37개월, 2.26개월, 2.49개월, 3.33개월, 2.82개월, 3.06개월, 2.90개월, 3.01개월이었다. 탈북 후 입국까지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각각 82.7%, 76.7%, 86.6%, 74.2%, 60.1%, 73.5%, 62.0%, 65.5%, 66.1%로 집계되었다.

## 2) 고향, 학력, 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기 전의 최종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으로, 2020년도의 경우 이들 지역 출신은 84.4%에 이른다. 통일부 자료(2020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함경북도 출신이 58.8%, 양강도 출신이 17.8%, 함경남도 출신이 8.5%이다. 모집단 자체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양강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최근의 탈북 행위가 구조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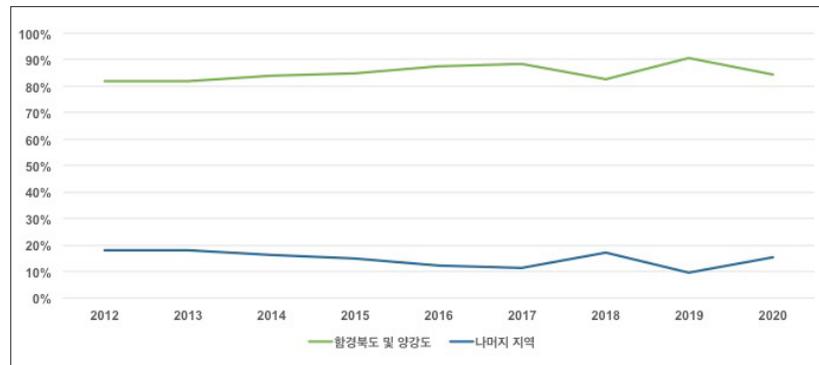
〈표 1-5〉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단위: 명, (%))

조사 연도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양	0 (0.0)	1 (0.8)	3 (2.0)	3 (2.1)	5 (3.6)	2 (1.5)	2 (2.3)	0 (0.0)	1 (0.9)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1 (1.1)	1 (0.9)	0 (0.0)
남포	1 (0.8)	0 (0.0)	2 (1.3)	1 (0.7)	2 (1.4)	1 (0.8)	0 (0.0)	0 (0.0)	0 (0.0)
평안남도	0 (0.0)	2 (1.5)	4 (2.7)	3 (2.1)	2 (1.4)	0 (0.0)	2 (2.3)	0 (0.0)	2 (1.8)
평안북도	1 (0.8)	6 (4.5)	0 (0.0)	3 (2.1)	1 (0.7)	1 (0.8)	5 (5.7)	0 (0.0)	2 (1.8)

조사 연도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함경남도	14 (11.0)	11 (8.3)	9 (6.0)	5 (3.4)	4 (2.9)	6 (4.5)	4 (4.6)	5 (4.3)	5 (4.6)
함경북도	65 (51.2)	51 (38.6)	53 (35.6)	64 (43.8)	58 (42.0)	33 (25.0)	20 (23.0)	18 (15.5)	15 (13.8)
자강도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3 (2.8)
양강도	39 (30.7)	58 (43.9)	72 (48.3)	60 (41.1)	63 (45.7)	84 (63.6)	52 (59.8)	87 (75.0)	77 (70.6)
황해남도	3 (2.4)	0 (0.0)	1 (0.7)	1 (0.7)	0 (0.0)	4 (3.0)	1 (1.1)	0 (0.0)	0 (0.0)
황해북도	3 (2.4)	1 (0.8)	2 (1.3)	4 (1.3)	0 (0.0)	0 (0.0)	0 (0.0)	2 (1.7)	3 (2.8)
강원도	1 (0.8)	2 (1.5)	2 (1.3)	2 (1.4)	3 (2.2)	0 (0.0)	0 (0.0)	2 (1.7)	1 (0.9)
무응답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0 (0.0)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그림 1-2〉 조사 연도별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급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약 60-70%가 고급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각각 10.2%, 16.5%, 13.4%, 19.9%, 13.0%, 7.6%, 5.7%, 6.9%, 10.1%를 차지하여 2020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대졸자 이상 학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통일부 자료에서는 고급중학교와 전문대 이상 재학자가 86.8%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통일부의 전체 모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표 1-6〉 재북 교육수준 분포

(단위: %)

교육수준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학교	10.2	16.5	13.4	19.9	13.0	7.6	5.7	6.9	10.1
전문학교	18.1	11.3	21.5	16.4	11.6	17.4	13.8	22.4	15.6
고급중학교	65.4	71.4	61.7	61.0	74.6	72.0	73.6	70.7	67.0
소학교	3.2	0.0	2.0	2.1	0.7	2.3	6.9	0.0	1.8
무학	1.6	0.8	0.0	0.7	0.0	0.8	0.0	0.0	2.8
무응답	1.6	-	1.3	-	-	-	-	-	1.8
전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한편 응답자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재북 직업이 노동자였다는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각각 37.0%, 31.6%, 30.9%, 26.2%, 22.5%, 43.9%, 32.2%, 26.7%, 26.6%로 2020년 노동자 출신은 이전 년도 조사 수준과 유사하여 2017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장사, 가정부인의 비율은 2012년부터 72.6%, 75.2%, 74.3%, 72.4%, 68.1%, 74.2%, 72.4%, 68.9%, 69.7%로 집계되었다.

〈표 1-7〉 재북 직업별 분포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동자	37.0	31.6	30.9	26.0	22.5	43.9	32.2	26.7	26.6	
농민	8.7	3.8	7.4	4.8	9.4	3.8	11.5	3.4	5.5	
사무원	4.7	9.8	12.1	8.9	10.9	6.1	6.9	8.6	5.5	
전문가*	7.1	8.3	3.4	5.5	7.2	7.6	0.0	1.7	3.7	
학생	6.3	6.0	7.4	4.8	4.3	2.3	13.8	7.8	11.9	
군인	3.9	4.5	4.7	4.8	8.0	5.3	3.4	3.4	4.6	
외화벌이 일군	2.4	2.3	0.0	4.1	2.9	3.8	0.0	1.7	2.8	
장사	11.1	13.5	4.7	20.5	12.3	9.8	0.0	8.6	18.3	
가정부인	11.1	16.5	18.8	11.6	13.0	10.6	21.8	21.6	13.8	
무직 및 기타	6.3	3.8	10.1	8.2	9.4	6.8	10.3	16.4	4.6	
무응답	1.6	-	0.7	0.7	-	-	-	-	0.9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 전문가에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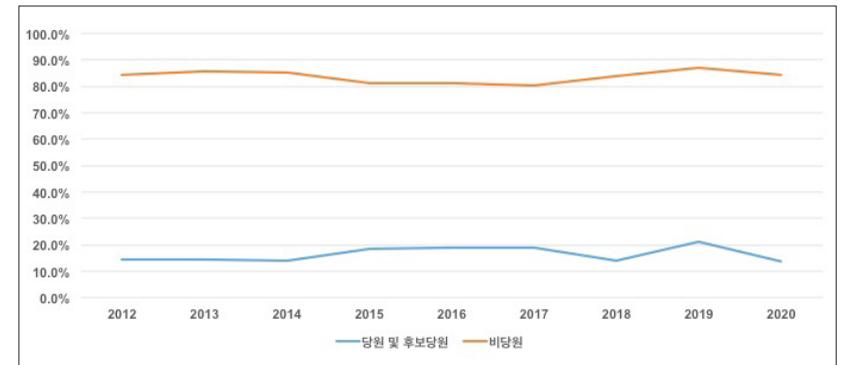
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다는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80%대를 유지하였다. 당원인 경우는 2014년 13.4%에서 점차 증가해 2016년 18.8%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20년에는 12.8%가 되었다.

〈표 1-8〉 재북 당시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원	14.4	14.3	13.4	17.9	18.8	18.2	13.8	11.2	12.8	
후보당원	0.0	0.0	0.7	0.7	0.0	0.8	0.0	0.9	0.9	
비당원	84.3	85.7	85.2	81.4	81.2	80.3	83.9	87.1	84.4	
무응답	1.6	-	0.7	0.7	-	0.8	-	0.9	1.8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그림 1-3〉 조사 연도별 당원 여부 분포



주: 무응답 제외

###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 친척의 유무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이동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탈북 후 북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

조사 이후 증가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하였지만 이후 2017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2019년 조사에서는 반등했으나 2020년에 다시 하락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 이후 20%대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나, 2020년에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59.1%, 2013년 57.1%, 2014년 57.8%, 2015년 54.8%, 2016년 50.7%, 2017년 56.1%, 2018년 63.2%, 2019년 55.2%, 2020년 58.7%로 조사되었다.

〈표 1-9〉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7	22.6	24.8	19.2	26.1	20.5	19.5	22.4	9.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9.1	57.1	57.8	54.8	50.7	56.1	63.2	55.2	58.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1.3	20.3	17.5	25.3	23.2	23.5	17.2	21.6	31.2
무응답	-	-	-	0.7	-	-	-	0.9	0.9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하기 전 남한에 거주하는 혈육이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2

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지속 증가 후 2015년 41.8%로 감소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60.9%로 증가하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7년 51.5%로 감소하였고 2018년 조사결과 다시 소폭 하락한 50.6%를 기록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70.7%로 약 20% 상승하였고, 2020년 조사에서는 63.3%를 기록했다.

〈표 1-10〉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남한 친척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없다	37.8	34.6	30.9	58.2	39.1	48.5	49.4	29.3	36.7
있다	62.2	65.4	69.1	41.8	60.9	51.5	50.6	70.7	63.3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1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묻는 항목에는 결혼(동거 포함), 미혼, 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다. 이혼한 북한이탈 주민들도 9.0%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미혼이 30.9%, 결혼이 55.0%였다. 2015년에는 미혼이 더욱 증가하여 39.0%였으며, 결혼은 42.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7.8%로 증가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도 미혼이 증가하여 42.0%였으며, 결혼은 47.1%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이혼은 2015년보다 감소하여 10.9%였다. 2017년의 조사에서는 미혼과 결혼이 각각 40.2%, 45.5%로 2016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혼의 경우 13.6%로 2012년 대비 4.1%가 증가하여 그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미혼 50.6%, 결혼 41.4%로 그간의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혼의 경우는 5.7%로 역대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미혼 비율이 33.6%로 급감한 반면 결혼 비율은 52.6%로 지난해 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혼 비율 또한 13.8%로 지난해 5.7%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미혼 비율이 44.0%로 다시 증가했고, 결혼 비율은 45.9%, 이혼 비율은 9.2%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표 1-11〉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상태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혼	45.7	37.6	30.9	39.0	42.0	40.2	50.6	33.6	44.0	
결혼 (동거포함)	44.1	53.4	55.0	42.5	47.1	45.5	41.4	52.6	45.9	
이혼	9.4	9.0	14.1	17.8	10.9	13.6	5.7	13.8	9.2	
무응답	0.8	-	-	0.7	-	0.8	2.3	-	0.9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응답자들의 현재 자녀수를 조사하였다. 〈표 1-12〉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52.0%, 2013년 56.8%, 2014년 57.0%, 2015년 56.8%, 2016년 52.1%, 2017년 55.3%, 2018년 43.6%, 2019년 51.8%, 2020년 46.7%의 응답자들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12가구이며, 2014년에는 19가구, 2015년에는 43가구, 2016년에는 40가구, 2017년에는 28가구, 2018년에는 14가구, 2019년에는 47가구, 2020년에는 26가구로 집계되었다.

〈표 1-12〉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자녀의 수	조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명	24.4	37.9	34.2	39.7	43.5	43.2	52.9	43.1	46.8	
1명	27.6	32.6	27.5	35.6	33.3	36.4	24.1	39.7	28.4	
2명	19.7	24.2	29.5	21.2	18.8	18.9	19.5	12.1	18.3	
3명	7.1	4.5	6.7	2.1	4.3	0.8	3.4	0.9	2.8	
4명	1.6	0.8	1.3	1.4	0.0	0.8	0.0	2.6	0.9	
5명	-	0.0	0.7	0.0	0.0	0.0	0.0	0.0	0.0	
무응답	19.7	-	-	-	-	-	-	1.7	2.8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전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가능한 매년 조사를 진행하여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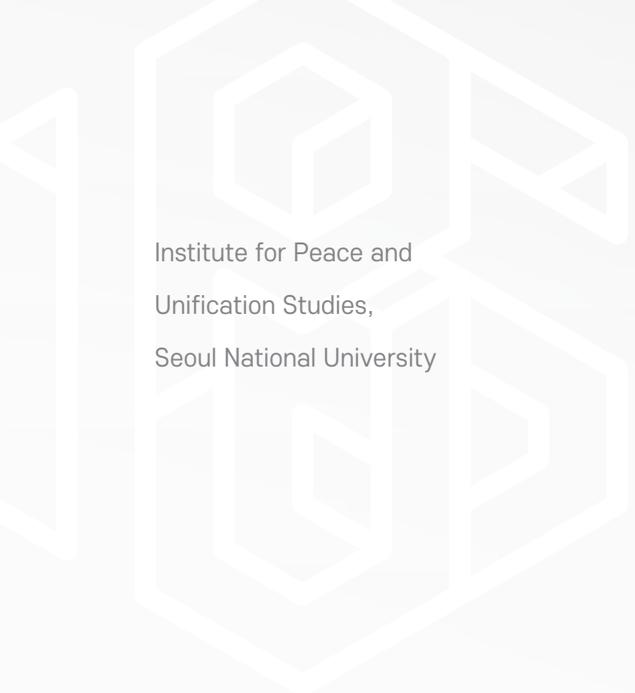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일부 국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 내륙에서 생활하는 주민

들의 시각과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결과를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인식하는 등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국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할 것이며, 이들의 가치판단과 행동 양식은 다른 지역 주민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한점들은 오히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 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표본의 인식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은 탈북 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구성된다. 매년 북한 사회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입국 연도가 아닌 탈북 연도를 기준으로 동일 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과 입국 사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인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인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재복 시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선의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의식주와  
정보화**

## 제2장

# 의식주와 정보화

|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 1. 의식주 생활의 변화

#### 1) 시기별 식생활의 변화

##### 가. 하루 식사 횟수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이뤄진다. 양적 평가로서 하루 식사 횟수를 측정하였다. 하루 식사 횟수 질문에 '세 끼 이상'의 응답률은 김정은 집권 10년 중 초기(2011~14년) 79.6%에서 중기(2015~17년) 88.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후기(2018~20년)에는 85.9%로 소폭 감소하였다.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는 응답률은 초기 1.3%, 중기 0.6%, 후기 0.9%로,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결식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후기에 식사 횟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결과로 북한주민의 식생활이 불안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동일 기간 질적인 측면에서 식생활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표 2-1〉 시기별 하루 식사 횟수

(단위: %)

시기 식사 횟수	탈북 연도		
	2011-2014 (N=548)	2015-2017 (N=353)	2018-2020 (N=227)
하루 세 끼 이상	79.6	88.4	85.9
하루 두 끼	12.0	8.8	11.5
하루 한 끼	7.1	2.3	1.8
한 끼도 못 먹을 때 많았음	1.3	0.6	0.9
전체	100.0	100.0	100.0

##### 나. 주식 구성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지표는 주식의 구성이다. 주식을 거의 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이 초기 44.4%에서 중기 53.4%, 후기 69.2%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반대로 거의 강냉이로만 된 주식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초기 22.2%에서 중기 12.1%로 크게 하락했고, 후기에는 5.3%까지 하락하였다. 전체적 추세를 종합했을 때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쌀 소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강냉이로만 된 주식을 섭취하는 인구는 크게 줄어 주식의 질적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2〉 시기별 주식 구성

(단위: %)

곡물 구성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50)	2015-2017 (N=354)	2018-2020 (N=227)
거의 입쌀		44.4	53.4	69.2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sup>a)</sup>		3.8	10.2	10.1
입쌀과 강냉이 반반		18.4	14.4	7.5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sup>b)</sup>		11.5	9.9	7.0
거의 강냉이		22.2	12.1	5.3
기타		0.0	0.0	0.9
전체		100.0	100.0	100.0

주: a)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항목은 2011~13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부터 포함됨.

b) 2011~13년에 '입쌀과 강냉이가 3:7 비율로 섞임' 항목을 2014년부터 표현이 변경된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문항에 통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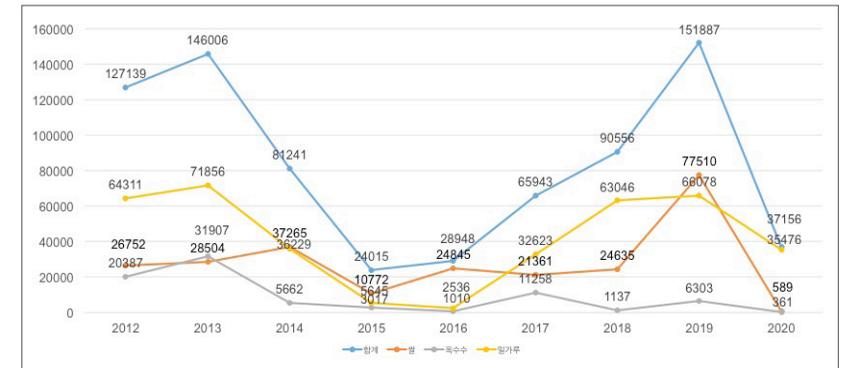
주식 곡물의 비중 변화는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 패턴과도 상당한 일치성을 보인다. 〈그림 2-1〉에서 보이듯, 2015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쌀과 밀가루의 수입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옥수수의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곡물 수입 패턴은 북한의 내부 곡물 수요 구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주민들의 주식 곡물 소비 패턴 변화는 농업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벼, 옥수수, 감자 중심의 곡물 농사에서 벼, 밀, 보리 중심의 곡물농사로의 전환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2021년 9월 2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시정연설 가운데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으로 방향전환을

할 데 대한 구상<sup>4)</sup>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구상의 배경에는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나갈 수 있는 조건<sup>5)</sup>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북한매체는 밝히고 있다.

〈그림 2-1〉 김정은 정권에서의 대중국 곡물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 대외무역 자료를 토대로 저자 그림 작성.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21년 6월에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는 본 조사의 결과와 달리 식량부족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식량 안보불안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당국은 식량부족이 2015년 1,147천톤, 2019년 1,486천톤 발생하였다고 밝혔다.<sup>6)</sup> 이와 같은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본 조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출처: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2면.)

5) 위의 글.

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사에서는 해당 시기 식량부족에 따른 식생활의 불안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식생활은 자가 경작 및 식량 분배의 효율성 제고, 식료품 가공시설의 증가 및 식료품 수입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량 부족량만으로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고기 섭취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지표는 고기 섭취 빈도이다. 북한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고기 섭취의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를 ‘거의 매일’ 섭취했다는 응답률은 초기(2011-14년)에 8.7%에서 중기(2015-17년) 14.2%로 증가했으며 후기(2018-20년)에는 13.3%로 이전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9년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여파가 후기에 고기 섭취 응답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했다는 응답률은 초기 25.4%에서 중기 36.8%, 후기 45.1%로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에 고기를 ‘일년에 한두 번’ 섭취했다는 응답률은 초기 22.8%에서 중기 11.9%로 크게 감소했으며, 후기 8.8%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초기 0.9%, 중기 1.7%, 후기 0.0%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섭취 증가와 더불어 고기 섭취 증가로 주식과 부식의 질적 개선이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대북제재가 강화된 후기도 주식과 부식의 질적 개선은 계속 이뤄져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식생활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표 2-3〉 시기별 고기 섭취 빈도

(단위: %)

섭취 횟수	탈북 연도		
	2011-2014 (N=550)	2015-2017 (N=354)	2018-2020 (N=227)
거의 매일	8.7	14.2	13.3
일주일에 한두 번	25.4	36.8	45.1
한 달에 한두 번	42.2	35.4	32.7
1년에 한두 번	22.8	11.9	8.8
먹은 적 없음	0.9	1.7	0.0
전체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VNR 2021’ 보고서와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2021’ 보고서에서 나타난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나 5세 미만 영유아 영양실태를 본 조사의 식생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VNR 2021’ 보고서에서 5세 미만 영유아 발육부진률은 2015년 27.9%, 2018년 19.1%, 2020년 17.4%로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2021’ 보고서에는 영양부족 인구율이 2004-2006년 33.8%, 2018-2020년 42.4%로 김정일 정권 시기에 비해 김정은 정권에서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본 조사에서 김정일 정권 10년 동안 주민의 식생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2021’ 보고서의 통계는 차이를 보인다.

7) FAO, 202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ome: FAO, 2021).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2021’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가임여성(15~49세)의 빈혈 발병률이 2012년 31.7%, 2019년 33.9%로 오히려 집권 초기에 비해 최근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 발병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고기섭취 빈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5〉에서 보이듯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고기 섭취 빈도는 더 높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녀 모두 동시에 고기섭취 빈도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초기(2011-14년)에 비해 중기(2015-1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고기 섭취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남성은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 두 번’ 고기를 섭취했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 39.5%에서 54.5%로 상승했고, 여성 역시 30.4%에서 48.2%로 크게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젠더 간 격차도 초기 9.1%p에서 중기 6.3%p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남녀 모두 고기섭취율이 상승했지만 대북제재 이전 시기(2015-17년)에 비해 두 격차가 6.3%p에서 10.6%p로 오히려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북제재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환경의 변화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젠더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의 식생활에 더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표 2-4〉 성별 고기섭취 빈도 (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

(단위: %)

성별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52)	2015-2017 (N=353)	2018-2020 (N=226)
남성		39.5	54.5	65.3
여성		30.4	48.2	54.7

## 2) 시기별 의생활의 변화

### 가. 의류 구입 횟수

북한주민의 의생활의 경우 양적인 평가를 위해 의류 구입 횟수를,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원산지와 구입처의 지표를 선택하였다. 먼저 의류 구입 횟수를 살펴보면,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정은 집권 기간 중 초기(2011-14년)보다 후기(2018-20년)로 갈수록 의류 구입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률은 초기 38.8%에서 중기(2015-17년) 56.6%로 크게 증가하였다. 후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률 22.0%와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률 51.1%로 나타나 옷 구입 횟수가 더 증가하였다. 식생활과 마찬가지로 의생활에서도 대북제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2-5〉 시기별 의류 구입 횟수

(단위: %)

구입횟수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52)	2015-2017 (N=355)	2018-2020 (N=227)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sup>a)</sup>		-	-	22.0
계절마다 한두 벌		38.8	56.6	51.1
1년에 한두 벌		37.0	29.9	21.1
몇 년에 한두 벌		17.4	9.9	5.3

구입횟수 \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52)	2015-2017 (N=355)	2018-2020 (N=227)
구매한 적이 없음 <sup>b)</sup>	6.8	3.7	1.1
전체	100.0	100.0	100.0

주: a)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항목은 2019년 조사부터 새로 포함됨.  
 b) '구매한 적이 없음' 항목은 2019년 조사부터 기존의 '남이 입던 옷을 입었다'와 '살 필요가 없었다' 항목을 합하여 재구성한 항목임.

### 나. 의류 원산지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산 의류의 소비가 계속 증가했다는 점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다. 구입한 의류의 원산지 중 북한산의 응답률은 초기(2011-14년) 5.6%에 불과했으나 중기(2015-17년) 10.4%로 증가했고 후기(2018-20년)에는 19.8%까지 증가하였다. 북한산 의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16년에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경공업의 국산화 정책으로 국산 의류 생산이 증가한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중국산 의류였다는 응답률은 초기 86.4%에서 중기 85.4%, 후기 7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2-6〉 시기별 옷 원산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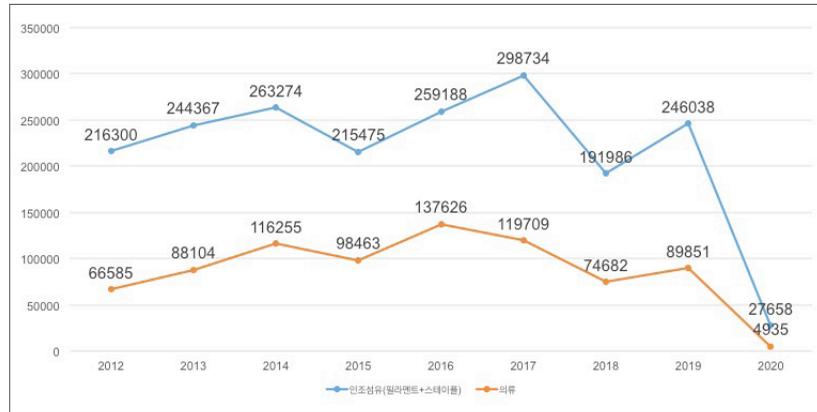
원산지 \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31)	2015-2017 (N=336)	2018-2020 (N=222)
북한산	5.6	10.4	19.8
중국산	86.4	85.4	75.7
남한산	4.1	2.7	3.2
일본산	3.2	1.2	0.9
기타 외국산	0.6	0.3	0.5
전체	100.0	100.0	100.0

중국산 의류 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북한산 의류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은 북한의 대중국 섬유 및 의류 수입 패턴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림 2-2〉에서 나타나듯 김정은 집권 초기와 중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섬유 및 의류의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섬유 수입 규모가 컸다. 섬유 수입 증가로 국내 의류 생산이 증가하였는데 생산된 의류 대부분은 다시 수출되었다. 하지만 일부 의류는 내수용으로 전환돼 북한산 의류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기에 대중 섬유 및 의류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유는 대북제재로 인해 2018년부터 의류 수출로가 막히면서 원자재 수입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의류 수출 시장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의류가 내수로 이동하면서 후기에는 오히려 국내산 의류 소비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김정은 집권 후기에 북한산 의류 소비 비중이 늘어난 데는 경공업의 국산화 정책과 함께 대북제재로 인한 의류 수출 급감으로 국산 의류의 내수 전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2〉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섬유 및 의류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 대외무역 자료를 토대로 저자 그림 작성.

### 다. 의류 구입처

의류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국영상점(직매점 포함)과 백화점(외화상점 포함) 등 전문상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의류의 유통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구입의 응답률은 초기(2011-14년) 93.0%에서 중기(2015-17년) 91.4%, 후기(2018-20년) 87.6%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에 백화점(외화상점 포함)의 경우는 초기와 중기에 각각 1.1%와 1.7%에 불과했으나 후기에 8.9%로 증가하였다. 이 변화는 소득 증가로 고가의 의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국가에서 공급(배급)하는 의류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의류 배급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영상점(직

매점 포함)의 비중은 초기와 중기까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후기에는 2.2%로 상승하였다. 이 변화는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사회주의상업을 복원하려는 정책 시도와 관련 있다. 경공업품 국산화 정책이 추진되고 국산 의류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영상점(직매점 포함)을 통한 국산 의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7〉 시기별 의류 구입처

(단위: %)

구입처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42)	2015-2017 (N=348)	2018-2020 (N=226)
시장 구입		93.0	91.4	87.6
국영상점(직매점 포함) <sup>a)</sup>		0.6	0.6	2.2
백화점(외화상점 포함) <sup>b)</sup>		1.1	1.7	8.9
국가공급		0.2	0.0	0.9
기타(해외직구 포함) <sup>c)</sup>		5.2	6.3	0.4
전체		100.0	100.0	100.0

주: a) 국영상점(직매점 포함) 항목은 2019년 조사 이전에는 국영상점과 직매점이 독립 항목이었으나 2019년 조사부터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2019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 데이터의 경우 두 항목의 결과를 합산하여 제시함.

b) 백화점(외화상점 포함) 항목은 2019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외화상점의 표기가 없었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외화상점의 표기가 병기됨. 이 표에서는 2019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백화점 항목의 결과를 백화점(외화상점 포함) 항목에 표기하였음을 밝힘.

c) 2019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해외직구 항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기타 항목이 없었으나 2019년 조사부터는 기타 항목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두 항목을 합쳐 재구성하여 표에 포함시켰으며 두 항목 중 어느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기타(해외직구 포함) 항목에 표기하였음을 밝힘.

### 3) 시기별 주거생활 변화

#### 가. 시기별 주택 유형

주택(살림집) 유형별 비중 변화는 북한주민의 주거생활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지위 상승의 상징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의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유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파트의 비중 변화는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연립주택<아파트>단독주택 순서로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집권 초기(2011-14년)에 비해 후기(2018-20년)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은 증가하고, 연립주택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초기에 아파트 24.1%, 연립주택 50.6%, 단독주택 20.8%였으나, 후기에는 아파트 27.3%, 연립주택 43.6%, 단독주택 22.9%로 변화하였다. 주택매매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산가치가 높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두 유형의 주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중앙통계국과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조사하여 발표한 '2014년 북한의 경제사회, 인구, 보건 조사'(이하 SDHS 2014)에 의하면, 북한의 유형별 주택 비중은 아파트 25%, 연립주택 41.7%, 단독주택 32.8%로 조사됐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가운데 양강도 거주자의 비중이 70.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SDHS 2014'에서 양강도 지역의 유형별 주택 비중을 보면 아파트 12.1%, 연립주택 68.5%, 단독주택 18.8%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SDHS 2014'의 양강도 지역의 유형별 주택 비

중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은 높고 연립주택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SDHS 2014'의 전체 지역의 유형별 주택 비중 결과와 비교해도 본 조사의 아파트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고, 연립주택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단독주택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표 2-8〉 시기별 주택 유형

(단위: %)

살림집 형태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53)	2015-2017 (N=355)	2018-2020 (N=227)
아파트		24.1	21.4	27.3
연립주택		50.6	43.7	43.6
단독주택		20.8	27.3	22.9
기타		4.5	7.6	6.1
전체		100.0	100.0	100.0

#### 나. 시기별 주택 마련 방법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일찍부터 주택은 사고파는 사실상 사유 재산과 같이 인식되고 취급되었다.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국가가 배정하고 임대하는 공공재였으나 시장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택은 개인들 간에 교환 가능한 사유재로서 뿌리내리고 있다.

주택 마련의 방법 가운데 돈주고 구입했다는 응답률은 초기(55.4%)에 비해 후기(65.6%)에 더 높아져 북한사회에서 주택 매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대로 국가에서 배정한 것이라는 응답률은

초기(2011-2014년)에 21.6%에서 계속 하락하여 후기(2018-2020년)에는 15.9%에 불과하다.

직접 살림집을 건축했다는 응답의 경우 중기(2015-2017년)에 12.3%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시기(2018-2020년)에는 4.8%까지 급감하였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건축자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민간의 살림집 건축 성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에서 평양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살림집 건설이 계속 이뤄졌고, 삼지연시나 함북 검덕지구와 같은 '본보기' 지역에서의 대규모 살림집이 건설되었고, 수해지역의 살림집 복구나 신축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가 배정한 살림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살림집 무상공급은 주로 평양시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정부 주도의 살림집 무상공급보다는 개인 간 주택매매를 통해 살림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2-9〉 시기별 주택 마련 방법

(단위: %)

방법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47)	2015-2017 (N=351)	2018-2020 (N=227)
국가 배정		21.6	20.2	15.9
돈주고 구입		55.4	50.7	65.6
직접 건축		7.1	12.3	4.8
상속 받음		13.7	14.5	11.0

방법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47)	2015-2017 (N=351)	2018-2020 (N=227)
친척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양도		2.2	2.3	1.8
기타		0.0	0.0	0.9
전체		100.0	100.0	100.0

### 다. 가구(household)의 내구재 보유

생활 개선은 살림집이 보유하고 있는 내구재의 변화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가구 내 내구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2019년 조사부터 포함되었다. 내구재 항목은 2017년 MICS의 지표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태양광패널의 경우는 MIC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본 조사에만 포함된 항목이다.

조사 결과, TV, 전기밥솥, CD재생기 및 녹화기, 집전화(유선), 이동전화, 자전거, 태양광패널 등의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오토바이 보유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전력 및 상수도과 같은 인프라 시설 접근성과 연계된 것으로 전력 부족과 상수도의 시설 낙후 등으로 냉장고와 세탁기의 보유율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모두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력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가 공급하는 전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주민은 태양광 패널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해당 항목이 처음 포함된 2020년 조사에서 가구 내 태양광패널

보유율이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의 개인 보유가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개별 가구의 오토바이 보유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전화 보유율은 2017년 기준 MICS의 이동전화 보유율(69.0%)에 비해 낮게 측정됐지만, 집전화(유선)의 보유율은 MICS의 45.2%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sup>8)</sup> 지방의 경우 이동전화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로 이동전화의 송수신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전화(유선)를 설치하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D재생기 및 녹화기와 같은 영상물과 관련된 기기의 보유율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영상물을 보는 기기 유형이 컴퓨터와 이동전화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10〉 시기별 가구 내 내구재 보유율

(단위: %)

연도	TV	냉장고	전기 밥솥	세탁기	CD 재생기, 녹화기 등	집전화 (유선)	이동 전화	컴퓨터	자전거	오토 바이	태양광 패널 <sup>a)</sup>
2018	88.6	30.7	69.3	18.4	81.6	56.1	60.5	39.5	53.5	22.8	-
2019	90.9	36.4	59.1	23.6	61.8	60.0	59.1	46.4	63.6	25.5	72.2

주: 2020년에 탈북한 사례수가 1명 밖에 없어 표에 포함하지 않음.

a) 태양광 패널은 2020년 조사에 처음 포함된 항목임.

김정은 정권 10년 간 중국으로부터 전자제품(전기기기, 음향영상설비, 부품 등) 수입 추이를 보면 〈그림 2-3〉에서 보이듯 2014년에 수입규모가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2017년까지 평균 3억 달러 이상의 전자제품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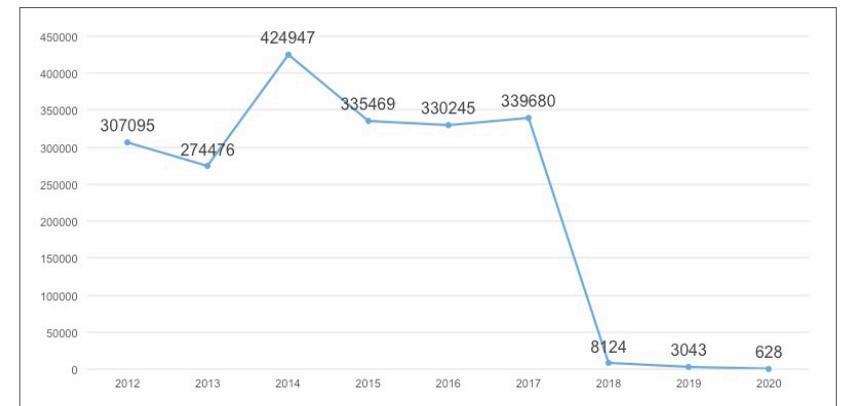
8)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UNICEF DPRK, June 2018).

입했다. 이와 같이 전자제품 수입 증가는 김정은 정권 10년 중 초기와 중기에 국내 전자제품 보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북제재 강화로 2018년부터 전자제품의 수입이 거의 중단되어 〈그림 2-3〉에서 나타나듯 2018년부터 전자제품 수입량이 매우 가파르게 하락하여 2020년에는 거의 바닥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표 2-10〉에서 보이듯 2018년과 2019년 전자제품 보유율을 보면, 일부 제품들(전기밥솥, 녹화기, 이동전화)의 보유율은 감소했으나 다른 일부 제품들(TV,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컴퓨터)은 오히려 보유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밀무역을 통해 전자제품이 계속 수입되고 있거나 아니면 중고제품의 시장 거래가 활성화돼 일부 전자제품들에서는 단기간 가구 단위 보유율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3〉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전자제품(전기기기, 음향영상설비, 부품)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kosis.kr/bukhan/>) 대외무역 자료를 토대로 저자 그림 작성.

## 2. 정보화의 진전

### 1) 이동전화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정보화는 ICT 기기의 대중적 보급으로 나타난다. ICT 기기 중에서 이동전화의 보유 수준은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동전화 보유 여부에 대한 문항은 2015년 조사부터 포함되었다. 2015~2018년 조사까지는 개인별 이동전화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고, 2019년 조사부터는 가구내 이동전화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개인별 보유율보다는 가구내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은 추세의 변화를 해석할 때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탈북 연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동전화 보유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2018년부터 대북제재로 인해 휴대전화 부품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이동전화 보유율이 61.2%로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보유율이 가구내 보유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가. 이동전화 보유 현황

〈표 2-11〉 이동전화 보유 현황

(단위: %)

탈북 연도 \ 보유	2014 (n=146)	2015 (n=135)	2016 (n=135)	2017 (n=85)	2018 (n=116)	2019 (n=110)
있다	55.5	45.9	44.4	43.5	61.2	56.4
없다	44.5	54.1	55.6	56.6	38.8	43.6

주: 2014~2017년까지는 개인별 보유율이고, 2018~2019년은 가구별 보유율임. 2020년에 탈북한 사례수가 1명 밖에 없어 표에 포함하지 않음.

북한 당국은 유엔에 제출한 VNR 2021 보고서에서 15-49세 연령의 인구에서 이동전화 보유율이 2017년 기준 남성 55.7%, 여성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보유율이 7.8%p 더 높다. 본 조사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으로 이동전화 보유율이 남성 64.1%, 여성 56.8%로 나타나 VNR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동전화 보유율이 7.3%p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조사를 통해 젠더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하지만 격차가 매우 큰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2-12〉 젠더별 가구내 이동전화 보유 현황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단위: %)

탈북 연도 \ 보유 유무	남성	여성
있다	64.1	56.8
없다	35.9	43.2
전체(N, %)	78(100.0)	146(100.0)

다음으로 연령대별 이동전화 보유 현황도 살펴보면, 2030세대의 이동전화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5060세대의 이동전화 보유율은 낮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응답자 경우 각각 71.8%, 79.1%가 이동전화를 보유하였으나, 40대 53.8%, 50대 36.7%, 60대 이상 15.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전화 보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 결과는 북한사회에서 정보상품을 소비하는 주요 집단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2030세대, 이른바 북한의 '청년세대'는 공교육 체계를 통해 정보기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ICT 활용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ICT 기기의 보유 욕구가 높으며, 정보문화 상품 소비에도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3〉 연령대별 가구내 이동전화 보유 현황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단위: %)

연령대 보유 유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있다	71.8	79.1	53.8	36.7	15.4
없다	28.1	20.9	46.2	63.3	84.6
전체(N, %)	71(100.0)	43(100.0)	39(100.0)	49(100.0)	13(100.0)

### 나. 이동전화 용도

북한주민들이 이동전화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는 정보상품 시장의 발전 방향 및 정보화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는데 유용하다. 이동전화 용도에 대한 설문 문항은 2019년 조사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두 해의 데이터만이 수집된 상태이다. 이동전화를 ‘장사나 사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52.9%에서 2019년 48.4%로 비중이 다소 감소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는 용도는 ‘일상적 대화나 소식 주고받기’로 2018년 34.3%, 2019년 35.5%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반면, ‘직장 등 공적 업무’ 응답은 2018년에는 0%였으나 2019년에 8.1%로 나타나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동전화를 ‘사진, 동영상 촬영 및 게임 오락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는 응답률은 2018년 12.9%에서 2019년 8.1%로 감소했다.

〈표 2-14〉 이동전화 용도

(단위: %)

용도	탈북 연도	2018 (n=70)	2019 (n=62)
장사나 사업		52.9	48.4
일상적 대화, 소식 교류		34.3	35.5
직장 등 공적 업무		0.0	8.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게임 등 오락용		12.9	8.1
전체		100.0	100.0

주: 2020년에 탈북한 사례수가 1명 밖에 없어 포함하지 않음.

앞서 이동전화 보유율에서 연령대별 이동전화 보유율이 큰 차이가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전화 용도 역시 연령대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전화를 주로 장사나 사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게임 오락용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76.2%가 이동전화를 장사나 사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응답률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40대의 경우<sup>9)</sup> 장사나 사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동전화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20대의 경우는 일상적 대화나 소식을 주고 받는 용도가 53.1%로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또는 게임 등으로 이동전화를 사용한 응답률도 20대가 18.4%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

9)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 경제활동 인구수는 30~39세 연령대가 가장 많았으며, 10년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40대의 경제활동 인구수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게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이동전화의 용도는 연령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러한 용도의 차이는 이동전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소비생활에서도 차이를 낳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의 IT 관련 기업소는 물론 여러 국가기관들에서 게임, 영화, 음악, 교육, 요리, 스포츠, 미용 등 다양한 문화정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또는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상품들의 주요 소비 타겟(target) 집단이 누구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표 2-15〉 연령대별 이동전화 용도 비교 (2018년, 2019년 통합 기준)

(단위: %)

용도 \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장사, 사업	28.6	58.8	76.2	68.4	100.0
일상적 대화, 소식 교류	53.1	26.5	23.8	15.8	0.0
직장 등 공적 업무	0.0	5.9	0.0	10.5	0.0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게임 등 오락용	18.4	8.8	0.0	5.3	0.0
전체(N, %)	49(100.0)	34(100.0)	21(100.0)	19(100.0)	2(100.0)

### 다. 이동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

은행과 같은 공식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북한사회에서 이동전화는 이미 일찍부터 사금융 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른바 ‘전화돈’이라고 불리는 소액의 이동전화 요금을 개인 간에 교환되고 있다. 멀리 있는 지인이나 가족 및 친인척 간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이동전화를 활용한 ‘전화돈’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종종 ‘전화돈’이

생일선물을 대신하기도 하고, 지인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전화요금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전화돈’을 이동전화로 넘겨주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2020년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4명 중에서 11.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사금융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2-16〉 이동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

(단위: %)

경험 \ 탈북 연도	2019 (n=54)
있다	11.1
없다	88.9

주: 2020년에 탈북한 사례수가 1명 밖에 없어 포함하지 않음.

## 2) 컴퓨터

북한의 정보화 진행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컴퓨터의 보유 및 이용, 그리고 소위 ‘컴퓨터망’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접근성이다. 먼저 컴퓨터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이동전화 보유 현황과 마찬가지로 2014~2017년까지는 개인별 보유율로 대체로 20%대 중후반의 보유율을 나타내며 2018년부터는 가구별 보유율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40.5%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2017년 MICS에서 밝힌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 18.7%와 비교했을 때 본 조사에서 파악된 컴퓨터 보유율은 높은 편이다.

가. 컴퓨터 보유 현황

〈표 2-17〉 컴퓨터 보유 현황

(단위: %)

탈북 연도 \ 보유	2014 (n=146)	2015 (n=135)	2016 (n=135)	2017 (n=85)	2018 (n=116)	2019 (n=110)
있다	27.4	22.2	25.9	23.5	40.5	39.5
없다	72.6	77.8	74.1	76.5	54.5	60.5

주: 2014~2017년까지는 개인별 보유율이고, 2018~2019년은 가구별 보유율임. 2020년에 탈북한 사례수가 1명 밖에 없어 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컴퓨터 이용 경험

김정은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필두로 한 교육개혁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을 통해 학교 교육은 물론 직업 및 사회 교육에서 정보기술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 정책은 정보산업시대 또는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정보화를 수행할 인적 자원의 재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주민의 컴퓨터 이용 경험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컴퓨터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은 2019년과 2020년 조사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컴퓨터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탈북 연도 기준으로 2018년 43.0%, 2019년 49.5%로 나타났다.

〈표 2-18〉 컴퓨터 이용 경험

(단위: %)

탈북 연도 \ 경험	2018 (n=114)	2019 (n=109)
있다	43.0	49.5
없다	57.0	50.5

컴퓨터 이용 경험은 젠더와 연령 변수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북한의 MICS 보고서에 따르면 젠더별 컴퓨터 이용경험은 15~49세 인구에서 여성 41.7%, 남성 51.0%로 나타나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60.3%)이 여성(38.6%)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컴퓨터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ICS 경우는 15~49세 연령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20~60대 이상의 연령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두 조사 결과 모두 남성 우위의 젠더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표 2-19〉 젠더별 컴퓨터 이용 경험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단위: %)

탈북 연도 \ 경험	남성	여성
있다	60.3	38.6
없다	39.7	61.4
전체(N, %)	78(100.0)	145(100.0)

연령대별 컴퓨터 이용 경험은 훨씬 더 선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2030 세대의 경우 컴퓨터 이용 경험이 각각 60.6%, 53.5%로 나타나 이용 경험

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40대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이용 경험률은 급격히 줄어들어 40대 48.7%, 50대 20.0%, 60대 이상 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컴퓨터 이용 경험의 응답률 차이의 발생은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 기회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기술 교육 기회의 차이에 의해 세대 간 컴퓨터 이용 경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컴퓨터 이용 경험의 격차는 세대 간 디지털 문해력(literacy)의 격차로 이어진다.

〈표 2-20〉 연령대별 컴퓨터 이용 경험 비교 (2018년과 2019년 통합데이터 기준)

(단위: %)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험					
있다	60.6	53.5	48.7	20.0	0.0
없다	39.4	46.5	51.3	80.0	100.0
전체(N, %)	71(100.0)	43(100.0)	39(100.0)	50(100.0)	12(100.0)

### 다. 컴퓨터 이용 장소

컴퓨터의 이용 장소는 북한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조사 결과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컴퓨터 이용을 도서관, 학교, 직장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보다는 본인의 집이나 이웃, 친척, 친구의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는 응답률이 2018년 2.0%에서 2019년 13.2%로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이용 접근성과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했다는 응답률은 2018년 83.7%에서 2019년 79.2%로 소폭 감소했다. 이웃이나 친척, 친구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했다는 응답률 역시 2018년 14.3%에서 2019년 7.5%로 크게 감소했다. 이 결과는 가구내 컴퓨터 보유율 증가로 개인들 사이에서 컴퓨터 공유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북한에서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이용 접근성과 개방성은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가구의 PC 보유가 높아지는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표 2-21〉 컴퓨터 이용 장소

(단위: %)

장소	탈북 연도	2018 (n=49)	2019 (n=53)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2.0	13.2
본인의 집		83.7	79.2
이웃, 친척, 친구의 집		14.3	7.5
전체		100.0	100.0

## 3) 인트라넷

### 가. 인트라넷 이용 경험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전국의 모든 기관과 기업소, 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이 컴퓨터망으로 연결되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북한의 컴퓨터망을 이용한 경험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북한의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북한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인터넷이

아닌 '광명망'이라고 하는 컴퓨터망으로 인트라넷이다. 컴퓨터망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주요 기업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자료(특히, 과학기술자료)가 DB화되고 있고, 자료의 검색 및 열람 그리고 내려받기, 채팅, 메일, 온라인 게임, 쇼핑, 커뮤니티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트라넷 이용 경험을 묻은 결과 가장 최근인 2019년에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 경험률이 50%에 육박하는데 비해 인트라넷 이용 경험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북한주민 대부분이 네트워크 접속이 되지 않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것은 북한의 정보화 진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표 2-22〉 시기별 인트라넷 이용 경험 변화

(단위: %)

경험	탈북 연도	2014 (n=146)	2015 (n=134)	2016 (n=134)	2017 (n=85)	2018 (n=116)	2019 (n=110)
있다		10.3	8.2	5.2	5.9	6.9	8.2
없다		89.7	91.8	94.8	94.1	93.1	91.8

주: 2020년에 탈북한 사례수가 1명 밖에 없어 표에 포함하지 않음.

### 나. 인트라넷 이용 장소

사실상 인트라넷을 이용했다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트라넷을 이용하는 장소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네트워크 접근성과 개방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인트라넷을 도서관, 학교, 직장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의 인트라넷과 같은 정보망 구축과 보급이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사적 공간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VNR 2021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교육용 인트라넷 접근 가능 학교 비율이 2015년 80%, 2017년 100%, 2020년 100%인 것으로 밝혔다. 반면, 2017년 MICS에 따르면 집에서 인트라넷 접속률은 1.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 두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정보망 구축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가구내 컴퓨터 보유율이나 컴퓨터 이용율에 비해 인트라넷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네트워크의 개방성이 매우 낮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은 재정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아지면 전체주의체제에서 사회통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표 2-23〉 인트라넷 이용 장소

(단위: %)

장소	탈북 연도	2014 (n=14)	2015 (n=11)	2016 (n=6)	2017 (n=5)	2018 (n=8)	2019 (n=8)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직장)		57.1	63.6	50.0	40.0	100.0	62.5
본인의 집		7.1	9.1	0.0	0.0	0.0	25.0
민간시설 (상업시설 포함)		28.6	0.0	50.0	60.0	-	-
이웃, 친척, 친구의 집		7.1	27.3	0.0	0.0	0.0	12.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민간시설(상업시설 포함)' 항목이 2017년까지 포함되었으나 2018년부터 미포함됨.

### 3. 계층별 의식주 생활 비교

#### 1) 계층 구성의 변화

계층별 생활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표본의 계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별로 구성의 변화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계층 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이다. 10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층의 응답률은 초기(2011~2014년) 6.0%, 중기(2015~2017년) 10.2%, 후기(2018~2020년) 12.8%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면 중층의 응답률은 초기 64.3%, 중기 62.9%, 후기 61.5%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흥미롭게 하층의 응답률 역시 초기 29.7%, 중기 26.9%, 후기 25.7%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북한의 MICS에 포함된 재산지수(Wealth Index)의 경우 상위 40%, 중위 50%, 하위 20%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조사 표본의 중층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계층 구성의 결과는 이 조사의 표본 구성의 특수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 조사의 표본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1년 미만이 소요된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 표본의 계층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탈북과 입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탈북 비용을 요구하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재북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주민들이 단기간 탈북과 입국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 표본의 계층 구성에서 중층의 비중이 현지 계층 구성에 비해 과대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층은 증가하는

반면 중층과 하층은 감소하는 이유는 탈북 비용의 증가로 인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층과 하층의 탈북민의 수는 감소하고 대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층의 탈북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추론일 수 있다.

〈표 2-24〉 시기별 계층 구성 (탈북 전 1년 기준)

(단위: %)

계층 구분	시기	탈북 연도		
		2011-2014 (N=549)	2015-2017 (N=353)	2018-2020 (N=226)
상층		6.3	10.2	12.8
중층		64.3	62.9	61.5
하층		29.7	26.9	25.7
전체		100.0	100.0	100.0

일반적으로 계층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이 있다. 우선, 계층별 소득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계층 지위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도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그리고 7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던 전후 시기인 중기를 기점으로 계층 간 소득 수준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소득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상층의 경우 ‘100만원 초과’ 소득 구간의 비중이 초기 48.4%였으나 중기에 31.4%로 크게 감소하고 후기에는 32.1%로 중기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에 중층의 경우는 ‘100만원 초과’의 소득구간의 비중이 초기에 16.5%에서 중기에 23.0%로 크게 상승하였고, 후기에는 22.4%로 중기의 비중을 비슷하게 유지했다. 하층

의 경우 역시 '0~1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의 비중이 초기에는 60.9%로 매우 높았으나, 중기에 40.0%로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7차 당대회의 개최 전후 시기인 중기에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소 조정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8년을 기점으로 계층 간 소득 변화를 보면, 상층과 중층의 고소득 비중은 중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하층의 경우는 고소득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같은 시기 하층에서 저소득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대북제재 강화라는 외생변수가 계층 간 다소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대북제재가 강화된 후기에 상층의 경우 저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중소득과 고소득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층의 경우는 저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중소득과 고소득이 감소하여 상층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냈다. 하층의 경우는 저소득의 비중이 다시 늘어났고, 특히 중소득이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이 결과는 대북제재가 계층별 소득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상층보다는 중층과 하층 주민의 소득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표 2-25〉 시기별 계층과 월평균 (비공식)소득 비교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1~2014년 (n=522)	0원~10만원 이하	22.6	27.9	60.9
	1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29.0	55.6	36.4
	100만원 초과	48.4	16.5	2.6
2015~2107년 (n=352)	0원~10만원 이하	34.3	28.8	40.0
	1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34.3	48.2	53.7
	100만원 초과	31.4	23.0	6.3
2018~2020년 (n=216)	0원~10만원 이하	28.6	35.1	48.1
	1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39.3	42.5	42.6
	100만원 초과	32.1	22.4	9.3

다음으로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 구성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계층이 상승하기 때문에 교육이 계층상승의 주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직업의 경우 블루칼라 노동자보다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더 높은 계층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직업 및 교육 수준과 계층 간의 지위불일치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표 2-26〉에 나타나듯, 상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업은 외화별이(19.2%)>장사(12.6%)>학생(11.0%)>사무원(9.5%)과 전문직(9.5%)>노동자(6.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업은 외화별이(76.9%)>사무원(69.5%)>학생(68.5%)>전문직(68.3%)>노동자(63.7%)>기타(63.5%) 순으로 나타났다. 하층의 경우는 농민이 64.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노동자(29.5%)>가정부인(28.2%)>군인(25.9%)>기타(5.0%)>장사(24.4%)>전문직(22.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적으로 상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직업이 무역업 종사자를 비롯해 장사, 학생 직업이라는 결과는 일반 자본주의사회와는 매우 다른 분포 결과이다. 중간계급을 대표하는 직업군인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사무원과 전문직의 경우 대체로 중층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하층의 비중도 각각 21.1%, 22.2%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의 경우는 대다수가 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직업별 계층 분포

(단위: %, N=1,120)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직	학생	군인	외화별이	장사	가정부인	기타
상층	6.7	2.9	9.5	9.5	11.0	14.8	19.2	12.6	8.2	6.5
중층	63.7	32.9	69.5	68.3	68.5	59.3	76.9	63.0	63.5	68.5
하층	29.5	64.3	21.1	22.2	20.5	25.9	3.8	24.4	28.2	25.0
전체	342 (100.0)	70 (100.0)	95 (100.0)	63 (100.0)	73 (100.0)	54 (100.0)	26 (100.0)	135 (100.0)	170 (100.0)	92 (100.0)

교육 수준별 계층 분포를 보면 상층에서는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난 반면, 중층과 하층에서는 교육수준과 계층 간의 지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2-27〉에서 보이듯, 교육수준별 상층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대학교 이상 8.9%, 전문학교 11.2%, 중학교 7.8%, 소학교 13.6%, 무학 12.5%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다고 상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교육수준별 중층의 비중은 대학교 이상 69.6%, 전문학교 67.4%, 중학교 62.2%, 소학교 50.0%, 무학 25.0%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층의 비중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로 하층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하층의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7〉 교육 수준별 계층 분포

(단위: %, N=1,121)

	대학교 이상	전문학교	중학교	소학교	무학
상층	8.9	11.2	7.9	13.6	12.5
중층	69.6	67.4	62.2	50.0	25.0
하층	21.5	21.4	29.9	36.4	62.5
전체	135 (100.0)	187 (100.0)	769 (100.0)	22 (100.0)	8 (100.0)

## 2) 계층별 의식주 생활

### 가. 계층별 식생활 비교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층 간 식생활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계층별 주식의 곡물배합을 보면, 집권 초기(2011~14년)에 상층과 중층은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상층 90.9%, 중층 53.1%), 하층은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50.0%)로 나타나 주식에서의 계층 간 양

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층과 중층 간에도 응답률의 격차가 37.8%p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기(2015~17년)에는 상층과 중층의 격차는 크게 좁혀져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의 응답률이 상층 86.1%, 중층 60.2%로 두 응답의 격차가 25.9%p로 좁혀졌다. 하층의 경우도 여전히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응답률이 36.8%로 이전 시기의 응답률(50.0%)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후기(2018~19년)에도 여전히 세 계층 모두에서 식생활이 계속 개선되었다.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이 상층 88.9%, 중층 76.1%로 이전 시기에 비해 두 계층 모두 상승했고, 하층의 경우도 가장 응답이 많은 항목이 이전의 두 시기 모두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에서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의 응답으로 바뀌어 하층에서의 식생활 개선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하층에서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50.0%→36.8%→14.3%로 크게 감소하였다.

상층에 비해 중층의 식생활 개선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53.1%→60.2%→76.1%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상층의 경우는 같은 항목의 응답률이 90.9%→86.1%→88.9%로 높은 수준에서 약간 불안정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28〉 계층별 주식의 곡물배합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1~2014년 (n=545)	거의 입쌀로만	90.9	53.1	16.9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	3.4	5.0
	입쌀과 강냉이 반반	6.1	21.6	13.8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0.0	11.1	14.4
	거의 강냉이로만	3.0	10.8	50.0
2015~2107년 (n=352)	거의 입쌀로만	86.1	60.2	25.3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2.8	11.3	10.5
	입쌀과 강냉이 반반	5.6	14.0	18.9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5.6	10.9	8.4
	거의 강냉이로만	0.0	3.6	36.8
2018~2019년 (n=226)	거의 입쌀로만	88.9	76.1	39.3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0.0	7.0	17.9
	입쌀과 강냉이 반반	5.6	7.0	10.7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5.6	5.6	17.9
	거의 강냉이로만	0.0	4.2	14.3

주: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항목과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은 2014년부터 포함됨.

다음으로 계층별 고기섭취 빈도를 살펴보면, 초기(2011~14년)에 비해 중기(2015~17년)에 세 계층 모두에서 고기섭취 빈도가 증가하였다. 초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상층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51.5%), 중층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46.9%), 하층의 경우 ‘일 년에 한두 번’(53.1%)으로 계층 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기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 상층과 중층이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상층 52.8%, 중층 44.1%)으로 같아졌는데, 중층의 고기섭취 빈

도가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상층과 중층의 고기섭취 격차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층의 경우도 이전 시기와 달리 ‘한 달에 한두 번’(47.4%)으로 고기섭취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중층에 중층의 고기 섭취 빈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에 중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고기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도 중층과 하층의 고기섭취 빈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에 상층의 경우는 소폭 하락한 점이 특이점이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비교했을 때 상층과 중층은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으나 상층은 이전시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중층은 오히려 큰폭으로 증가한 차이점이 있다. 하층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두 번’ 응답이 50.0%로 이전 시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중층과 하층의 식생활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식생활에서 대북제재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29〉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1-2014년 (n=547)	거의 매일	33.3	10.2	0.6
	일주일에 한두 번	51.5	32.1	6.2
	한 달에 한두 번	12.1	46.9	37.0
	일 년에 한두 번	3.0	10.8	53.1
	먹은적 없음	0.0	0.0	3.1
2015-2017년 (n=351)	거의 매일	36.1	15.9	2.1
	일주일에 한두 번	52.8	44.1	13.7
	한 달에 한두 번	8.3	34.5	47.4
	일 년에 한두 번	2.8	4.5	32.6
	먹은적 없음	0.0	0.9	4.2
2018-2019년 (n=225)	거의 매일	27.6	14.5	3.4
	일주일에 한두 번	48.3	53.6	22.4
	한 달에 한두 번	20.7	28.3	50.0
	일 년에 한두 번	3.4	3.6	24.1
	먹은적 없음	0.0	0.0	0.0

나. 계층별 의생활 비교

정권 초기(2011-14년)에 비해 중기(2015-17년)에 세 계층 모두에서 의류 구입 빈도가 증가하였다. 초기에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의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률은 상층 81.8%, 중층 47.6%, 하층 11.2%로 계층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중기에는 동일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상층 88.9%, 중층 64.9%, 하층 24.2%로 세 계층 모두에서 이전 시기 대비 응답률이 모두 상

승했다. 앞서 시기별 고기섭취 빈도에서 중기에 중층에서 상대적으로 고기 섭취 빈도가 이전 시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기의 의류 구입 빈도 역시 초기 대비 중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에 비해 중기에 나타난 높은 소득 증가가 중층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의 생활의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조사부터는 의류 구입 빈도의 선택항목에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그 이전 시기들의 응답률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항목과 ‘계절마다 한두 벌’ 항목을 합한 응답률을 보면 상층 82.1%, 중층 79.7%, 하층 51.7%로 나타나 중기에 비해 후기에 상층은 감소한 반면 중층과 하층의 응답률은 크게 증가하여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줄어들었다.

앞서 고기 섭취 빈도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시기인 후기에 중층과 하층은 이전 시기에 비해 의류 구입 빈도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상층에서만 이전 시기에 비해 의류 구입 빈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로 인해 상층에 비해 중층과 하층의 소득이 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에 이어 의생활에서도 후기에 중층과 하층의 의류구입 빈도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2-30〉 계층별 의류 구입 빈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1~2014년 (n=547)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sup>a)</sup>	-	-	-
	계절마다 한두 벌	81.8	47.6	11.2
	1년에 한두 벌	12.1	39.1	37.9
	몇 년에 한두 벌	3.0	11.0	32.9
	구매한 적 없음 <sup>b)</sup>	3.0	2.2	18.0
2015~2017년 (n=353)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sup>a)</sup>	-	-	-
	계절마다 한두 벌	88.9	64.9	24.2
	1년에 한두 벌	11.1	28.4	41.1
	몇 년에 한두 벌	0.0	5.9	23.2
	구매한 적 없음 <sup>b)</sup>	0.0	1.0	11.6
2018~2019년 (n=224)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sup>a)</sup>	35.7	26.1	6.9
	계절마다 한두 벌	46.4	53.6	44.8
	1년에 한두 벌	10.7	17.4	36.2
	몇 년에 한두 벌	7.1	2.9	10.3
	구매한 적 없음 <sup>b)</sup>	0.0	0.0	1.7

주: a)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항목은 2019년 조사부터 새로 포함됨.

b) ‘구매한 적이 없음’ 항목은 2019년 조사부터 기존의 ‘남이 입던 옷을 입었다’와 ‘살 필요가 없었다’ 항목을 합하여 재구성한 항목임.

#### 다. 계층별 주거생활 비교

계층에 따라 주거하는 살림집의 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중층은 연립이 약간 우세 속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으며, 하층은 압도적으로 연립주택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상층의 살림집 형태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집권 초기(2011-14년)에는 아파트(45.5%)>단독주택(39.4%)>연립주택(9.1%) 순으로 살림집 형태의 비중이 나타났으나, 중기(2015-17년)에는 단독주택(47.2%)>아파트(27.8%)>연립주택(25.0%) 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의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간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강화된 시기(2018-2019년)에는 다시 아파트(34.5%)>연립주택(34.5%)>단독주택(20.7%) 순으로 살림집 형태의 비중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다.

반면 중층과 하층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살림집 형태별 약간의 비율 증감이 있었지만 살림집 형태별 비중의 순위 변경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31〉 계층별 살림집 형태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1~2014년 (n=549)	아파트	45.5	25.5	16.6
	연립주택	9.1	48.7	63.8
	단독주택	39.4	21.0	16.0
	기타	6.1	4.8	3.73
2015~2017년 (n=353)	아파트	27.8	23.0	14.7
	연립주택	25.0	42.3	54.7
	단독주택	47.2	28.8	16.8
	기타	0.0	5.9	13.7
2018~2019년 (n=226)	아파트	34.5	29.5	17.2
	연립주택	34.5	37.4	56.9
	단독주택	20.7	26.6	15.5
	기타	10.3	4.3	8.6

다음으로 계층별 살림집 장만방법을 분석해보면, 중층과 하층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국가 배정의 살림집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상층은 반대로 국가 배정의 살림집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9.4%→11.1%→17.2%)를 보여서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정권에서 살림집(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신축 살림집(아파트)이 상층을 중심으로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층의 경우는 다른 계층에 비해 직접 건축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초기에 18.8%에서 중기에 25.0%로 증가하였다.

살림집을 '돈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의 비중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상층의 경우 초기 59.4%에서 후기 75.9%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층과 하층의 경우 역시 초기에 각각 60.5%, 44.2%에서 후기에 각각 66.2%, 58.6%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 응답결과를 통해 북한에서 살림집은 모든 계층에서 사고 팔리는 개인의 자산(사유재산)으로 인식되고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32〉 계층별 살림집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1~2014년 (n=542)	국가 배정	9.4	19.6	28.2
	돈 주고 구입	59.4	60.5	44.2
	직접 건축	18.8	5.5	8.6
	상속받음	12.5	12.7	16.0
	친척 또는 주변으로부터 양도	0.0	1.7	3.1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5~2017년 (n=349)	국가 배정	11.1	19.2	25.5
	돈 주고 구입	52.8	54.3	41.5
	직접 건축	25.0	11.9	8.5
	상속받음	11.1	13.7	18.1
	친척 또는 주변으로부터 양도	0.0	0.9	6.4
2018~2019년 (n=226)	국가 배정	17.2	13.7	20.7
	돈 주고 구입	75.9	66.2	58.6
	직접 건축	0.0	5.8	5.2
	상속받음	6.9	10.8	13.8
	친척 또는 주변으로부터 양도	0.0	2.2	1.7
	기타	0.0	1.4	1.7

살림집 내에 보유하고 있는 내구재 또는 가구 자산에 대한 실태 파악은 2019년 조사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기별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10년 중 후기(2018~19년)에 속하는 두 해의 통합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층별 살림집 내구재(또는 가구 자산)를 비교하고자 한다.

모든 계층에서 TV의 보유율은 모든 내구재(또는 가구 자산)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탁기는 모든 계층에서 보유율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TV, 전기밥솥, 세탁기, 집전화, 자전거, 태양광패널은 상층과 중층간의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으나, 냉장고, 이동전화, 컴퓨터, 오토바이는 상층이 중층보다 보유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 상층과 중층을 구별짓는 지표 역할을 한다. 가축과 텃밭은 중층과 하층에서의 보유율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살림집 형태와 주거 지역(특히, 농촌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율이 50% 이상인 항목의 수를 비교해 보면, 상층의 경우 총 13개 중에서 9개이고, 중층의 경우는 총 13개 중에서 7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층의 경우는 총 13개 중에서 단 3개의 항목-TV, CD재생기(녹화기), 태양광 패널-에 불과하여 상층과 중층에 비해 하층의 생활수준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3〉 계층별 살림집 내구재(가구 자산) 보유율

(단위: %, N=224)

구분	상층	중층	하층
TV	96.4	92.8	79.3
냉장고(냉동고 포함)	50.0	38.4	13.8
전기밥솥	71.4	70.3	46.6
세탁기	28.6	22.4	13.8
CD재생기(녹화기 포함)	67.9	81.2	51.7
집전화	64.3	68.1	29.3
이동전화	78.6	68.1	31.0
컴퓨터	60.7	47.8	22.4
자전거	64.3	61.6	48.3
오토바이	42.9	28.3	5.2
가축	25.0	35.5	36.2
텃밭	35.7	47.8	41.4
태양광 패널 <sup>a)</sup>	81.8	80.9	50.0

주: a) 태양광패널 항목은 2020년 조사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응답한 사례수는 109건임.

## 4. 결론

김정은 집권 10년을 초기(2011~14년), 중기(2015~17년), 후기(2018~2020년)로 나누어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세 시기에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집권 10년 내내 양적 그리고 질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식생활은 양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질적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주식에서 쌀과 밀가루 소비 증가로 인해 김정은 정권은 올해 하반기 쌀, 밀, 보리 위주의 곡물생산구조로 농업정책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류 소비 역시 초기에 비해 중기,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구입 횟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산 의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공업의 국산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산 경공업품의 생산 증가는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국영상점이나 직매점과 같은 사회주의상업망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현상도 포착되었다.

2019년 조사부터 포함된 살림집 내 내구재 보유 현황을 보면 저소득 개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전제품의 보유율이 비교적 높고 대부분의 내구재 보유율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내구재 수입 확대 및 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의 증가, 그리고 태양광패널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국가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 증가가 주목

할 만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 증가는 국가의 정보화 정책, 정보기술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경제활동에서 정보화기기의 활용성 증가, 체면 중시 및 과시 소비와 같은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초기에서 중기 시기로 넘어가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이 변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4.15 열병식에서 했던 대중연설에서 공표한 ‘인민생활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의 이행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은 36년 만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근미래에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성장세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및 하노이회담 결렬과 같은 대외 환경의 악화가 후기의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의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후기(2018~2020년)에도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는 대체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 조사 분석결과 나타났다. 식생활의 경우 대북제재가 강화된 후기 시기에도 쌀 소비량과 고기 섭취 빈도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정보통신기기 보유율도 계속 상승했으며, 대부분의 내구재 보유율도 증가하였다. 다만,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중기에 비해 후기에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 상층에 비해 중층과 하층의 소득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 시기 소득 감소가 해당 계층의 의식주 생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계층 간 불평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산층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김정은 10년 동안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는데, 특히 중층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층의 소득 증가가 생활에 미친 영향은 의식주 생활 지표 개선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중층의 식생활 경우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초기 53.1%→중기 60.2%→후기 76.1%로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동안 상층(초기 90.9%, 중기 86.1%, 후기 88.9%)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이러한 패턴은 고기섭취 빈도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의생활에서도 중층의 약진으로 중기에 상층과 중층 간에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의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률은 초기에 상층 81.8%, 중층 47.6%로 큰 격차를 보였으나 중기에는 동일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상층 88.9%, 중층 64.9%고 상층에 비해 중층의 상승률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계에서 시장 의존률이 높은 중하층의 경우 방역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과 같은 기초 식료품의 수입 급감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북한당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식량긴장’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공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앙당 차원에서 육아정책이 논의되고 국가 부담으로 전국의 아이들에게 젓제품을 공급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내려진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식량을 비롯해 생필품의 수입이 크게 줄고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지

고 있다.

FAO가 올해 9월과 12월에 발표한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와 4분기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44개의 국가들 가운데 북한이 포함되었다.<sup>10)</sup>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많은 지역의 식량 불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외무역의 축소 및 경제 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매우 빈약한 식단으로 인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기술하며, 그 원인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제한 조치로 인해 농업 투입재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다행히 올해 국내 곡물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북한주민의 식량안보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469만톤으로 추정했는데, 이 생산량은 지난해 440만톤에 비해 29만톤(7%)이 증가한 것이다.<sup>11)</sup> 하지만 대북제재,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과 같은 외생변수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내 곡물생산량 증가만으로는 북한주민의 생활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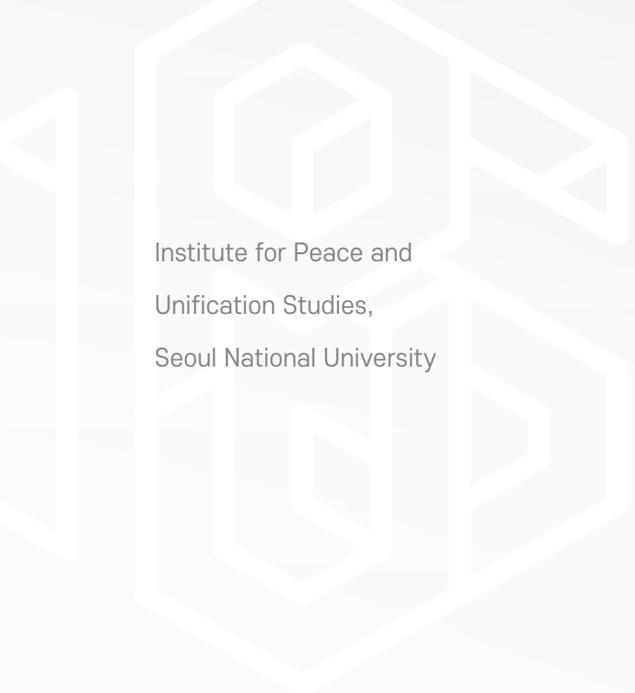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국경봉쇄 해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개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10)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 Quarterly Report No. 3* (Rome: FAO, September 2021);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 Quarterly Report No. 4*, (Rome: FAO, December 2021).

11) 식약일보,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식약일보, 2021년 12월 17일, <http://www.kfdn.co.kr/54983>.

서 중하층 주민들의 경우 보유 현금의 고갈 및 소득 감소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력자본과의 접근도에 따라 경제자원의 분배가 차등화되는 북한 사회의 위계 구조 속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긴급하게 요청된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경제 - 소득과  
지출**

## 제3장

# 경제 - 소득과 지출

| 이종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sup>12)</sup>

## 1. 서론

2010년대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 특히 주민들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지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제재 강화 이전인 2016년까지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2%로 아주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 물량은 연평균 15.9%, 수입 물량은 5.4%로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에 비해 대외 경제의 규모 확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민, 김민정; 2021)<sup>13)</sup>. 특히 산업용 소재 및 대부분의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기업의 생산과 주민들의 소비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홍제환, 2021)<sup>14)</sup>. 또한, 영양 및 보건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대에 이어 2010년대에도 상당한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규

12) 본 장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소속 기관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13) 이종민 · 김민정, “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 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제 2022-9호 (2022).

14) 홍제환 · 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KINU 연구총서』 21-13 (2021): 133-143.

철, 2020)<sup>15)</sup>.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평가가 엇갈리는 2010년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인 수량적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0년 간의 북한사회변동 조사 자료 중 그 동안 많이 주목되지 못했던 주민 소득과 지출 실태를 종합하여 생활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 응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하여 대안적인 소득 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심화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요약 지표를 통해 시기적 추세를 볼 뿐 아니라 개인별 정보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생활 수준 격차와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2011년 12월부터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었고 조사가 2011년 이후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상 평가이기도 하다. 또한 2010년대 북한 경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역시 대북제재 강화 이후의 변화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분야별 연구에서 공통적인 시기 구분에 따라 탈북 시기별로 김정은 집권 초기(2011-14년), 7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한 중기(2015-17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시기(2018-20년)<sup>16)</sup>의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생활 수준 변화를 살펴본다. 단, 소득 자료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3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초기 시기가 2013-14년으로 설정되었다. 2020년 이후 탈북민이 조사에 1명 밖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15) 김규철,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0-04 (2020): 64-66.

16)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직접적 제재,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의 대북제재 강화는 2017년 시작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재 강화가 완료되어 전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준으로 대북제재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발생 이후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장은 주로 2013-19년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다룬다.

## 2. 북한 주민들의 소득 추이 및 개인 특성과의 상관관계

이 절에서는 2012~2020년 중 수행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개인의 소득 관련 응답을 종합하여 최근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현금 소득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응답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여 북한 사회의 소득 분화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 소득 관련 설문은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는데<sup>17)</sup>, 이 두 가지 부문별 소득을 비교하여 북한 주민 생활에서 각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 다룰 소득 자료의 분석 대상은 전체 1,241명의 응답자 중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873명으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2010년대 초반 탈북민의 소득자료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북한 당국은 구권과 신권을 100: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였고 이어진 화폐 증발 등으로 인해 화폐개혁 직후부터 북한 장마당 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고 2013년에 와서야 진정되어 이후로는 장마당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010년대 초

17) 여기에서 공식 소득은 ‘공식 직장에 나가서 국가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의미하며, 비공식 소득은 ‘장사나 공식 직장 외 다른 부업(더벌이)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반에 북한을 탈출한 응답자의 소득자료는 이후 시기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sup>18)</sup> 이에, 탈북 시점 기준 2012년 이전의 자료는 소득 관련 분석에서 배제하였으며,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sup>19)</sup>

분석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넘어가려 한다. 첫째, 설문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여러가지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소에서 노동의 대가로 일부 현금 대신 현물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생산한 물건을 필요한 다른 물품과 교환하는 등의 현물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소득 금액 조사 시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탈북 직전의 월 소득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위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오차들은 임의로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가 요구된다.

둘째, 평균소득은 소수의 극단값(outlier)에 의해 매우 불안정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소득자료는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갖는(right-skewed) 분포를 갖으며 평균소득은 중위소득보다 높게 위치한다. 북한 역시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득이 낮을 것이지만 무역 등 외화벌이

18) 포괄적인 물가 정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국가라면 명목소득을 물가지수(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 소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실질소득 추이를 통해 생활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의 거래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계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변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19) 2011~19년 중 북한 장마당의 연평균 대 달러 환율 및 쌀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북한원/달러)	3,173	5,306	8,326	8,020	8,384	8,187	8,068	8,130	8,126
쌀 가격(북한원/kg)	2,358	4,521	5,741	4,944	5,198	5,205	5,315	4,891	4,649

자료 : 데일리 NK

사업에 깊이 관여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부는 상당히 높은 소득을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본 조사의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소수의 고소득자가 일부만 포함되어도 평균 소득은 상당히 높게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소득의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면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월 소득의 대표값으로 평균과 중앙값을 함께 제시하며,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중앙값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셋째, 전체 북한 주민과 구분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으로 인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거주 당시 공식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탈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공식 시스템의 외부에서 정보 획득이 원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탈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탈북민의 특성은 소득 구성에서 공식 소득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과소 추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 편중도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장에서 전체 표본 873명 중 함경북도, 양강도 출신은 756명으로 대부분(86.2%)을 차지한다<sup>20)</sup>.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소규모 밀수 또는 수입 물품 유통 등 대외 경제에 기반한 비공식 경제활동 기회가 많을 수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또한 중심 지역인 수도권 대비 약할 수 있어 비공식 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개연성이 크다.

20) 참고로 북한 전체 인구 대비 함경북도, 양강도의 인구 비율은 2008년 UN 인구 센서스 기준 13.0%로 본 조사의 표본 구성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 가) 소득의 구성과 추이

〈표 3-1〉은 2013년 이후 탈북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부문별(공식/비공식) 유소득 비율과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응답자 중 비공식 부업활동에서 소득이 있었던 비율은 76.9%로 공식 직장에서의 유소득 비율(42.3%)보다 3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한정하여 월소득의 중간값을 계산해본 결과, 비공식 부문이 북한 돈 50만원으로 공식 소득(2천원)에 비해 약 250배 높았고, 평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업에서의 소득이 약 171만원으로 공식 직장의 월급(8만원)보다 21.1배 높게 나타났다. 즉, 북한 주민들은 현금 소득의 대부분을 비공식부문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Kim, 2017; 정은미, 2015)<sup>21)</sup>.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응답에는 현물 소득이 제외되어 있으며, 현물 지급은 비공식부문보다는 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박영자 외 (2016) 등 북한 기업 운영 실태에 대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소들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월급 이외에 현물 배급을 지급하거나 해당 기업의 생산 현물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또한, FAO 등

21)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7집 제2호 (2015): 74-109;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2) 예를 들어, 양강도의 대표적인 광업기업소인 해산청년광산의 경우 중국과의 합영으로 운영되어 대북 제재 강화 이전까지 배급이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노동자 1인당 한 달에 중국 돈 150위안 수준의 식용유와 밀가루가 배급된다고 한다. (출처: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KINU연구총서』 2016-10 (2016): 86-88.)

국제기구조사단의 2012년 방북 조사(CFSAM 2012)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수급에서 배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조사된 바 있다.<sup>23)</sup> 이러한 정황들은 공식 부문의 소득에서 현금보다 현물 지급의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고려하면 <표 3-1>에 요약된 공식 부문의 소득이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서 공식 경제의 중요성을 상당히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표 3-1> 북한 주민의 부문별(공식/비공식) 개인 현금소득(월) 구성<sup>a</sup>

	사례 수(명)	유소득 비율 (%)	평균소득(북한 원)		중위소득(북한 원)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공식 부문 <sup>b</sup>	873	42.3	81	34	2	0
비공식 부문	873	76.9	1,707	1,311	500	300
차이(배율)		34.6%p	21.1배	38.2배	250배	-

주: a) 이 표는 2013-20년 중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됨  
 b) 공식부문 소득은 배급 등 현물 소득이 제외되어 있을 수 있어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음

이제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의 전체 현금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전반적으로 시기별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 규모 면에서 큰 변화는 관측되지 않으나, 경제활동 참여율(유소득 비율)이 2018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3-14년과 2015-17년을 비교해보면 중위 소득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은 87.1%에서 89.6%로 증가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경제 관리 방법 개선 등 시장 친화정책이 본격화된 2010년대 중반

23) FAO and 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me: FAO and WFP, November 2012).

들어 주민들의 소득도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인 2018-20년 시기에는 중위소득이 5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된 반면, 유소득자 비율은 89.3%에서 83.0%로 6.6%p 감소하였다. 특히 공식부문의 참여율은 2018-20년 34.5%로 직전 3년(2015~17년)에 비해 13.1%p나 감소하여, 제재 강화 이후 공식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같은 기간 부업 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71.7%로 2015~17년 대비 9.4%p 감소하였다. 이는 장마당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비공식 경제활동 여건도 제재 강화 이전에 비해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3-2> 북한 주민의 개인 현금소득(월) 추이<sup>a</sup>

탈북시기	사례 수(명)	유소득 비율 (%)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2013-14년	295	87.1	2,053	1,789	400	300
2015-17년	355	89.6	1,234	1,106	500	350
2018년 이후	223	83.0	1,379	1,144	500	353
전체 시기	873	87.1	1,547	1,346	500	300

주: a) 이 표는 2013-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에 기반하며 개인의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을 합산한 총 현금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임.

### 나) 개인 특성에 따른 소득 분포 : 기술통계

이제 성별, 출신지역, 직업, 당원 여부 등 개인의 특성 변수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 간의 소득을 비교해보고, 더 나아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변수가 소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한다.<sup>24)</sup>

먼저 성별에 따라 소득 수준을 분석해보면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89.6%, 여성 85.4%로 남성이 다소 높았다. 경제활동 참여율에 나타난 성별 간 차이는 남성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남성 60.0%, 여성 30.7%). 그러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에서도 남성이 77.1%로 여성(76.1%)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소득 중앙값이 503,500원으로 여성(40만원)에 비해 26%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내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 유지에 여성이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표 3-3〉 성별에 따른 개인 소득 분포<sup>a)</sup>

	사례 수(명) <sup>b)</sup>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남성	345[309]	89.6	1,763	503
여성	528[451]	85.4	1,399	400
차이(배율)		4.2%p	1.26배	1.26배

주: a) 이 표는 2013-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에 기반하며 개인의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을 합산한 총 현금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임.

b) 괄호 안의 숫자는 중위 소득 및 평균 소득 계산 시 유효 사례 수로 공식/비공식 부문 중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한 피조사자 수를 의미함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업종 간 차이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된 소득원이었던 직종 설문에서 여성은 소매장사가 34.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의 경우 외화벌이, 도

24) 이 분석에서도 공식, 비공식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소득의 경우 대부분이 매우 낮은 소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단 간 차이는 비공식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장사, 소매장사, 임노동 등 다양한 업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외화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업종의 경우 기대 수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업종 종사자가 많은 남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5)</sup>

〈표 3-4〉 성별에 따른 주 소득원 업종

	소매장사	개인 서비스업	도매장사	외화벌이	돈장사	임노동	기타 <sup>a)</sup>
남성	13.3	4.7	13.1	14.8	3.7	11.6	31.8
여성	34.2	3.8	13.8	8.0	5.8	4.3	20.2

주: a) 기타는 제시된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을 개방형으로 응답한 것이다.

다음은 지역별 소득을 살펴본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함경남도 및 강원도이다. 이 지역의 중위 소득은 30만원<sup>26)</sup>으로 타 지역 대비 약 40%정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의 중위 소득이 75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지역의 경우 중국 랴오닝성에 인접하여 다른 지역 대비 외화벌이 관련 소득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표본 수가 16명으로 매우 적어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경우 중위 소득이 48만원으로 여타 지역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5) 남성의 경우 주소득원 설문에서 기타 응답이 31.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상당수는 밀수 등 대외 거래 관련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성 응답자의 주 소득원은 넓은 의미에서 외화벌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26) 2015년~2020년의 북한사회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강원도가 매년 30~40%의 응답을 받아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바 있다.

〈표 3-5〉 출신 지역별 개인 소득 분포<sup>a</sup>

	사례 수(명) <sup>b</sup>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수도권	35[28]	80.0	1,773	480
개성, 황해도	21[17]	81.0	533	301
평안북도, 자강도	16[13]	81.3	2,817	750
함경남도, 강원도	48[41]	85.4	635	300
함경북도	260[229]	88.1	1,234	400
량강도	492[431]	87.6	1,789	500

주: a) 이 표는 2013-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에 기반하며 개인의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을 합산한 총 현금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임.  
 b) 괄호 안의 숫자는 중위 소득 및 평균 소득 계산 시 유효 사례 수로 공식/비공식 부문 중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한 피조사자 수를 의미함

이외에도 〈표 3-6〉에서는 당원 여부, 최종학력, 공식직업, 주관적 계층 인식 등 집단별 소득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당원의 중위 소득이 비당원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당원이 96.3%로 비당원에 비해 10.9%p나 높았다

〈표 3-6〉 기타 집단별 개인 소득 분포<sup>a</sup>

	사례 수(명) <sup>b</sup>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당원 여부	당원	135[130]	96.3	1,487	500
	비당원	730[620]	85.4	1,597	476
최종 학력	인민학교	18[11]	61.1	590	600
	고등중학교	598[510]	85.3	1,439	500
	전문학교	150[130]	86.7	1,564	503
	대학교	101[85]	84.2	2,558	400

	사례 수(명) <sup>b</sup>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공식 직업	노동자	256[227]	88.7	1,450	500
	농민	56[44]	78.6	405	201
	사무원	77[71]	92.2	2,386	302
	전문직(의사, 기술자 등)	44[38]	86.4	799	368
	학생	57[28]	49.1	577	301
	군인	44[38]	86.4	639	375
	외화별미일군	20[20]	100.0	2,529	1,000
	장사	103[99]	96.1	1,939	702
	가정주부	134[112]	83.6	1,837	360
	계층 인식	상층	82[70]	85.4	3,902
중층		559[479]	85.7	1,695	502
하층		231[190]	82.3	413	201

주: a) 이 표는 2013-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에 기반하며 개인의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을 합산한 총 현금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임.  
 b) 괄호 안의 숫자는 중위 소득 및 평균 소득 계산 시 유효 사례 수로 공식/비공식 부문 중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한 피조사자 수를 의미함

최종학력별로는 고등중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 중위 소득이 5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고학력에 해당하는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중위 소득 40만원으로 타 집단 대비 오히려 낮았다. 반면 대졸자의 상위 25% 소득 분위 경계값은 130만원으로 전문학교 졸업자 및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100만원 보다 25% 높았고, 상위 10% 소득분위 경계값은 700만원으로 타 집단(전문학교 졸 : 245만원, 고등중학교 졸 : 250만원)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북한 내에서 소득과 학력이 저소득층 및 중간층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지만 고소득층에서는 고학력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직업 중에서는 외화별이일군의 중위소득이 100만원<sup>27)</sup>, 상인의 중위 소득이 70만원으로 비교적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sup>28)</sup>. 한편, 표본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경우 중위 소득이 50만원으로 전체 중위소득과 동일하였다. 농민의 경우 중위 소득이 약 20만원으로 제시된 직업군 중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생활 수준 계층 인식과 실제 소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 직전 본인의 북한 내 계층이 상류층이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중위 소득은 약 100만원 수준이었으며, 중층은 약 50만원 하층은 약 20만원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한 달에 북한 돈 100만원 정도의 현금 소득이 있다면 북한 내에서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분석 기간 중 평균적인 시장환율(약 8,000원) 기준으로 약 125달러에 해당하며, 개성공단 폐쇄 이전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한 한 달 월급과 비슷한 액수이다. 전체 소득 분포에서 보더라도 100만 원은 상위 25% 수준이며, 50만원은 중위 소득, 20만원은 하위 30% 소득분위 경계값에 해당하여 주관적인 생활 수준 계층 인식과 실제 소득 응답은 대체로 일관성을 갖는다.

27) 본 조사에서는 공식 직업 외에도 부업을 포함하여 북한 거주 당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던 업종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 소득 업종에 따라 소득을 분류해 보더라도 외화별이 계통과 돈장사(환전상, 사금융) 등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비공식 직업을 막론하고 대외 거래와 연관되어 일을 하는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공식 직업을 장사라고 응답한 것은 공식 시장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매대 상인이거나, 공식 직장이 없이 비공식적으로 상거래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 공식 직장이 있으나 출근은 하지 않고 전업으로 상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

### 다) 개인 특성에 따른 소득 분포 : 회귀분석

이제 본 절의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 소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특성 변수는 무엇인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회귀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현금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 더미변수(소득이 0보다 크면 1, 0이면 0을 갖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득이 0보다 큰 표본만을 대상으로 소득의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반최소자승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OLS)을 실시한다.

설명변수로는 성별, 당원여부, 출신지역, 학력, 탈북 당시 연령, 외화별이 종사 여부 등 개인의 특성 변수와 함께 대북제재 강화라는 시기적 변수를 포함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출신지역을 접경지역(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수도권(평양, 남포, 평안남도), 비접경지역(함경남도, 강원도, 개성, 황해도)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종학력 또한 전문학교 이상과 고등중학교 이하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외화별이 종사 여부는 공식 직업을 외화별이 일군으로 기재하였거나, 부업 활동 중 주 소득 업종이 외화별이 또는 돈장사였다고 답한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로 정의된다.

〈표 3-7〉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첫번째 열을 보면 〈표 3-2〉에서 제시하였던 것과 같이 대북제재 강화 이후 개인의 현금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매우 유의한 음수(-0.568)로 추정되었으며, 대북제재 강화 이후 개인의 소득발생 가능성이 약 9.0%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무역 급감, GDP 성장률 악화 등 거시 경

제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 창출 활동도 다소 위축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인별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 당원 여부, 외화벌이 관여 여부 등이 소득 발생 확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의 경우 탈북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높아지다가 40대 초반 이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는 역 U자형 관계를 볼 수 있다. 또한, 외화벌이 관련 사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현금 소득 발생 확률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원의 경우 비당원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성별, 출신지역 및 교육 수준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7〉의 2~4열은 대북제재 더미변수 대신 각각의 탈북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고, 대북제재와 개인 특성변수의 상호교차항을 추가하여 대북제재 이후 경제활동 참여 확률의 변화가 각 인구 집단 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열은 성별, 3열은 외화벌이 종사 여부, 4열은 출신지역을 대북제재 더미변수와 상호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3열에서 대북제재 더미와 외화벌이 종사 여부의 교차항 계수가 음수로 추정된 것이다. 이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주로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 주민보다는 외화벌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민들의 소득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7〉 개인 특성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소득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 1(개인소득>0)				
대북제재 더미 (2018년 이후=1)	-0.568*** [0.214]			
성별(1=여성)	-0.316 [0.214]	-0.372 [0.264]	-0.295 [0.218]	-0.300 [0.216]
나이	0.261*** [0.046]	0.250*** [0.046]	0.256*** [0.047]	0.250*** [0.045]
나이 제곱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당원여부(1=당원)	0.916* [0.471]	0.908* [0.467]	0.909* [0.467]	0.891* [0.467]
고등교육여부 (1=전문학교 이상 졸업)	-0.120 [0.232]	-0.116 [0.237]	-0.095 [0.236]	-0.107 [0.238]
외화벌이 관여 여부	1.164*** [0.390]	1.098*** [0.399]	2.053*** [0.757]	1.153*** [0.423]
지역 (ref: 접경지역)				
수도권	-0.600 [0.468]	-0.536 [0.454]	-0.503 [0.462]	-0.478 [0.485]
비접경	0.107 [0.377]	0.108 [0.405]	0.108 [0.402]	-0.188 [0.452]
상호교차항				
제재 * 여성		0.245 [0.452]		
제재 * 외화벌이			-1.832** [0.923]	
제재 * 수도권				-0.813 [1.125]
제재 * 비접경				1.101 [0.964]
탈북 연도 더미	불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875	874	874	874
Pseudo R2	0.104	0.129	0.135	0.131

주: 종속변수는 개인 현금 소득이 0보다 큰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임. [ ] 안의 값은 각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은 각 추정 계수 값이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한편, 2012년 이전 시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계 왜곡 우려가 있어 2013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자료만을 사용함.

이어서 <표 3-8>에는 현금 소득의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역시 <표 3-2>에서와 같이 대북제재 강화 이후 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3-7>의 결과와 종합해서 보면 강화된 대북제재는 개인 소득의 규모를(intensive margin) 감소시키기보다는 소득 창출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extensive margin)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개인별 특성 변수 중 소득 규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화벌이 관련 여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화벌이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던 탈북민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2배 이상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탈북 당시)나이도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하게 관찰되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다가 30대 후반 이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역 U자형 관계를 볼 수 있다. 또한, 비당원의 경우 당원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신지역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 뿐 아니라 소득 규모와의 관계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 인근 거주 주민과 그 외 지역 간의 생활 수준에 일정한 격차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수도권 주민의 소득이 접경 지역 대비 높지 않다는 결과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로 현금 소득의 규모가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주민의 경우 타 지역 대비 북한 체제 내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식량 등 현물 배급에 있어서도 타 지역 대비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어 현금 소득과 생활 수준의 괴리가 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식주 생활이나 가계 지출 구조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설문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은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4열에서 대북제재와 개인 특성변수의 상호교차항을 추가한 분석 결과, 대북제재와 여성 더미변수의 상호 교차항이 (+)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대북제재 이후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별에 따른 종사 직군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장마당 내 상거래 활동에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며, 무역 등 대외거래 관련 사업에는 남성이 많이 관여한다. 이를 고려하면, 본 회귀분석 결과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대외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의 소득에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 효과가 아직까지 북한 내부 장마당을 소득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열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외화벌이 종사 여부와 대북제재의 상호교차항을 포함하였는데, 2열의 결과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계수 값이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갖지 못하였다.

<표 3-8> 개인 특성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소득 규모 (OLS 회귀분석)

종속변수 : log(개인소득)				
대북제재 더미 (2018년 이후=1)	0.011 [0.277]			
성별(1=여성)	-0.155 [0.247]	-0.340* [0.161]	-0.122 [0.250]	-0.114 [0.255]
나이	0.231*** [0.038]	0.216*** [0.042]	0.218*** [0.043]	0.216*** [0.044]
나이 제곱	-0.003*** [0.000]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당원여부(1=당원)	-0.613* [0.281]	-0.621* [0.287]	-0.613* [0.294]	-0.616* [0.299]
고등교육여부 (1=전문학교 이상 졸업)	-0.077 [0.154]	-0.089 [0.149]	-0.080 [0.144]	-0.082 [0.145]
외화벌이 관련 여부	1.099*** [0.144]	1.048*** [0.158]	1.065*** [0.183]	1.002*** [0.157]

지역 (ref: 접경지역)				
수도권	-0.335 [0.389]	-0.290 [0.435]	-0.306 [0.407]	-0.372 [0.438]
비접경	-0.075 [0.268]	-0.040 [0.241]	-0.071 [0.262]	-0.080 [0.157]
상호교차항				
제재 * 여성		0.969** [0.348]		
제재 * 외화벌이			-0.223 [0.396]	
제재 * 수도권				0.888 [0.691]
제재 * 비접경				0.048 [0.944]
탈북 연도 더미	불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742	742	742	742
Adjusted R2	0.052	0.069	0.062	0.061

주: 종속변수는 자연로그로 변환한 개인의 월 소득이며, 소득이 0보다 큰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 ] 안의 값은 추정 계수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은 추정 계수 값이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한편, 2012년 이전 시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계 왜곡 우려가 있어 2013년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자료만을 사용함.

### 3. 북한 가계의 소비 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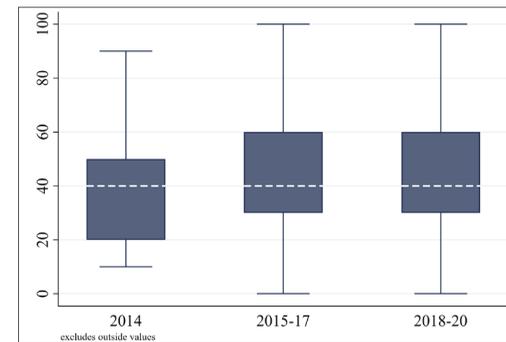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식비, 의복비, 저축 등 소비 항목을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의 시기에 따른 변화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북한사회변동 설문조사에서 소비 지출에 대한 항목은 2015년 이후부터 새롭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출 관련 분석의 경우 표본이 2014년 이후 탈북민으로 한정된다.

### 가) 지출 구성의 특징과 시기에 따른 변화

북한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식비이다. 본 조사에 나타난 가계 지출 중 식비의 비중은 중간값이 40%로 추산되며 시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모습이다. 평균 식비 지출 비중도 2014년 41%, 2015-17년 43.0%, 2018-20년 44.7%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 가계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중국의 2000년대(30~40%)보다 약간 높으며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볼 수 있다.<sup>29)</sup> 다만 식량 배급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배급분을 제외하고 응답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북한 가계의 실제 식량 소비 비중을 다소 과소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 북한 주민의 지출에서 식비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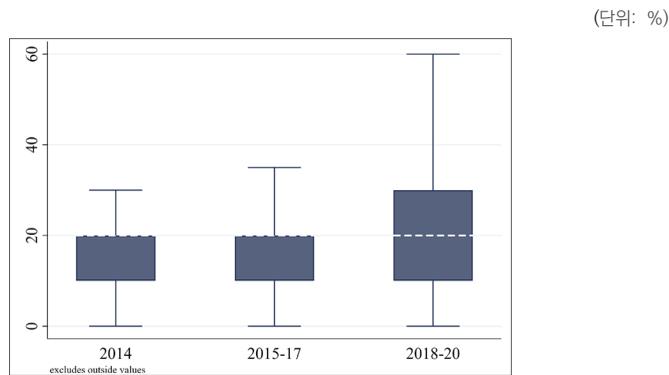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시기별 식비 비중의 분포를 박스 형태로 제시한 것임. 흰색 점선이 중간값을 나타내며 박스 상단 및 하단의 경계 실선은 각각 상위 25% 경계값, 하위 25% 경계값을 나타냄.

29) 일반적으로 영겔지수 30% 이하는 선진국, 30-50%는 개발도상국, 50% 이상은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식비 다음으로는 의복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복비 지출 비중의 중위 값은 20% 수준이며 역시 시기에 따라 일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2018년 이전에는 20% 부근에 응답이 밀집되어 있었다면 2018년 이후 시기에는 중간값 위쪽으로 의복비 지출 분포의 꼬리가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 이상의 의복비를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17년 23.1%에서 2018-19년에는 28.2%로 증가하였다. 의복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북한 주민의 지출에서 의복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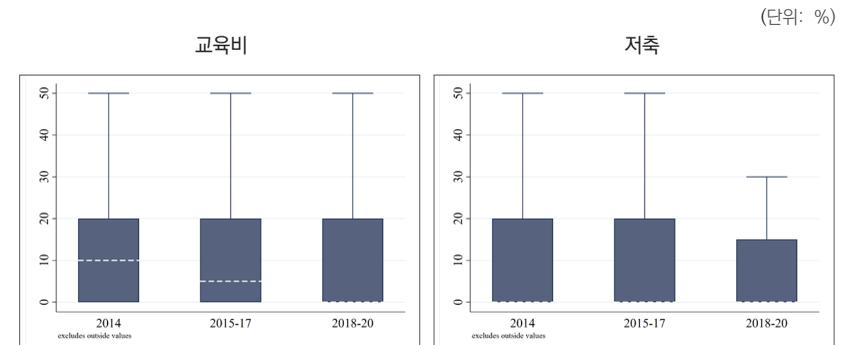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시기별 의복비 비중의 분포를 박스 형태로 제시한 것임. 흰색 점선이 중간값을 나타내며 박스 상단 및 하단의 경계 실선은 각각 상위 25% 경계값, 하위 25% 경계값을 나타냄.

의복비 지출과 반대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교육비이다. 〈그림 3-3〉의 좌측을 보면 교육비 지출의 중앙값은 2014년 10% 수준에서 2018~2020년에는 0으로 감소하였다. 즉, 2018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는 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 모든 시기에 대해 25%의 주민은 꾸준히 교육비 지출이 20% 이상이

라고 응답하였다.

저축율의 중앙값은 2014년 10%에서 2015~17년, 2018~20년에는 0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들은 저축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저축이 없었던 응답자 비율은 2015-17년 51.2%에서 2018년 이후 54.0%로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저축률의 상위 25% 경계값은 2014년, 2015-17년 시기에 20%로 동일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15%로 감소하여 대북제재 강화 이후 저축 상위 그룹에서도 저축률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3-3〉 북한 주민의 지출에서 교육비와 저축 비중



주: 이 그림은 시기별 식비 비중의 분포를 박스 형태로 제시한 것임. 흰색 점선이 중간값을 나타내며 박스 상단 및 하단의 경계 실선은 각각 상위 25% 경계값, 하위 25% 경계값을 나타냄.

요약하면 최근 시기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지출 구성은 식비와 의복비 등 필수품 지출이 높은 가계들이 다소 증가하면서 반대로 교육비 지출이나 저축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심스럽지만, 대북제재 강화 이후 주민들의 살림살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 생계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문부터 소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성의 관계

본 소절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지출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비 지출의 비중은 감소하는 이른바 ‘앵겔의 법칙’이 북한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반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3-9>는 개인의 소득 계층 인식에 따라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 표본에서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세 가지 항목을 소득 계층별로 비교해본 결과, 우선 식비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식비 지출은 평균 36%였던 반면 하층의 식비 지출은 56%로 두 집단 간 20%p의 차이가 나타난다. 반면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가장 크게 증가하는 항목은 저축률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층의 저축률은 평균 16.5%인 반면 하층은 3.9%에 불과하였고, 하층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저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의복비 또한 생활수준이 상승할 수록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상층의 평균 의복비 지출은 22.7%로 하층에 비해 6.5%p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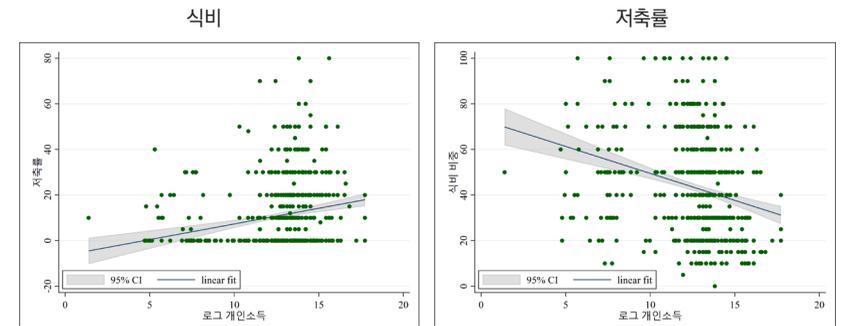
30) 한편, 교육비의 경우 지출 자체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득 계층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9> (주관적) 소득 계층별 지출 구성

		상층	중층	하층
식비	평균	35.6	39.7	55.8
	중앙값	30	40	50
의복비	평균	22.7	20.2	16.2
	중앙값	20	20	15
저축	평균	16.5	12.7	3.9
	중앙값	17.5	10	0
관측치 수		78	455	182

<그림 3-4> 개인의 소득수준과 지출 구성의 관계

(단위: %)



주: 이 그림은 개인 소득 금액과 식비(좌) 및 저축률(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포도임. 각 그림에서 초록색 실선은 추정된 회귀선이며, 회색 음영은 회귀선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그림 3-4>는 개인의 실제 소득 금액과 지출 비율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x축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개인소득, y축은 식비 비중(좌측 그림) 및 저축률(우측 그림)이다. 회귀선의 방향을 통해 소득이 증가할 수록 식비의 비중은 감소하며, 반대로 저축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요약하자면 저소득층일수록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식비에 지출하는 패턴이 나타나며, 반대로 북한에서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 저축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 4.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실질소득 추이 및 소득분배지표

2절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소득 추이 및 집단 간 소득 격차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개인 소득은 보통 가구 내에서 공유되고 소비 지출 등의 결정 또한 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데 개인 소득보다는 가구 소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개인소득을 바탕으로 한 2절의 분석은 의도하지 않은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다.<sup>31)</sup>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조사의 소득 관련 응답은 대부분 현금 소득만을 반영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본 조사에서 탈북 전 가계소득이 공식, 비공식 부문 모두에서 전혀 없었다는 응답자가 6%이며 양의 가계 소득을 보고한 응답자 중에서도 10%는 소득 금액이 북한 돈 18,00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최근 장마당 물가를 고려하면 이 정도 소득으로 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므로 이러한 응답자들의 경

31) 본 조사에도 가구소득 관련 문항이 있으나, 가구소득이 범주형 응답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가구소득에 대한 심층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우 현물 소득, 국영상점 이용 등 부족한 현금 소득을 보충할 수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소득에 대한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함에 있어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공식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집단의 생활 수준을 체계적으로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절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관련 응답과 지출 구성 관련 응답을 종합하여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주민 소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북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소득분배지표를 계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가) 계산 방법 및 주요 가정

지출 측면 소득 추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식생활 관련 세 가지 질문(식사 횟수, 곡물 비율, 고기 섭취 빈도)을 토대로 식비 지출 금액을 추산하고, 여기에 전체 지출 중 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식생활이나 소비 지출은 가계를 기본 단위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렇게 추정된 소득은 개인소득보다는 1인당 가계소득에 가까운 개념이며<sup>32)</sup>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

32) 다만, 정은미(202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식생활에 있어 가구 내 젠더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계산 방법은 남성 응답자의 가계소득은 과대추정하고 여성 응답자의 가계소득은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정은미, 『북한사회변동 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중 "의식주와 정보화"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39-40.)

표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추정 방법은 매우 강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구성되는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을 지극히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1인당 소득과는 상당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일 끼니 횟수'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개별 피조사자의 1일 곡물 소비량을 가정한다. '하루 세 끼 이상', '하루 두 끼', '하루 한 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경우 1일 곡물 소비량이 각각 450g, 300g, 200g인 것으로 간주한다. '한 끼도 못먹을 때가 많았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150g을 부여한다. 여기에 '식사 시 입쌀과 강냉이의 비율'을 적용하여 1일 쌀 소비량과 옥수수 소비량을 구한다. 해당 질문은 '거의 입쌀', '입쌀 위주로 강냉이 혼합', '입쌀과 강냉이 반반', '강냉이 위주로 입쌀 혼합', '거의 강냉이'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각에 대해 쌀과 강냉이 비율을 9:1, 7:3, 5:5, 3:7, 1:9로 가정하여 각 곡물 소비량을 추정한다.

이제 이렇게 도출된 일일 쌀, 옥수수 소비량에 각각 30을 곱하여 월 소비량으로 변환하고 가격을 곱하면 개별 응답자의 한 달 곡물 소비 지출 금액을 구할 수 있다. 곡물 가격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탈북 연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2019년 평균 가격을 적용하였다.<sup>33)</sup> 그 다음으로 '고기 섭취 빈도'를 바탕으로 곡물 소비가 전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고 총 식비 지출을 추정한다. 고기(육고기, 생선을 모두 포함)를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한두 번' 먹었다는 응답에 대해 식비 중 곡물 소비 비중이 각각 15%, 30%, 50%, 70%인 것

33) 데일리 NK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은 평균 4,649원/kg 옥수수 가격은 평균 1,501원/kg이다.

으로 간주하였고, '거의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80%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비 지출금액을 소득 중 식비의 비중으로 나누어주면 2019년을 기준 년도로 하는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표 3-10〉 지출 측면의 소득 추정 시 단계별 가정 및 계산 방법

단계	가정			계산	
① 일일 곡물 소비량	곡물 소비량		쌀 : 강냉이 비율	일일 쌀(옥수수) 소비량 = 곡물 소비량 × 쌀(옥수수) 비중	
	하루 세 끼 이상	450g	거의 입쌀		9:1
	하루 두 끼	300g	입쌀 위주 강냉이 혼합		7:3
	하루 한 끼	200g	반반		5:5
	하루 한 끼 미만	150g	강냉이 위주 입쌀 혼합		7:3
			거의 강냉이	1:9	
② 월간 곡물 소비액	한 달 = 30일 2019년 쌀 가격 = 4,649원/kg 2019년 옥수수 가격 = 1,501원/kg			일일 곡물 소비액 = 쌀과 옥수수의 (가격×일일 소비량) 합계  월간 곡물 소비액 = 일일 곡물 소비액 *30	
③ 월간 식비 지출	고기 섭취 횟수		식비에서 곡물 소비 비중	월간 식비 지출 = ② ÷ 식비 중 곡물 소비 비중	
	거의 매일		15%		
	1주에 한 두 번		30%		
	한 달에 한 두 번		50%		
	1년에 한 두 번		70%		
거의 먹지 못했다		80%			
④ 월간 실질 소득	전체 소득 중 식비 지출 비중(개별 응답)			월간 실질소득 = ③ ÷ 소득 중 식비 비중	

나) 지출 측면의 실질소득 추정 결과

우선 북한 주민들의 일일 곡물 소비량은 평균 400~430g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하루 세 끼 기준 곡물량(450g)에 가까운 것으로 피조사자 중 90% 이상이 '하루 세 끼 이상' 또는 '하루 두 끼' 식사를 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곡물 소비량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쌀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여 식사의 양적,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1인당 일 평균 곡물 소비량 추이



주: 이 그림은 시기별 의복비 비중의 분포를 박스 형태로 제시한 것임. 흰색 점선이 중간값을 나타내며 박스 상단 및 하단의 경계 실선은 각각 상위 25% 경계값, 하위 25% 경계값을 나타냄.

1인당 실질 식비 지출(2019년 가격 기준)은 평균 북한 돈 14.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 시기 주민들의 식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강화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식생활에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비 지출은 2017년에만 다소 감소하였을 뿐 2018-19년에도 제재 이전(2014-16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1인당 실질소득은 탈북연도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추정치만 계산되었다. 소비 지출 관련 설문은 2015년 조사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추정

결과, 북한 가계의 1인당 월 실질소득은 평균 북한 돈 56.1만원, 중간값은 34.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1인당 월 평균 소득 및 식비 지출

(단위: 만 원)



주: 개인의 식생활 관련 응답과 소득에서 식비의 비중을 종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된 결과임. 이 그림의 소득은 식생활과 소비 지출이 가계를 기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1인당 가계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2019년 장마당 곡물 가격을 적용하여 구한 것이므로 실질소득(기준년도: 2019년)에 해당함. 식비 지출 비중 응답은 2015년 이후 조사부터 포함되어 탈북 연도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추정치만 계산되었음.

시기별로 보면 주민들의 실질소득이 점차 감소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7년 이후 3년간 평균소득(49.2만원)이 이전 3년 평균소득(61.1만원) 대비 19.4%나 감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주민들의 실질소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감소 폭(-15.6%)보다 평균소득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보아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식비 지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제재 이후 소득이 감소한 주민들이 생계에 필수적인 식비보다는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였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경제 침체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부합한다. 한편 김규철(2020), 정은미(2021) 등 선행연구들에서는 강화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영양, 보건 등 후생지표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sup>34)</sup>, 본 연구의 계산에 근거하면 주민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주로 식생활과 연관이 깊은 이들 후생지표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11〉 월 실질소득으로 본 북한의 인구 집단별 생활 수준<sup>a)</sup>

(단위: 북한 원 (기준년도 : 2019년)<sup>b)</sup>)

	사례 수 (명)	평균 소득		중위 소득		
		금액	전체 대비	금액	전체 대비	
전체	694	560,755	1.00	345,938	1.00	
출신 지역	수도권	24	806,090	1.44	650,130	1.88
	개성, 황해도	18	413,424	0.74	158,993	0.46
	평안북도, 자강도	13	1,385,574	2.47	975,195	2.82
	함경남도, 강원도	36	329,684	0.59	443,409	1.28
	함경북도	201	586,774	1.05	390,078	1.13
	량강도	401	521,593	0.93	332,100	0.96
당원 여부	당원	111	643,322	1.15	345,938	1.00
	비당원	573	548,800	0.98	345,938	1.00
최종 학력	인민학교	13	475,539	0.85	250,061	0.72
	고등중학교	482	505,258	0.90	332,757	0.96
	전문학교	115	656,961	1.17	487,598	1.41
	대학교	77	802,848	1.43	487,598	1.41

34) 김규철,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0-04 (2020): 64-66; 정은미, 『북한사회변동 2020: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중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시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1), 38-43.

	사례 수 (명)	평균 소득		중위 소득		
		금액	전체 대비	금액	전체 대비	
공식 직업	노동자	198	553,439	0.99	345,938	1.00
	농민	44	178,009	0.32	90,935	0.26
	사무원	54	540,984	0.96	487,598	1.41
	전문직(의사, 기술자 등)	38	707,427	1.26	333,414	0.96
	군인	36	547,973	0.98	325,065	0.94
	외화별이일군	20	934,003	1.67	715,143	2.07
	장사	94	643,109	1.15	390,078	1.13

주: a) 2014-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조사 중 개인의 식생활 관련 응답과 소득에서 식비 지출의 비중을 종합하여 1인당 가계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임  
b) 이 표의 소득은 2019년 장마당 곡물 가격을 적용하여 구한 것이므로 2019년을 기준년도로 한 실질소득 추정액임

위와 같이 계산된 실질 소득을 바탕으로 인구집단별 생활수준 격차를 재평가해볼 수 있다. 앞서 2절에서는 소득 응답을 직접 분석하여 수도권 거주민, 대학교 졸업자 등 북한 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의 소득이 타 집단과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이유로 현금 소득의 규모가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었다. 반면, 〈표 3-1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절에서 계산된 실질소득은 이러한 (현금) 소득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 주민의 평균소득이 월 80.6만 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44% 높았으며, 중위소득 또한 65만 원으로 전체 중위소득보다 8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당원의 소득이 전체 평균 대비 15% 높게 추정되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실질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는 등 사회적 지위에 해당하는 변수들과 생활 수준 간의 관계가 대체로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한다. 한편, 직업별로는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화별이일군의 실질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대외거래에 관여하는 집단이 신흥 부유층으로 대두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대로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직업군은 농민이다. 농민의 월 평균 소득은 17.8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소득 분배지표

본 소절에서는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실질소득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몇 가지 소득 분배지표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또는 불평등하게 분포하는지 파악하며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소득 분배지표는 보통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sup>35)</sup>. 가구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득 창출, 소비 등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를 가구로 보기 때문이며, 내구재와 같이 가구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가 아닌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계산된 실질소득은 개념상 가구소득에 가깝긴 하지만 개인의 식생활 응답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출 비중에서도 주택 사용 비용(자가 주택 사용료), 내구재 구입 비용 등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구 내 공동 소비 항목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면 오히려 가구원 수가 많은 응답자의 소득을 과소추정할 우려가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균등화 개인소득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

35)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통계청 홈페이지 ‘소득분배지표’를 참조.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1/index.static](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1/index.st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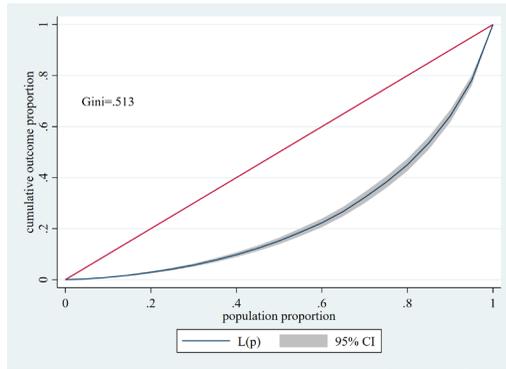
고 1인당 가구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추정한다.

추정 결과, 전체 표본 기간 중 북한의 지니계수는 0.513으로 계산되었다. 다른 국가 사례들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은행의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국이 0.31, 일본이 0.33이며, 미국은 이보다 다소 높은 0.41이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0.63), 잠비아(0.57), 브라질(0.53) 등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지니계수가 0.5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sup>36)</sup>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니계수를 통해 본 북한의 소득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백분위율을 통해 살펴보면 북한의 상위 10% 소득분위 경계값은 월 130만원 가량으로 하위 10% 소득분위 경계값(8.2만원)의 15.9배, 중위소득(34.6만원)의 3.76배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이 2019년 기준 각각 9.79배, 2.27배로 조사되어, 북한의 소득 불평등도가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사의 표본 구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수치가 북한의 전체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으며, 소득 추산에 도입된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하다.

36) The World Bank, “Gini index (World Bank estimate),” The World Bank, accessed 2021,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

37) 북한의 소득불평등도를 체계적으로 계산한 연구는 현재까지 정은찬(2012)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구 총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2002년 7.1조치 이후 0.644인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소득5분위배율 또한 77.6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경우 현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금 소득 외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의 생활 수준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정은찬, “북한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경북대학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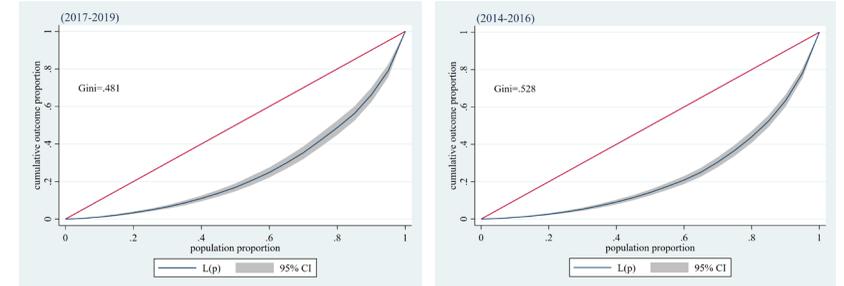
〈그림 3-7〉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북한의 지니계수



주: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1인당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임. 2014-20년 중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 사용.

시기별로는 2014-16년의 지니계수가 0.528, 2017-19년은 0.481로 추산되었다. 백분위율로 보더라도 p90/p10 값은 2014-16년 16.5에서 2017-19년 13.1로 감소하였고, p50/p10 값은 4.96에서 3.89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 오히려 이전 시기 대비 소득 불평등도가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기간 평균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 소득불평등도가 하락한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거나, 중간 계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득 구간별 변화를 보면 하위 10% 경계소득은 2014-16년 7.9만원에서 2017-19년 8.5만원으로 7.8% 증가한 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25% 경계소득은 16.6만원에서 16.3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상위 10% 경계소득은 14.5% 감소하여(2014-16년 130만 원 → 2017-19년 111만 원) 상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보다 소득 불평등도 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3-8〉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북한의 지니계수 : 시기별



주: 지출 측면에서 추정된 1인당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임. 2014-20년 중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 사용.

### 5. 평가와 시사점

본 장에서는 10년 간 누적된 북한사회변동조사의 소득 및 지출 관련 응답을 종합하여 2010년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추이와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김정은 시대 들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들의 현금 소득은 중간값 기준 2010년대 초반 40만원에서 2010년대 중반 5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같은 시기 약 2.5%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의 식생활에서도 질적, 양적인 개선이 관찰된다. 실질 식료품 소비 지출 계산 결과, 2010년대 초반 10만원 수준에서 중반 이후 14~18만원으로 매우 큰 폭의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2013~14년 이후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어, 김정은 집권 이후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 경제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 여건도 다소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이후 탈북민의 현금 소득 규모(intensive margin)는 중위소득 기준 제재 강화 직전과 동일하였으나, 유소득 응답자 비율(extensive margin)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시기 주민들의 소득 창출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실질소득 역시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대북제재로 인한 주민 생활 수준의 악화를 뒷받침한다. 다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농업생산량과 식량 수입 확대에 힘입어 주민들의 식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진흥청 추계에 따르면 북한 내 식량생산량은 2010년대 들어 450-480만 톤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또한, 비교적 국내 생산분이 부족했던 2019년에도(2018년 생산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 부족분을 채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인구집단별 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금 소득 측면에서 공식 직업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외화벌이일군, 그 다음은 상인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북한에서는 대외무역과 장마당 경제에 깊게 관여할수록 고소득을 올릴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귀 분석에서도 외화벌이 관여 여부가 현금 소득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상거래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보다는 대외무역 관련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관여하는 남성의 소득이 제재 강화 이후 대중무역 급감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소득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 시장화의 진전 이후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된 모습을 반영한다. 본고에서 추정된 북한의 지니계수는 0.513으로 콜롬비아(0.513), 브라질(0.534) 등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중남미 일부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된 이면에, 시장 제도 미비로 인한 불평등 확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고난의 행군 이후 '각자도생' 해야 하는 현실 속에 취약 계층의 생활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지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불평등 확대의 원인일 수 있다.

본 조사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한다면 202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조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코로나19 충격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포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은 철저한 국경 통제를 실시하였고, 대중 수출 뿐 아니라 대중 수입까지 급감하면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 소비재 수급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들의 밀수 활동 또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장마당 운영도 격일제 및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외무역과 시장을 기반으로 생활하던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21세기 들어 가장 낮은 -4.5%로 추정하여,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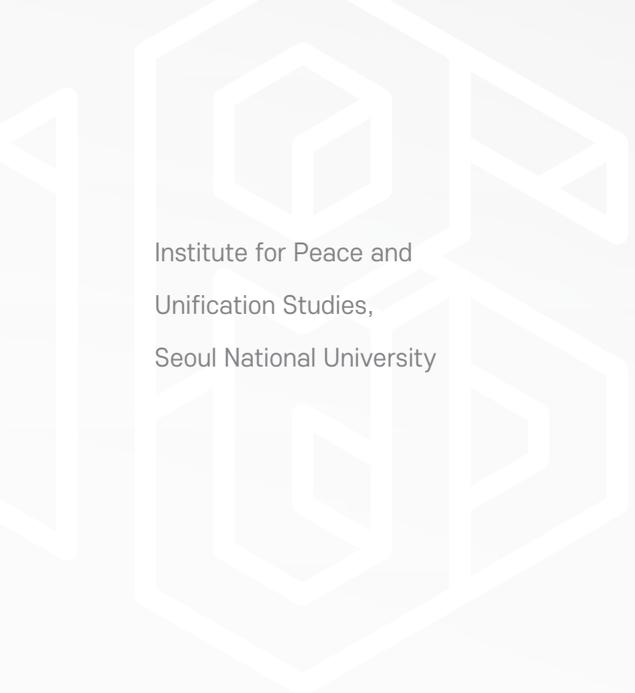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2021년에도 주민 생활이 크게 호전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경 봉쇄 상황이 2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 수입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개월 간 요소비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식료품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탕 가격이 이 기간 중 무려 349%나 폭등하였으며 밀가루, 식용유 또한 각각 159%, 84.7%의 높은 가

격 상승률을 보여 주민들의 식생활 측면에서 질적 악화를 우려케 한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2021년의 기상조건이 2020년보다는 양호하여 농업생산량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sup>38)</sup> 식생활의 양적 악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1년 12월 27-31일에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외부 공개된 내용 중 가장 많은 지면을 농업 부문에 할애하고, 주택 건설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 주민 생활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현재 객관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동안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였음을 고려하면, 최근 국영경제 부문을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대 북한 주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 지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38) 농촌진흥청의 추정 결과 2021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69만 톤으로 2020년(440만 톤)에 비해 약 7% 증가하였다. (출처: 식약일보,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식약일보, 2021년 12월 17일, <http://www.kfdn.co.kr/54983>.)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보건 의료**

## 제4장

## 보건 의료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객원교수

## 1. 서론

북한사회변동조사에서 보건의료 영역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도부터이다. 북한에서 인민병원의 이용 중 경험한 의약품의 부족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과 자가 치료 경험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2021년 본 연구는 북한의 보건의료 영역 중 모자보건 영역, 감염성질환 중 결핵, 말라리아, HIV/에이즈, 비감염성질환 영역으로 구분하여 최근의 자료들을 분석하였고, 북한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식량, 영양의 범위까지 포괄하여 실태분석을 하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발표된 보건의료 데이터들과 북한의 SDGs 목표에 대한 자발적 국별 리뷰(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의 데이터들이 함께 활용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상황에 대한 예측 내용이 함께 기술되었다.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 공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술되는 내용은 추정과 예측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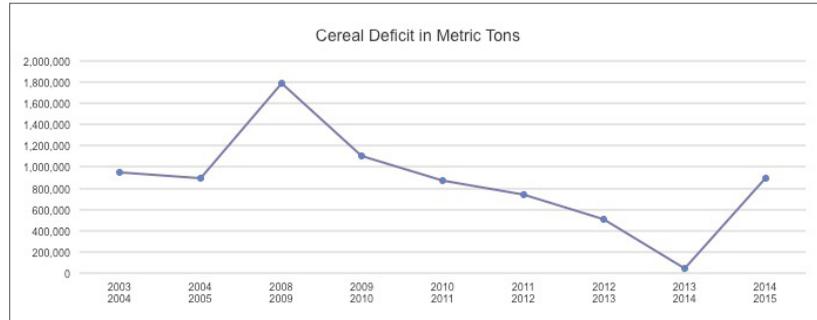
## 2. 북한의 대외원조 수요변화 및 질병부담

## 1) 북한의 식량사정과 영양상태

북한의 Humanitarian Country Team(HCT)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기구 및 국제 NGO들과 함께 매년 Needs & Priority 보고서를 UNOCHA<sup>39)</sup>를 통해 발간하였다. 2013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2015년 이후 매년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FAO와 WFP가 추정한 북한의 곡물 부족규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2014년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을 그 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 북한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의 배급량의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수준인 일일 개인별 573g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반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2014년 공공배급제의 평균수준은 383g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홍수의 피해가 가장 빈번한 8월과 9월 사이는 250g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FSAM의 자료에 따르면(2013년 자료) 전국적으로 가족의 필요량만큼을 배급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16%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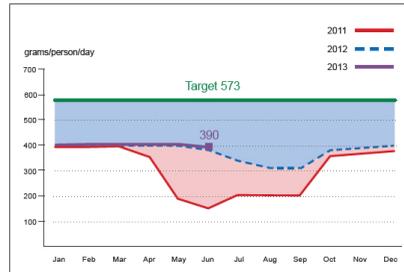
39) UNOCHA: UN 산하기구로 재난, 재해의 위기상황에서 구조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

〈그림 4-1〉 북한 곡물 생산량에 따른 곡물 부족분 추정치 (2003-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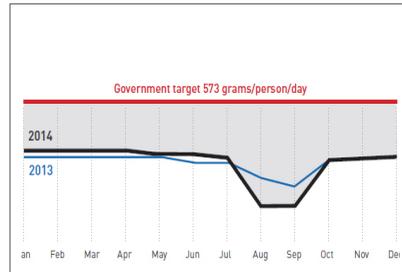
출처: DRPK Needs & Priority, 2013 & 2015 (CFSAM<sup>40</sup> source)

〈그림 4-2〉 북한의 쌀 배급 현황 (2011-2013년)



출처: DRPK Needs & Priority, 2015

〈그림 4-3〉 북한의 쌀 배분 현황 (2013-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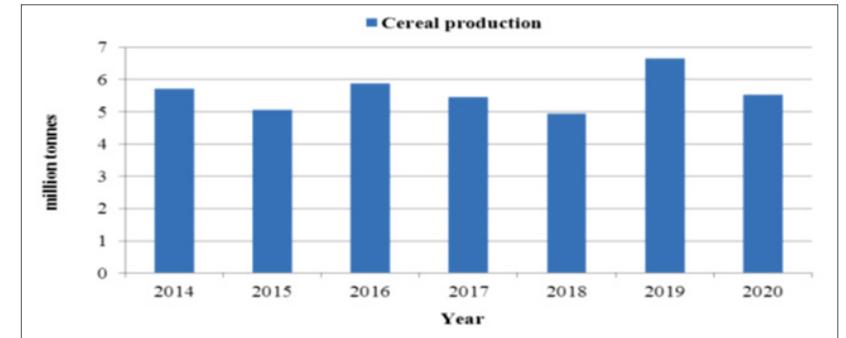


북한이 2021년에 발표한 자발적 국별 리뷰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2019년 전까지 큰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2018년의 곡물생산량의 경우, 과거 10년 간의

40) CFSAM :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곡물생산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속적인 부족상태를 보인다.

〈그림 4-4〉 북한의 연도별 곡물 생산량



출처: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북한은 2021년 7월 SDGs의 이행을 위해 북한이 국가적으로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발적 국별 보고서를 발간하여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High-level Political Forum(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발표를 하였다. 북한 SDGs의 이행을 위해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132개의 선행지표를 선정하여 북한당국의 우선순위로 반영함과 동시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주관, 지속가능발전국가기획팀(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을 2018년 발족하여 중앙통계국 관료로 구성된 6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두어 사회/인구 분야, 과학/교육 분야, 공중보건/식수위생 분야, 경제/에너지 분야, 환경/생태계 분야, 재난위기 관리 분야에서 국가통계시스템을 통한 지표 수집과 분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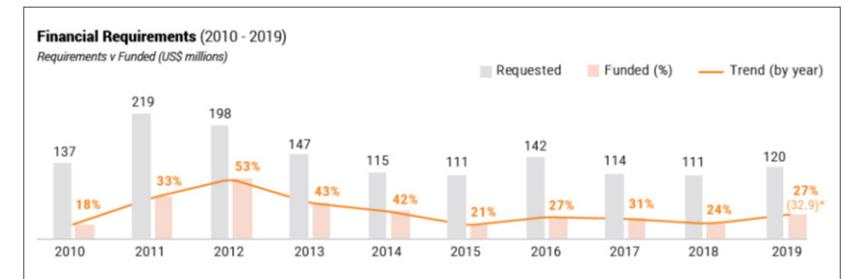
가능케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VNR보고서에도 북한 곡물생산량 감소에 따른 식량사정의 악화에 대한 명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북한이 설정한 연간 곡물생산량 목표치는 7백만 톤이다.<sup>41)</sup> 북한이 정한 목표치에 가장 근접하게 도달한 연도는 2019년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다시 생산량의 감소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VNR에서 명시하는 곡물생산량 부족의 원인은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복구를 통한 회복력의 부족, 2) 농업물품 및 장비의 부족, 그리고 3) 현대화되지 못한 농업기술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회복탄력성의 부족은 UN에서 발간한 다양한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Needs & Priority 2013년 보고서, UN Strategy Framework 2011-2015 등) 언급되었다. 북한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심각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었다. 2012년은 홍수로 인해 231명이 죽고, 240,000명의 사상자, 212,000명의 가족이 집을 잃었고, 2013년 또한 홍수로 평안남도과 평안북도에 약 8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2014년에는 18개월 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곡물생산량 감소와 물부족 사태를 야기하였고, 2015년에는 홍수와 태풍으로 황해남도, 함경남북도, 나선시에 큰 피해를 입혔다. 2016년에도 태풍피해로 함경북도에 138명의 사망자와 60만여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고, 2017년도는 가뭄으로 인해 국가에서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78만여 명의 5세 이하 아동과 31만여 명의 산모와 수유모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2018년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홍수피해가 겹치면서 10년 만에 사상 최악의 곡물생산량을 보였고, 2019년에는 태풍 ‘링

4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링'의 영향으로 피해를 봤다.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구 작업을 넘어선 피해예방을 위한 인프라적 투자가 북한에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대북제재 강화 이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의 필요규모를 산출하고 필요규모 대비 실제 지원된 규모를 비교한 그림이 하단에 있다. 필요한 지원의 20-30%정도 만이 2015년 이후 지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곡물량의 부족분이 명확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이 경험하는 곡물가격에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북한사회변동조사에 따른 북한의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큰 변동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자료이기는 하나, 사회전반에서 확인되는 생필품 및 곡물 가격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북한주민 생활에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른 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림 4-5〉 북한의 연도별 재정적 지원의 수요변화



출처: DPRK Needs & Priority, 2020.

이러한 현상은 중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곡물로 실제 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곡물의 시장 가격 안정현상은 2017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북·중간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마져 끊긴 2020년 이후<sup>42)</sup> 곡물가격의 불안정 양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식료품, 수입수비재의 급등, 그리고 쌀가격의 불안정성이 2021년 이후 함께 감지되고 있다. 2021년 6월 당 중앙위원회 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현재 북한은 상당한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북한의 SDG 목표별 성과 및 전략

SDGs에서는 건강의 영역을 매우 확장시켰다. 아동과 모성의 건강, 그리고 감염성질환에 초점을 맞췄던 MDGs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여, 복지의 개념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층으로의 확대를 목표에 담았다. SDG3에는 9개의 세부목표(target), 4개의 세부실행목표 그리고 세부목표별 지표(indicator) 22개가 존재한다. 세부목표별 지표들은 위험요인/결정요인 지표부터 사망률 지표까지 넓은 범위에서 지표들을 선정하고 있다.

42) 2020년 2월 중국으로 수입하던 물품 및 물량의 80-90%가 감소되어 2021년 상반기까지 유지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KITA 북한무역 월간브리프).

〈표 4-1〉 SDG 3 세부목표별 지표

세부목표(Target)		지표(Indicator)	
3.1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사망비를 70/10만 live birth 이하로 감소	3.1.1	모성사망비
		3.1.2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아동의 예방 가능한 죽음을 종식시켜서, 신생아 사망률을 12/1000 live birth 이하로,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을 25/1000 live birth 이하로 감소	3.2.1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의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과 다른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3.3.1	HIV 발생률(HIV 발생/100 감수성 인년(person years))
		3.3.2	HIV/AIDS 사망률(HIV/AIDS 사망/10만 명)
		3.3.3	결핵 발생률(결핵발생/1000인년(person years))
		3.3.4	결핵 사망자 수
		3.3.5	말라리아 발생률(말라리아 발생/1000인년(person years))
		3.3.6	말라리아 사망률(말라리아 사망/10만 명)
		3.3.7	5세 이하 아동의 B형 간염 항원 유행률
		3.3.8	질병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규정 (IHR) 13개 핵심역량 보유 여부
3.4	2030년까지 정신건강 증진과 비전염성질환 예방과 치료로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	3.4.1	30~70세 사이에 심혈관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 호흡기 질병으로 죽을 확률
		3.4.2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3.5	마약과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5.1	마약복용자 중 마약중독대체요법으로 치료받는 사람 비율
		3.5.2	25세 이하 중 약물남용 예방 활동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3.6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과 상해를 1/2 이하로 감소	3.6.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 보장, 생식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	3.7.1	청소년 출산율(10-14, 15-19)
		3.7.2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수요
3.8	의료비의 재정위험으로부터 보호,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접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비용지불가능한 필수약품 및 백신 접근 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3.8.1	의료비 자부담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로부터 보호되는 인구의 비율
		3.8.2	재양적인 의료비 자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의 비율
3.9	2030년까지 유해물질, 공기, 물,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기인한 사망과 질병의 감소	3.9.1	WHO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도시지역의 인구
3.a	모든 국가에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강화		
3.b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약품의 개발과 연구 지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값싼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3.c	개발도상국 의료 인력의 고용, 발전, 훈련, 유지를 위한 보건재정의 확충		
3.d	국가적, 국제적 보건 위험 관리, 위험 감소, 조기 경보를 위한 모든 국가의 역량강화		

출처: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제6장 표 재인용<sup>43)</sup>.

4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렴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5, Goal 3의 표 재구성하여 인용.

북한은 VNR보고서를 통해 SDG의 북한 내 이행을 위해 북한의 사회주의강국건설 목표와 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에서 정한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에 SDG목표를 통합시켜 수용하였다. 북한은 SDGs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북한의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국가기획팀(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을 2018년에 발족하고 6개의 기술위원회를 두어 북한의 중앙통계국 관료들을 배치시켰다. 이렇듯 북한은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자국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

(1) 북한의 모자보건(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표 4-2〉 모자보건 관련 SDG 세부목표와 지표<sup>44)</sup>

Type of indicator	SDG target	Proposed indicator
Impact	3.1	Maternal mortality
	3.2	Under-five mortality
	3.2	Neonatal mortality
	3.7	Adolescent birth rate
	3.9	Mortality due to unsaf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Mortality due to air pollution (household and ambient)
Coverage	3.1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3.7	Family planning coverage
	3.8	UHC: RMNCHa tracers (family planning, antenatal and delivery care, full immunization coverage, health-seeking behaviour for suspected child pneumonia)
	3.7	Model life table systems
Risk factors/ determinants	2.2	Child stunting, child wasting, child overweight
	6.1	Access to safely managed drinking-water source
	6.2	Access to safely managed sanitation
	7.1	Clean household energy
	11.6	Ambient air pollution
	other	Part of targets in goals on poverty, education, gender etc.

출처: World Health Statistics, 2016.

44)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6,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의 표 재인용.

〈표 4-3〉 모자보건 관련 SDG 지표들의 비교, 북한, 남한, 그리고 지역별 평균<sup>45)</sup>

Impact Indicators	DPRK	ROK	WHO region <sup>8)</sup>							Global
			AR	RoA	SEAR	EurR	EMR	WPR		
3.1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82	11	542	52	164	16	168	41	216	
3.2 Under 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19	3	74	14	36	9	50	13	39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10	2	27	8	21	5	27	6	18
3.7 Adolescent birth rate (per 1,000 women aged 15-19)	-	1.3	99.1	48.6	33	16.6	44.5	14.2	43.9	
3.9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air pollution (per 100,000)	207.2	20.5	180.9	29.7	165.8	36.3	125	102.8	114.1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safe WASH services (per 100,000)	1.4	1.8	-	-	-	-	-	-	-
Coverage Indicators	DPRK	ROK	WHO region							Global
3.1	Proportion of birth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100	100	AR	RoA	SEAR	EurR	EMR	WPR	81
				59	95	81	99	79	97	
3.7	Proportion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who have their need for family planning satisfied with modern method (%)	89.8	-	55.7	82.8	71.4	76.7	60.8	87.2	75.7
3.2	Prevalence of U5 stunting (%)	19.10	2.50	33.1	6.5	31.6	-	24.7	6.4	21.9
	Prevalence of U5 wasting (%)	2.50	1.20	7	0.8	15.1	-	7.8	2.2	7.3
	Prevalence of U5 overweight (%)	2.30	7.30	3.5	7.2	3.8	-	5.7	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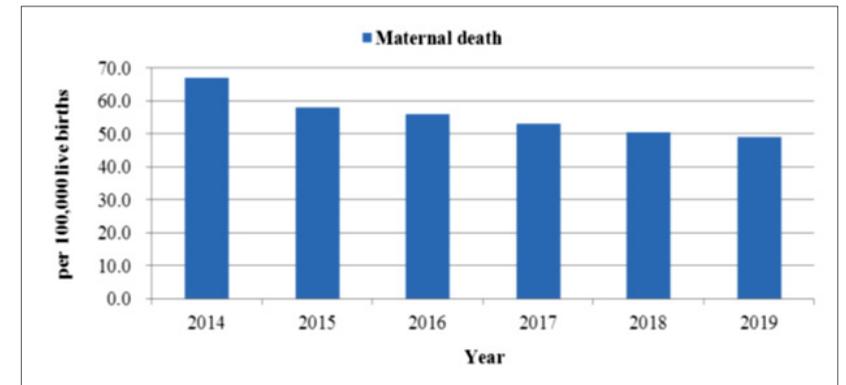
출처: World Health Statistics, 2019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제6장 표 재인용).

45)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9,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데이터 재조합.

지역별 평균값, 그리고 전세계 평균값과 북한의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지표들은 전세계 평균치보다 좋은 점수를 보인다. 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의 평균값보다 양호한 지표값을 갖는다. 모성 사망비, 5세 이하 아동 사망비, 신생아 사망비, 숙련된 보건의료인에 의한 출산비율, 현대적 피임법을 충족하는 수요의 비율, 5세 이하 아동의 급성, 만성 영양장애 비율도 모두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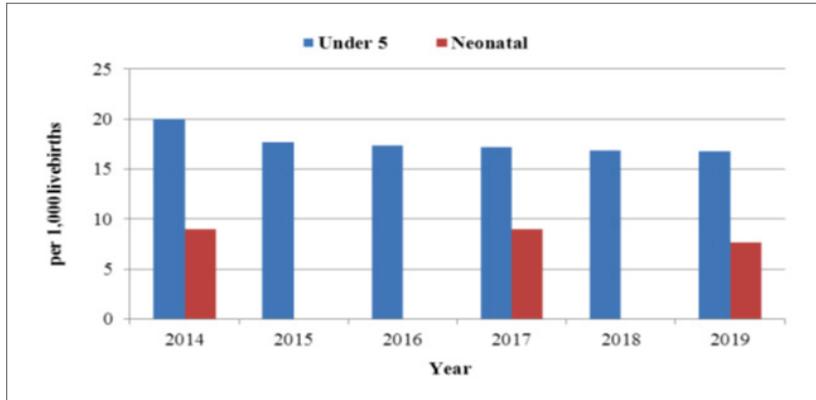
특히, VNR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가장 최근자료의 모성사망비, 5세 이하 아동사망률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 모두 개선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북한 모성사망비 연도별 현황 (2014-2019년)



출처: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그림 4-7〉 북한 5세 이하 아동 사망비, 신생아 사망비 연도별 현황 (2014-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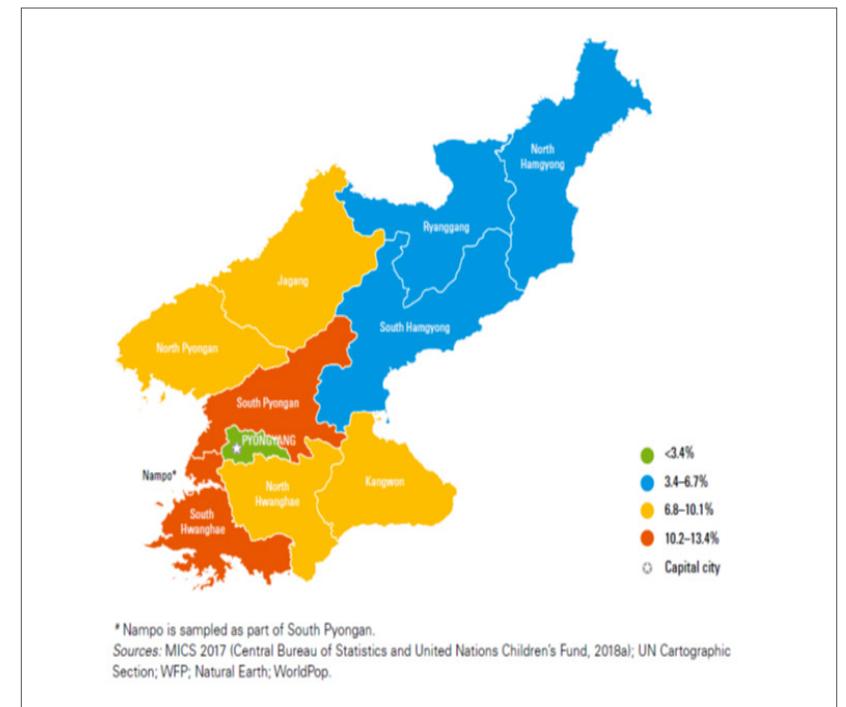


출처: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북한 모성사망비의 공식적인 마지막 조사자료는 2014년에 시행된 DPRK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에서 확인된 수치로 10만 명당 66명이다. 이후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점진적으로 더욱 개선된 것으로 VNR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9년에는 10만 명당 50명 이하의 모성 사망비를 보인다.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의 경우 2017년 UNICEF에서 시행한 MICS(Multiple Indicators Cluster Survey)자료에서 천명 당 15명으로 보고되었고, 신생아 사망률은 천명 당 9명으로 보고되었다. 2017년 이후의 자료 또한 VNR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의 경우, 15명보다 높은 수로 시작하여 약간의 감소를, 신생아 사망률의 경우, 9명에서 시작하여 역시 일부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모자보건 관련 지표들의 개선이 확인된 것이 사실이지만, 2020년 UNICEF에서 작성한 Country Office Annual Report를 보면, 여전히 북한은 한 시간에 한 명 꼴로 아동이 사망하고, 하루에 한 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실정

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극명함을 밝히고 있다. 하단의 그림은 MICS 조사에서 확인된 산모가 의료기간 외의 장소(집)에서 분만하는 비율을 도별로 비교하였다. 집에서 분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평안남도, 황해남도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평양으로 거진 1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모성사망비도 평양의 경우 10만 명당 39명, 황해북도는 61명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강도의 경우, 의료시설에서의 분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모성사망비는 86명으로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의료시설에서의 응급수술을 위한 역량이 떨어져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4-8〉 도별 의료시설 외의 장소에서 분만하는 비율



출처: UNICEF MICS, 2017년.

MICS 보고서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과거 2년 간 출산경험이 있는 93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 중, 도시의 경우 9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였지만, 시골은 87%만이 기관에서 분만을 하였고, 시골의 가정 분만에서는 사망비율이 74.3%, 도시는 58.5%의 사망이 발생하였다. 임신기간을 나누어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분만 과정과 분만 후로 55.8%에 달하며, 분만 과정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한 사망이 58.2%로 가장 높았다. 즉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이 이뤄졌을 때 응급상황의 처치가 필요함에도 응급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산모 사망원인의 가장 큰 이유였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분만비율을 높이고, 특히 시골지역에서의 의료기관 분만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28.9%,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지연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19.4%였다.

〈표 4-4〉 북한 산모의 분만장소와 분만개조자 동행 현황, 2017년

(단위: %)

	분만장소		분만개조자		
	의료기관	가정	전문인력		친척/친구
			의사/보조 의사	간호사/조산사	
전체	92.2	7.8	89.5	10	0.5
도시	95.4	4.6	95.3	4.7	0
시골	87.3	12.7	80.8	18	1.3

출처: UNICEF, MICS 2017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제6장 표 재인용).

북한의 중단기 보건의료전략 보고서의 모자보건 영역에서 산모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는 1) 필수의료 물품, 의약

품, 장비의 부족, 2) 고위험산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기술, 3) 혹은 한의 시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한 이송수단, 4) 일차의료기관의 제한된 기술과 수술역량으로 기술되어 있다. 북한은 의료기관에서의 분만 중 74.1%가 군과 리 인민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sup>46)</sup> 따라서 분만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수술역량이 산모의 사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물품의 구비와 의료인력의 기술향상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산모가 지역적 편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분만하도록 하는 노력과, 분만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일차의료기관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모성사망비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2) 감염성 질환 (TB, Malaria, Hepatitis B, NTD)

〈표 4-5〉 감염성질환 관련 SDG 세부목표와 지표<sup>47)</sup>

Type of indicator	SDG target	Proposed indicator
Impact	3.3	HIV incidence
	3.3	Tuberculosis incidence
	3.3	Malaria incidence
	3.3	Hepatitis B incidence
	3.3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3.9	Mortality due to unsaf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mortality due to air pollution (household and ambient)

46) FAO. *Midterm Strategy Pla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Sector DPRK, 2016-2020* (FAO, n.d.)

47)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6,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의 표 재인용.

Type of indicator	SDG target	Proposed indicator
Coverage	3.8	UHC: infectious diseases tracer (ART coverage, tuberculosis treatment, use of insecticide-treated nets, access to safely managed drinking-water source and sanitation)
	3.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capacity and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Risk factors/determinants	6.1	Access to safely managed drinking-water source
	6.2	Access to safely managed sanitation
	7.1	Clean household energy
	other	Part of targets in goals on poverty, education, cities, climate change etc.

출처: World Health Statistics, 2016.

〈표 4-6〉 감염성질환 관련 SDG 지표들의 비교, 북한, 남한, 그리고 지역별 평균<sup>48)</sup>

Indicators	DPRK	ROK	WHO region							Global
			AR	RoA	SEAR	EurR	EMR	WPR		
3.3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	-	1.24	0.16	0.08	0.25	0.06	0.05	0.26	
3.3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513	70	237	28	226	30	113	95	134	
3.3 Malaria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at risk)	0.2	0.1	219.4	7.3	7.1	0	14.8	2.5	90.8	
3.3 Hepatitis B surface antigen(HBsAs) prevalence among U5 (%)	0.53	0.69	3	0.2	0.7	0.4	1.6	0.9	1.3	
3.9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safe WASH services (per 100,000)	1.4	1.8	-	-	-	-	-	-	-	

출처: World Health Statistics, 2019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제6장 표 재인용).

48)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9,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데이터 재조합.

### ① 결핵

북한은 매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는 세계결핵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에서 2021년에도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에서 국가 단위의 결핵 유병률조사가 이뤄진 것은 2016년도로 북한주민 61,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의 결핵 유병률은 기존 추계수치보다 15% 정도 높은 10만 명당 634명으로 추산되었다. 2021년 세계결핵보고서에서 발표된 북한과 남한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과 결핵 발생률(2020년 자료)은 각각 남북한의 차이가 발생률의 경우 10배 이상, 사망률의 경우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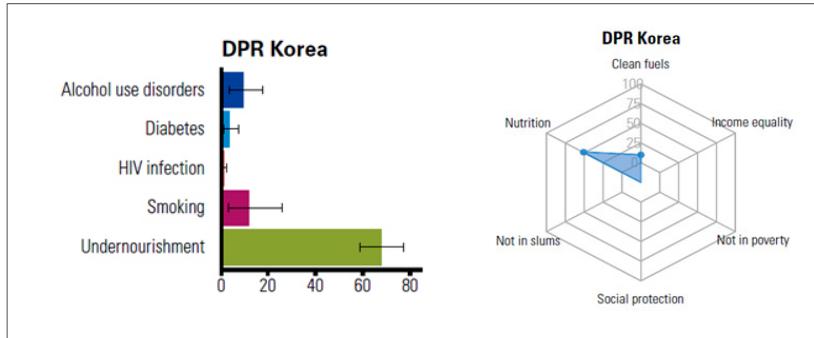
〈표 4-7〉 북한과 남한의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비교표

결핵 질병부담	북한	남한
결핵 발생률(10만 명당)	523명(2020년 자료)	49(2020년 자료)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10만 명당) (HIV-negative TB mortality)	80(2018년 자료)	3.8(2020년 자료)

출처: Global TB Report 2019, 2021년.

북한에서 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전국단위의 결핵 유병률 조사 결과 이후 매년 발표된 세계결핵보고서의 사망률 추정치는 증가하였다. 2020년 세계결핵보고서에서 결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적 요인들을 국가별로 조사하여 비교한 자료가 나온다. 결핵 발병에 중요한 영향 요인 5가지인 음주, 흡연, 당뇨, HIV감염, 영양결핍의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북한은 영양결핍의 악영향이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보건의료 외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여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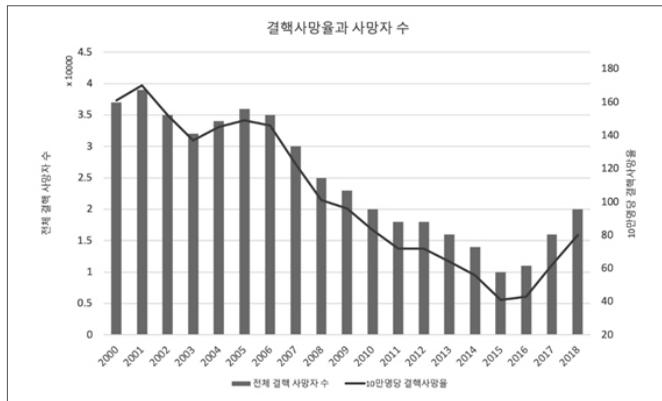
〈그림 4-9〉 북한 결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출처: Global TB Report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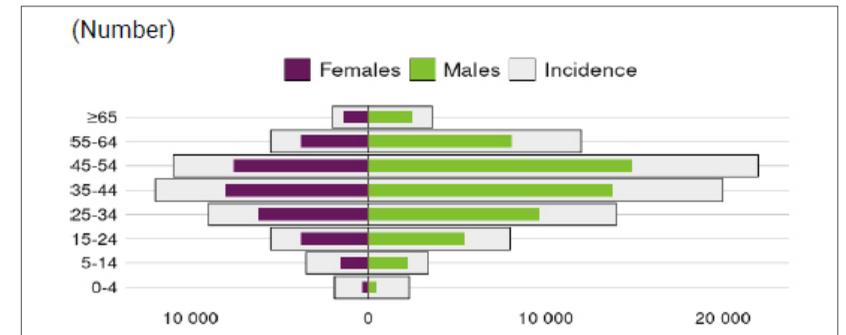
결핵의 발병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에 영양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했을 때, 2016년 이후 특히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결핵에 의한 사망률 증가는 북한 내 취약 인구군에게는 식량배급의 부족 및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인도적 지원 규모의 감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림 4-10〉 북한 결핵사망률과 사망자 수의 연도별 변화



출처: 북한보건의료백서 개정판, 2020년.

〈그림 4-11〉 북한 연령대 및 성별 결핵 발생자 수 분포



출처: DPRK Tuberculosis Country Profile 2021.

북한의 결핵 발생 환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확인하면, 여자의 경우, 35-45세 연령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5-55세, 그 다음이 25-35세 연령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남자의 경우, 45-55세 연령대, 다음으로 35-45세, 다음으로 25-35세, 그리고 55세-65세 연령대 순으로 분포를 보인다. 젊은 연령층의 환자 비율이 높음에도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특히 영양결핍의 영향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망률 증가 소견을 보이는 것을 보아 취약인구군의 경제사정 악화, 식량부족, 영양결핍 등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코로나 대응 집중으로 인한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다양한 추세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가와 같이 의료역량이 제한적인 국가일수록 기존의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결핵 또한 마찬가지로 결핵을 진단하는 보고건수는 줄었으나, 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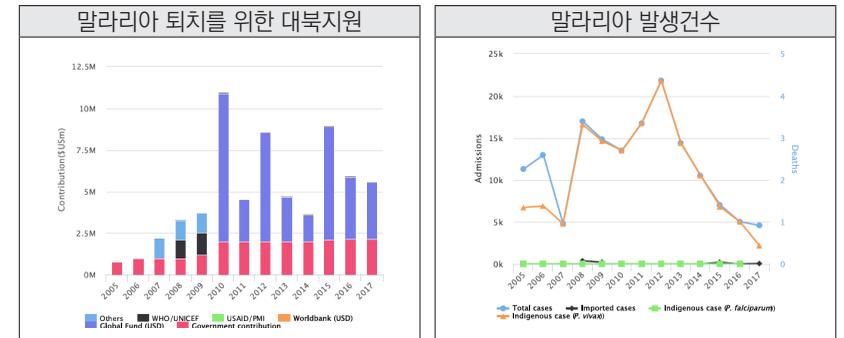
북한의 경우, 결핵의 보고건수는 2020년 중반 이후 다행히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아직 추정치조차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하였을 확률이 높다. 이는 취약인구군의 경제적 취약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식량부족 사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이다.

### ② 말라리아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과 유형은 1998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몇 차례의 유행이 있었고, 남한의 말라리아 유행규모나 외부의 말라리아 지원규모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해왔다.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건수는 2001년 296,540명에 달하면서 정점을 찍었고, 2002년부터 WHO의 지원<sup>49)</sup>을 받아 Mass Primaquine preventive treatment(MPPT)사업<sup>50)</sup>을 6년간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Global fund로부터 치료 및 예방사업을 위한 지원을 받아왔다. 2011년부터는 살충 처리된 반영구적 모기장(long-lasting insecticide-treated bed nets, LLIN)의 보급을 포함한 예방사업이 병행되면서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건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869명까지 감소하여 2012년 대비 91%의 감소를 보였다.<sup>51)</sup>

49)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WHO를 통해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 수행.  
 50) Kondrashin et al., "Mass primaquine treatment to eliminate vivax malaria: lessons from the past," *Malaria Journal* 13(1) (2014): 51.  
 51) 질병관리청, "2020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 「건강과 질병」 제14권 제17호 (2021).

〈그림 4-12〉 말라리아 대복지원 현황 및 말라리아 발생건수, 2005-2017년



출처: 북한보건의료백성 개정판 2020, WHO, DPRK country profile 2020.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제6장 그림 재인용)

WHO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받을 타격의 잠재적 영향을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사망률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중단의 여파로 인해 2018년 대비 2020년에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말라리아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으로 지원되고 있던 Global fund의 결핵 및 말라리아 의약품 및 물품이 2021년부터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결핵 및 말라리아의 발병 및 질병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크다.

### ③ HIV/AIDS

북한의 HIV 감염자의 공식적인 보고 수는 0명이다. WHO의 보고자료에서는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만, 북한에서 2013년부터 북한의 요청에 따라 HIV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위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민간단체(DoDaum)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 처음 HIV 양성자가 확인된 것은

1999년으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까지 8,362명의 양성자가 확인되면서 추정 유병률을 0.069%로 발표하였다.<sup>52)</sup> 북한은 위생방역소 중, 중앙위생방역소, 9개의 도위생방역소 그리고 13개의 국경지역 군 위생방역소에서 HIV 검사 및 역학조사의 책임을 지고 있다.<sup>53)</sup> 북한의 국가 전국에이즈 위원회(North Korea's National AIDs Commission)에 따르면 HIV의 전파는 수혈과정과 재사용되는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현재 도다움 민간단체는 3000명 이상의 AIDs 환자에게 Antiretroviral Therapy(ART)를 위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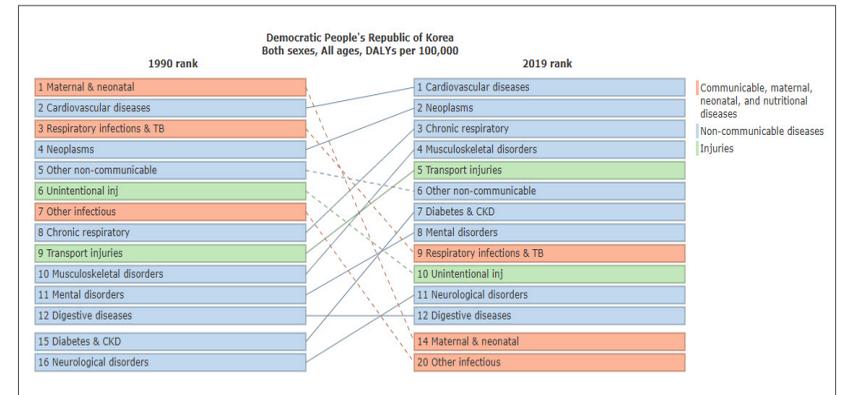
52)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의 보건분야 출판사이트 '메드아카이브 (medRxiv)'에 미국과 북한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내용.

53) FAO. *Midterm Strategy Pla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Sector DPRK, 2016-2020* (FAO, n.d.)

### (3) 비감염성 질환

#### ① 만성질환

〈그림 4-13〉 북한 질병부담 우선순위 변화 (1990년과 2019년 비교)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data<sup>54)</sup>.

1990년과 2019년 북한의 질병부담을 DALYs를 이용하여 순위를 매겼을 때, 과거 모성사망과 호흡기 감염성질환의 질병부담이 높았다면, 이제는 8위까지 모든 높은 순위에 비감염성질환의 질병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84%에 달한다고 WHO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만성질환으로 사망 비율의 평균인 70%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sup>55)</sup> 남한과 북한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54) IHM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HME, n.d., <http://www.healthdata.org/north-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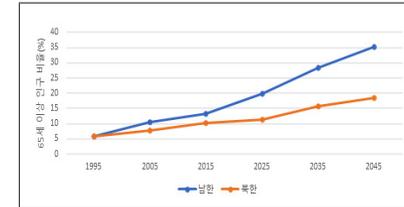
55) WHO, *Noncommunicable Diseases (NCD) Country Profiles 2018*, (WHO, September 2018).

을 비교해 보면, 남북한 사망률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사망원인이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경우 선진국 만성질환 질병부담의 특징인 높은 유병율과 장애부담에 비해 조기사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북한은 조기사망의 부담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및 위험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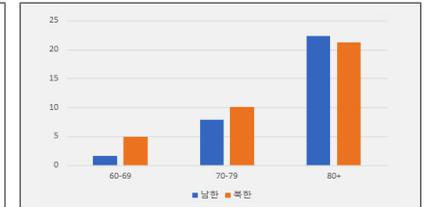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높고, 일차의료에서의 관리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실정에서 북한의 노인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0%정도로 추산되며, 14%를 넘는 고령사회는 2020년 후반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인구의 노령화의 속도는 남한에 비해 낮지만, 남북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비교했을 때, 적어도 1개 이상의 활동(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가기, 이동하기, 식사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60세 때부터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또한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인구구조를 보인다.

5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북한 보건의료 백서(2019년 개정판)』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9): 370-371.

〈그림 4-14〉  
남북한 노인인구 비율  
변화추이



〈그림 4-15〉  
남북한 노인 중 1개 이상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 비교



출처: DPRK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of DPRK 2014.

## ② 재난 및 응급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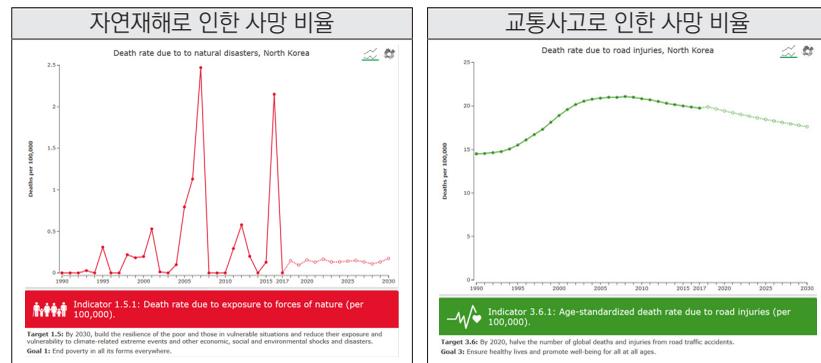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변화양상은 2000년 중반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현재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사망 및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5순위 안으로 진입하였다.<sup>57)</sup> SDG 목표별 지표들을 살펴볼 때에도 여전히 경고수준의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지표 중 하나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지표이다. 재난·재해에 의한 사망 또한 재해별 사망률이 반복적으로 높게 추산되었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재난재해 관리 부서가 총괄하는 관계 부처의 범위는 농업성, 수산성, 임업성, 국토환경 보호성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sup>58)</sup> 그리고 재난재해 관련 대응 중 보건의료영역은 사고로 인한 외상과 상해를 빠른 시간에 치료할 수 있는 시

57) IHM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HME, n.d., <http://www.healthdata.org/north-korea>.

58) "Enhancing Institutional Capacities in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Food Security in the DPRK roadmap," 2015.

시스템과 병원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병원 간 네트워크 속 협력, 환자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절한 조치와 치료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교통사고 났을 때 대응해야하는 시스템적 역량과 유사하다. 이는 병원의 수술적 역량 뿐 아니라, 정보교환 체계, 이송체계가 함께 기능을 해야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통신, 교통, 상호협력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기반이 부족하고 병원의 응급의학, 외과적 수술 역량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59)</sup>

〈그림 4-16〉 북한 자연재해 및 사고 인한 사망 비율 현황, 1990-2017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제6장 그림 재인용).

5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북한 보건의료 백서(2019년 개정판)』 중 “응급 및 재난의료”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9).

### 3. 무상의료체제 붕괴와 환자의 개인부담 증가

#### 1) 의료품 부족 및 무상의료체제의 기능약화

북한은 무상의료체제를 확립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194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1945-1950년의 시기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시기이며 국영계약공장을 건설하고 자체적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했던 시기이다.<sup>60)</sup> 그러나 1980년대부터 타 사회주의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과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타개책으로 북한은 의약품 생산 영역에서도 단기간에 적은투자로 생산규모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 지역에서의 중소규모 의약품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제약공장의 원료를 직접 공급하고 지방의 약초를 함께 활용하여 의약품 공급의 분권화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양적 생산량을 확장하는 동안 시설기준의 설정 및 의무화, 의약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 감독체계 확립과 같은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품 보관용기의 재사용을 법제화(의약품관리법 제32조)와 같은 양적확장에 치우친 정책강화로 의약품의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2006년에 비로소 WHO의 GMP기준을 도입하였지만, 모든 시설이 1950-60년대에 구축된 상황에서 구조적 변경을 통한 안정성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WHO에서 2008년 평양의 주사기 공장과 백신공장의 안정성 감찰을 위한 방문을 했을 당시 감찰 결과 ‘심각한 안전위

60) 김진숙, “북한 의약품 정책의 특징과 한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2012).

생상태'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약품 제조공장은 1990년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어 의약품에 대한 해외원조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의약품의 품질관리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북한산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며, 선호하는 의약품은 주로 한국산이나 국제단체를 통해 유입된 외국산 의약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의약품 유통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질적 연구를 통한 자료 외에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304명, 함경북도 출신 231명, 비 함경북도 출신 106명)으로 시행한 설문조사(2016년 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61)</sup> 북한 내 의약품의 원산지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 국내산이 20%, 유엔산(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품)이 28-29%, 그리고 중국산이 50% 전후로 가장 많았다.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 의약품은 일반 식량 및 생활필수품의 공급 루트와 같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 국경지역인 신의주, 혜산, 무산, 회령, 온성, 나진 등 국경선 중심으로 외화벌이 회사, 중국이나 화교 등 외국인 여행자, 밀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북한 자국의 국내산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간부들에 의해 약품의 일부가 갈취되어 유통되며, 병원에서도 지역 간부, 의사, 약사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유출되어 시장으로 유통된다고 조사되었다.

61) 류국현,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고려대학교, 2016).

## 2) 환자개인의 부담증가와 건강권 침해

북한은 2012년부터 개인약국 운영을 허용했다고 확인된다. 초기에는 시, 군 지역의 군·구역 인민병원 옆에 의약품관리소에서 건물과 국내산 약품을 공급하며 약국을 설립 운영하였고, 국가자격증의 약사만이 판매권한을 갖도록 제한하며 약국의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의약품의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북한 당국에서는 북한의 신흥부유층인 돈주들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물론 돈주들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약국에서도 의약품 관리소의 품질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약국은 약사자격증 없이도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국내산 뿐 아니라 외국제 약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판매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sup>62)</sup> 북한의 인민병원과 국영약국에서 충분한 의약품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개인약국의 규모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물품의 부족상황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접근성에 격차가 형성되는 북한의 상황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갖는다. 북한사회변동조사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설문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은 2018년부터이며,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했던 사항이 의약품 부족여부와 의료접근성 장애요인이었다.

62) 설송아, "北돈주, 의료시스템장악?...“약국” 직접운영 성행" Daily NK 2016년 11월 16일, <https://www.dailynk.com/%E5%8C%97%EB%8F%88%EC%A3%BC-%EC%9D%98%EB%A3%8C%EC%8B%9C%EC%8A%A4%ED%85%9C-%EC%9E%A5%EC%95%85%EC%95%BD%EA%B5%AD-%EC%A7%81%EC%A0%91%EC%9A%B4/>.

〈표 4-8〉 북한의료기관의 실태 (2018, 2019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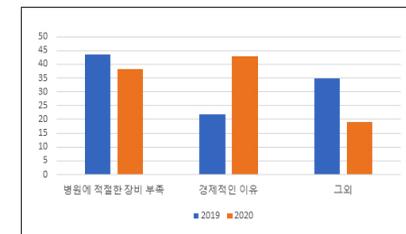
구분	리인민병원이나 진료소		시군(구역)인민병원		도 혹은 중앙병원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1	0	5	3	5	5
	1.1%	0%	5.7%	2%	5.7%	4%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2	6	3	13	4	12
	2.3%	5%	3.4%	11%	4.6%	10%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11	10	17	16	10	11
	12.6%	8%	19.5%	13%	11.5%	9%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28	33	30	28	9	16
	32.2%	28%	34.5%	24%	10.3%	13%
이용한 경험이 없다	43	64	32	52	56	68
	49.4%	55%	36.8%	45%	64.4%	59%
계	87	115	87	115	87	115
	100%	100%	100%	100%	100%	10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과 2019년 모두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본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수에서 병원에 의료진, 의약품, 장비 모두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병원은 리(일차병원) 그리고 시군 구역(이차병원) 인민병원이었으며, 도 인민병원의 의약품 및 장비 부족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처럼 말단의 일차의료기관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의 규모는 중앙이나 도급 병원에 비해 매우 적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북한보건의료 백서 개정판, 2019년 수록내용)에서 턱없이 적게 공급되는 의약품의 규모를 일부 가늠해 볼 수 있다. “2016년 종합진료소 약국에 공급된 해열제의 약이 한 분기에 1,000알 정도이다. 이를 세 달치로 나누면 한 달에 300알 정도 공급되는 것이며, 종합진료소 의사가 20명 정도인데, 의사가 10명만 되어도 한 달에 한 의사가 30알 뿐이 처방할 수 없다.”<sup>6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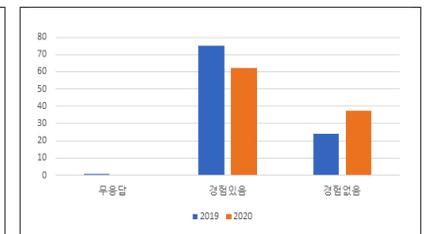
6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북한 보건의료 백서(2019년 개정판)』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9): 110-111.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를 2019년 이후 조사하였을 때, 2019년과 2020년 모두 전체 응답자의 18-19%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5명 중 1명 꼴로 의료이용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의료이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병원에 가도 적절한 장비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2019년 23명 중 10명의 답변)과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요인(2020년 21명 중 9명의 답변)이었다. 이와 함께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로 치료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0-75%에서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에는 116명 중 87명(75%)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020년에는 109명 중 68명(62.4%)에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병원 요인과 환자 개인의 요인 둘 다 공존하며 의료접근성의 장애요인과 서비스 이용에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7〉 의료기관 이용 진료거절 사유



〈그림 4-18〉 북한에서 자가치료 경험



#### 4. 결론

유엔제제와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과거 체제전환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만성적인 보건의료 재정부족으로 인한 비공식

의료시장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북한의 봉쇄 정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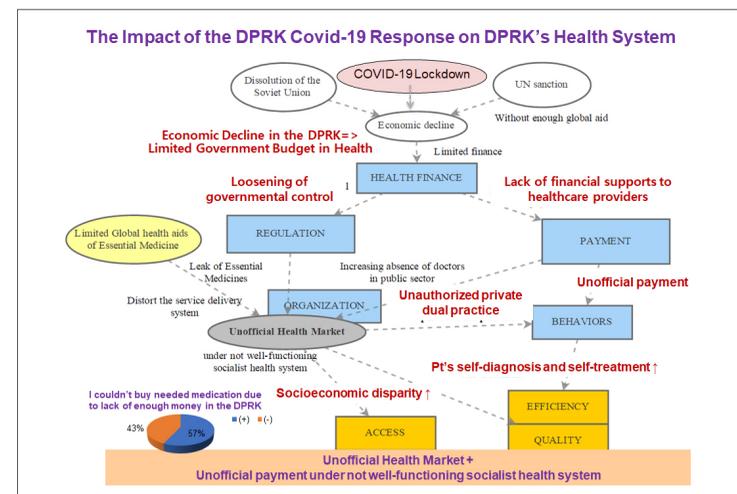
냉전시대에는 북한의 보건의료인들은 이데올로기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정성의학'이 북한의 사회주의 의학의 기초가 되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장기간 북한 정부에서 지불되는 의사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의업으로는 실질적인 생계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들은 병원에 형식상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서로의 비공식적 경제 활동을 묵인하였으며, 병원 밖의 비공식적 경제에 종사해야만 했던 의료인의 실정은 비공식적 의료시장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는 술과 담배 같이 환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주었던 선물은 가격이 정해지고 요구의 강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겪게 되어, 비공식 의료비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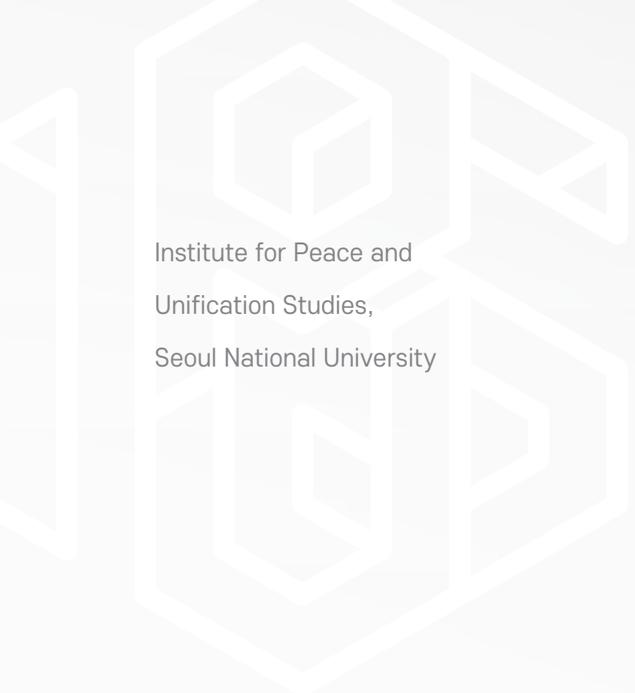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이러한 비공식적 의료비용의 활성화는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제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료인들도 비공식적 의료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환자 진료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환자의 경제적 수준은 북한 내 의료접근성의 괴리를 발생시켰고, 비공식적 선물은 환자 진료에도 차별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만성적인 보건의료 재원 부족으로 의료인에 대한 월급과 배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통제 약화로 비공식 환자 부담금, 비공식 개인진료, 약국의 장마당화 및 개인약

국 확대와 같은 비공식의료시장이 강화되었다. 사회안정망이 약화된 상태에서 비공식 의료시장의 확대로 북한 주민들은 자가진단-자가치료 행동을 보이며, 빈부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격차 증가를 유발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방역에 대한 영역에서는 현재도 제한적으로 통제 하에 작동하고 있지만, 지속적-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비감염성질환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유엔제재와 코비드 락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이동제한과 중국과의 교류 제한은 북한 경제를 더욱 위축하였으며, 위에서 진술한 비공식 보건의료시장의 확대와 빈부 및 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접근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북한의 코비드 락다운이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19〉 The Impact of Covid-19 on DPRK's Health System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교육 -  
새로운 세대**

## 제5장

# 교육 - 새로운 세대

| 김유연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 1. 서론

2011년부터 실시되어 온 북한이탈주민 조사 참여자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5-1>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조사 참여자의 탈북 연도를 기준으로 연령 평균의 추세를 그려보면, 2013년과 2018년에 탈북한 참여자들의 연령 평균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1980-1990년대생 젊은 세대를 북한에서는 ‘새 세대’라고 지칭하고 남한과 서양 언론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곤 한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시장거래를 더 익숙하게 받아들인 세대이며, 과거 사회주의적 습성을 체화한 배급세대와 다르게 비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이다. 인구비율 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에 정치적 자유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가져올 수 있는 ‘변혁의 세대’로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sup>64)</sup> 그러나

6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채경희,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2019), 314.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경희(2019)도 장마당 세대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그 원인은 이 세대가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 교육의 실태는 어떠하며 세대의식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림 5-1> 조사 참여자 연령 평균 추세선



본 장에서는 10년 동안 조사되어 온 문항 중 장마당 세대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하고, 주로 2020년 조사에 처음 포함된 교육 관련 문항들을 분석한다. 연령대별 분석 문항에는 『북한주민 통일의식』에서 조사되는 탈북 결심 이유와 남한문화 경험도가 포함된다. 교육 관련 문항에는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중학교 교육 실태와 교원에 대한 인식, 사교육 경험, 제1중학교와 대학교 진학 요인 등이 포함되는데, 사교육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2020년에만 조사되었다. 따라

서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국제기구 자료와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참고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9명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양적 조사자료에서 드러내지 못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의 최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문회의의 참여자들은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했으며, 자문회의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1:1 혹은 1:2로 참여자 거주지역 인근 공공장소에서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 문항 중 전체 10년 데이터를 종합한 문항은 많지 않지만, 새로운 세대의 특성과 최근 북한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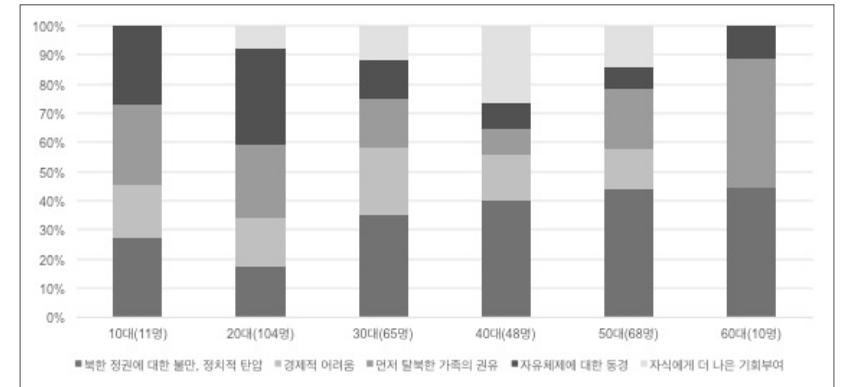
## 2. 새로운 세대의 특성

### 1)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문항에 포함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북한주민 통일의식』에서 분석된다. 2019년 조사결과로 2018년에 비해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는 응답이 증가했고,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이라는 응답이 감소했지만, 여기서는 2017-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310명의 응답을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2>와 같이 10대와 60대는 빈도수가 적어 비교가 어렵지만, 20대와 40-50대로 구분하여 비교해봤을 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0-50대는 탈북 결심 이유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20대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는 없었지만, 경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2>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 (탈북 연도 2017-2019년 기준)



자문회의에 참여한 20-30대 중 절반은 북한의 과도한 사회통제와 ‘세 부담(잡부금)’에서 벗어나고자 탈북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탈북한 20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듣고 싶은 것도 못 듣고,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 보”는 현실 때문에 북한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고 고백했다. 장사를 했던 청진 출신 20대 여성과 해산 출신 30대 여성은 인민반과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에서 매일 같이 돈을 내라고 독촉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는 못 해도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북한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이후 사실상 시장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전히 거미줄 같은 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틈타 권력기관들은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 안에

서 생존하기 위한 뇌물 공여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sup>65)</sup> 청년세대의 탈북 동기를 단편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이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외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그러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체제를 동경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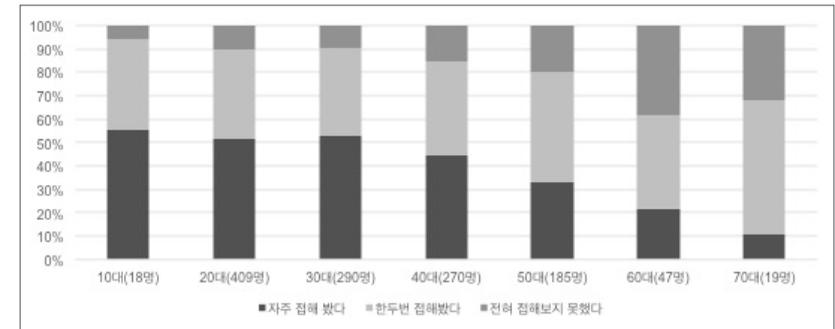
## 2) 연령대별 남한문화 경험도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2011년부터 참여자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자주 접해봤다’라는 응답은 2015년 조사 당시 5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9년에 비해 2020년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5년 북한이 ‘불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신설해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후로 2016, 2017년 조사에서 ‘자주 접해봤다’는 응답의 하락세가 뚜렷했다.<sup>66)</sup> 탈북 연도 기준 2010-2020년까지의 응답 총 1,238건을 10-70대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그림 5-3>과 같다. 10-30대의 남한문화 경험도는 ‘자주 접해봤다’가 50%대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40-70대에서는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의 비율이 높아졌다.

65) 박형중·전현준·박영자·윤철기,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66) 정동준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8』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68;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80-81.

<그림 5-3> 연령대별 남한문화 경험도 (탈북 연도 2010-2020년 기준)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오가는 북한 보따리장수들, 상인들에 의해 북한에도 한류가 유입되었다. 한류가 북한 주민 및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북한이탈주민 대상 30세 이하 그룹과 31세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한 이용희(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한류를 더 많이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sup>67)</sup> 자문회의에서 2019년 탈북한 해산 출신 40대 여성은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안 하고 한국 영화를 본다고 언급했으며, 2017년 탈북한 평양 출신 40대 남성도 주로 고급중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한국 콘텐츠를 몰래 보고 유통한다고 말했다. 문화 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적극적인 청년층은 북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말투, 패션, 노래 등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시기별 변화를 보기 위해 <그림 5-3>을 참고하여 10-30대와 40-70대로 나눈 후 북한 청년층과 장년층의 남한문화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던 2015-2017

67)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151-191.

년의 경우 '자주 접해봤다'는 응답이 10-30대는 이전 53.6%에서 52.2%로 소폭 감소한 반면, 40-70대는 이전 37.1%에서 33.3%로 3.8% 감소했다. 비법(불법) 국제통신죄 제정에 대한 효과가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에서 더 발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8-2020년에는 오히려 40-70대의 '자주 접해봤다' 응답이 증가했고, 10-30대에서는 감소하였다. 김정은 집권 후의 한국 콘텐츠 시청 단속이 청년층에게는 장기적으로 약간의 영향을 끼쳤고, 장년층에게는 일시적인 영향만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민 통제가 일상화된 북한사회에서는 단속 강화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남한문화 경험도는 연령대별 차이를 보인 반면 남한문화 친숙도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북한 주민 통일외식』에 따르면 2014년 조사 이후로 남한문화가 '친숙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남한문화 경험도 변화나 연령대와 별개로 한류를 친숙하게 느끼는 경향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 시기별 10-30대와 40-70대의 남한문화 경험도

탈북 연도	남한문화 경험도	10-30대	40-70대
2011-2014 (N=555)	자주 접해봤다	53.6%	37.1%
	한두 번 접해봤다	37.6%	46.4%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8.8%	16.5%
2015-2017 (N=353)	자주 접해봤다	52.2%	33.3%
	한두 번 접해봤다	37.1%	46.5%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0.7%	20.2%
2018-2020 (N=228)	자주 접해봤다	49.2%	42.6%
	한두 번 접해봤다	42.1%	39.6%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8.7%	17.8%

### 3.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북한은 스스로 '교육의 나라'라고 평가할 정도로 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56년 "동방에서 제일 먼저" 4년제 초등의무교육제를, 1960년에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했다.<sup>68)</sup> 그러나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되어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 실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북한 당국에서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기조를 내세우며 과학기술교육과 수재교육을 강조했다.<sup>69)</sup> 최근 연구들은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는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학제 개편이다. 또한 '정보산업시대'와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육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왔다. 여기서는 설문조사 결과 및 기타 데이터,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 최근 교육현장 실태와 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68)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65;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3), 61-67.

69)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09-131.

### 1) 출석률 및 문해율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학교 등록률이나 출석률이 정확히 몇 %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2000년대 들어 식량난이 개선된 이후 학교 등록률도 다시 상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유아교육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유니세프의 2009, 2017년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보고서는 소학교 1학년 재학 아동 중 전년도에 유치원 출석한 아동 비율을 보고하고 있고, 북한에서 2021년 발표한 VNR에는 공식 소학교 입학연령 1년 전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나와 있다. 두 보고서의 2017년 데이터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유치원 높은반 1년에 대한 참여율이 97%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975년부터 학령 전 유치원 높은반 1년을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하여 40년 넘게 유아교육을 강조한 것이 참여율에 반영되었으며, 유아교육의 질이나 시설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의 역경을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70)</sup> 2009년과 2017년 유치원 출석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VNR에 따르면 2019년 참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MICS는 유니세프의 지원 하에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성별, 거주지, 지역, 모의 최종학력, 자산 지수에 따른 비율도 제시하고 있다. 남아보다 여아의 유치원 출석률이 조금 더 높고, 2017년 데이터의 경우 자산 지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유치원 출석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 간 차이나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70) 김지수 외,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9).

〈표 5-2〉 소학교 1학년 재학 아동 중 전년도 유치원 출석 아동 비율

구분		2009	2017
성별	남	98.1	97.9
	여	99.7	98.8
거주지	도시	98.9	98.3
	농촌	98.8	98.4
모의 최종학력	중등교육	99.0	98.0
	고등교육	98.2	100.0
자산 지수	하위 20%	-	96.2
	중위 40%	-	98.5
	상위 40%	-	99.1
합계		98.9	98.3

출처: CBS and UNICEF, 『DPR Korea MICS Survey Findings Report 2017』, 표 ED.1; CBS, MICS Report in DPRK, 2017, 표 LN.2.1 중 일부 발췌

〈표 5-3〉 소학교 학령 1년 전 체계적 교육 참여율

성별	2017	2019
남	97.9	99.8
여	96.3	99.9
합계	97.1	99.9

출처: Government of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21.

초등교육의 경우 유네스코 UIS 홈페이지에서는 성별에 따른 총 등록률을 제시하고 있고, 유니세프 MICS 보고서에서는 초등교육 입학률과 출석률, 학교 밖 아동 비율 등을 보고하고 있다. UIS 홈페이지에는 2018년 기준 초등교육 총 등록률이 남성 89.35%, 여성 89.28%이며 총 89.32%라고 나와 있다.<sup>71)</sup> 이는 2017년 MICS에서 보고하고 있는 소학교 순 출석률보다

71)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21년 11월 19일 접속, <http://uis.unesco.org/en/country/kp>.

낮고, 1학년 입학률보다는 조금 높다. 연령별 순 출석률을 보면 소학교 입학연령인 7세일 때는 87.7%이다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여 11세일 때는 100%에 달한다. 자산 지수를 살펴보면 소학교 입학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순 출석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문회의에 참여한 혜산 출신 20대 남성 두 명은 소학교 출석률이 약 90%일 거라고 추측하며 부모들이 한글과 기초적인 산수를 배우고 “영어도 좀 알게 되”는 소학교 교육을 중시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결석한 학생에게는 담임교원과 같은 반 학생들이 집으로 찾아간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가정형편에 따라 소학교 입학률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석 학생에 대한 교원과 학생들의 독려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석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4〉 2017년 소학교 입학률, 순 출석률, 학교 밖 아동 비율

구분		소학교 입학률	소학교 순 출석률	학교 밖 아동
성별	남	88.1	96.7	3.3
	여	86.7	96.6	3.4
거주지	도시	88.1	96.8	3.2
	농촌	86.4	96.5	3.5
연령	7	-	87.7	12.3
	8	-	98.9	1.1
	9	-	99.6	0.4
	10	-	99.5	0.5
	11	-	100.0	0.0
모의 최종학력	중등교육	87.3	96.6	3.4
	고등교육	88.0	96.8	3.2
자산 지수	하위 20%	85.2	96.7	3.3
	중위 40%	88.1	96.6	3.4
	상위 40%	87.7	96.8	3.2
합계		87.4	96.7	3.3

출처: CBS and UNICEF, 『DPR Korea MICS Survey Findings Report 2017』, 표 LN.2.2, LN.2.3 중 일부 발췌

중등교육 또한 유네스코 UIS 홈페이지에서 성별에 따른 총 등록률을 제시하고, 유니세프 MICS 보고서에서 순 출석률,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등을 보고하고 있다. UIS 홈페이지에는 2015년 기준 중등교육 총 등록률이 남성 91.71%, 여성 92.87%이며 총 92.27%라고 나와 있다.<sup>72)</sup> 2017년 MICS에서의 순 출석률은 그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는데, 초급중학교는 96.1%, 고급중학교는 94.8%로 고급중학교가 비교적 낮았다. 자문회의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때까지는 출석률이 좋으나 고급중학교 들어가면 집안 일손을 돕느라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청진 출신 20대 여성은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님들 손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 중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고, 혜산 출신 20대 남성이 시골의 경우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표 5-5〉를 보면 도농 간 출석률이 유치원, 소학교 단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결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혜산 출신 30대 여성은 학교를 결석하면 교사나 학생들이 집에 찾아오는데도 학교에 돈 내기가 부담스러워 학교를 못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교원과 학생들이 결석 학생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연령이 올라갈수록 출석률은 좋아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관심조차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

72)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21년 11월 19일 접속, <http://uis.unesco.org/en/country/kp>.

〈표 5-5〉 2017년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순 출석률

구분		초급중학교 순 출석률		고급중학교 순 출석률	
성별	남	97.8		94.7	
	여	94.4		94.9	
거주지	도시	96.8		95.0	
	농촌	95.4		94.5	
연령	11	88.4	14	86.5	
	12	97.1	15	98.2	
	13	99.4	16	99.6	
모의 최종학력	중등교육	96.1		95.0	
	고등교육	96.2		94.1	
자산 지수	하위 20%	97.4		94.6	
	중위 40%	94.9		95.6	
	상위 40%	96.7		94.1	
합계		96.1		94.8	

출처: CBS and UNICEF, 『DPR Korea MICS Survey Findings Report 2017』, 표 LN.2.4, LN.2.6 중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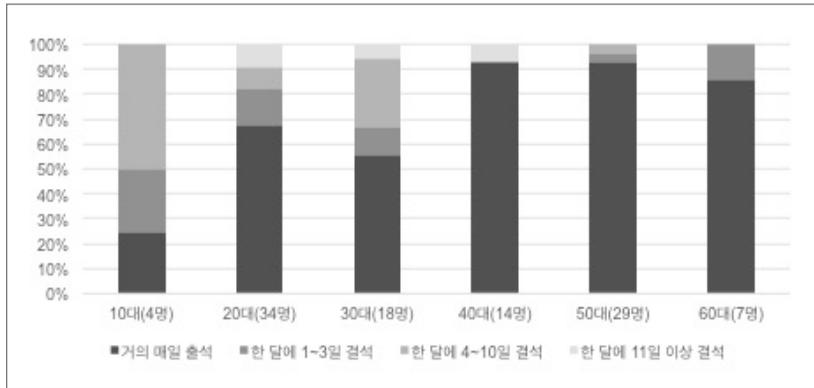
이상 살펴본 외부자료에서는 2009, 2015, 2017, 2018, 2019년의 유아·초등·중등교육 출석률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2020년 조사에서는 중등교육에 초점을 맞춰 시기별 출석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다녔던 북한이탈주민 108명에게 본인의 재학 시 학교를 얼마나 자주 갔는지 물었다. 그 중 74.8%는 ‘거의 매일 출석’했다고 응답했고, 한 달에 1~3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3%, 4~10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였으며, 11일 이상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였다.

〈표 5-6〉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구분	응답자 수, %
거의 매일 출석	80 (74.8%)
한 달에 1~3일 결석	10 (9.3%)
한 달에 4~10일 결석	11 (10.3%)
한 달에 11일 이상 결석	5 (4.7%)
무응답	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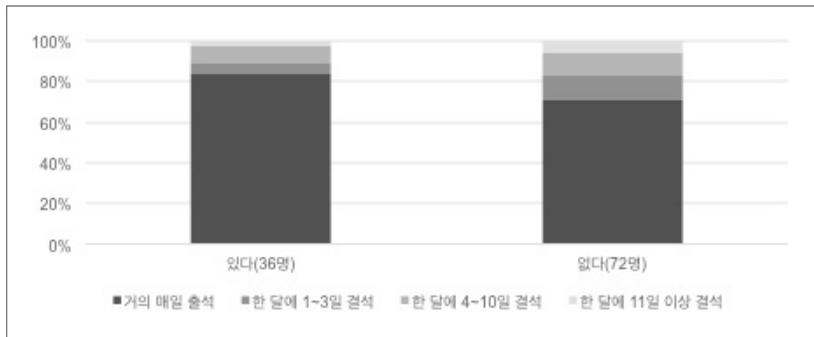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5-4〉와 같이 ‘거의 매일 출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0대보다 10-30대에서 더 낮고, ‘한 달에 4~10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높았다.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난의 행군기 이후 중학교에 진학했던 세대에서 출석률이 더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0년대의 식량난이 학교 출석률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문회의 참여자 중 출신지역에 따라 고난의 행군 당시 학교 출석률에 대한 진술이 달랐는데, 평양 출신 40대 여성은 고난의 행군 때도 학생들이 학교에는 다 나왔다고 증언했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은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기근으로 학교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생활이 많이 좋아”져서 신의주 시내 학교는 거의 100% 출석하며 시골 학교는 10% 정도의 아이들이 가정의 일손을 돕느라 결석한다고 말했다.

〈그림 5-4〉 연령대별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본인이나 자녀의 사교육(과외공부)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교 출석률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카이제곱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중학교 출석률이 없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다소 높아 교육열과 학교 출석률 간 약한 상관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사교육 경험 관련해서는 아래 4절에서 더 자세히 분석한다.

〈그림 5-5〉 사교육 경험에 따른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다음으로 북한 학생들의 문해율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해방직후부터 당에서 추진하는 토지개혁, 노동법령 제정 등 각종 선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다. 1949년 3월 이 운동은 대상이었던 230만 명이 모두 글을 깨쳤다고 발표하며 일단락되었는데, 당시 12세 이상, 50세 미만 북한인구 약 540만 명의 42%가량이었다. 당시 문해교육의 목표는 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능력을 갖추는 것이었고 정치 의식화와 함께 이루어졌다.<sup>73)</sup>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의무교육제도를 빠르게 확립하면서 문해율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 학생들의 최근 문해율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2017년 MICS 보고서에 나와 있고, VNR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다. MICS에서는 북한 7-14세 아동청소년 표본집단에게 기초 읽기기술과 기초 산수기술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MICS 지표는 SDG 4.1.1(a) 목표인 ‘읽기 및 수학에서 최소 숙련도를 달성하는 2/3 학년 아동의 비율’에 대한 국가 정책 개발 및 SDG 보고를 위해 설계되었다. 북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읽기는 94.8%가 기초기술을 익힌 반면, 산수는 81.9%만이 기초기술을 익혀 산수 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 모의 최종학력, 자산 지수에 따른 차이는 크게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도시 거주 학생의 문해율이 농촌 거주 학생보다 낮게 나왔다. 읽기 문해율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아지는 반면, 산수 문해율은 소학교 때 개선되나 초급중학교 말기에 가면 다시 하락하였다.

73) 이항규,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중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형성: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서울: 경인문화사, 2006), 9-21.

〈표 5-7〉 2017년 7-14세 아동청소년의 읽기, 산수 문해율

구분		읽기	산수
성별	남	94.7	80.1
	여	94.8	83.8
거주지	도시	93.8	80.4
	농촌	96.1	83.9
학년	소학교 2/3 이수	93.5	83.4
	소학교 말기	97.5	89.0
	초급중학교 말기	97.5	83.2
모의 최종학력	중등교육	94.8	81.8
	고등교육	94.6	82.4
자산 지수	하위 20%	97.3	81.2
	중위 40%	93.8	83.3
	상위 40%	94.2	80.9
합계		94.8	81.9

출처: CBS and UNICEF, 『DPR Korea MICS Survey Findings Report 2017』, 표 LN.4.1, LN.4.2 중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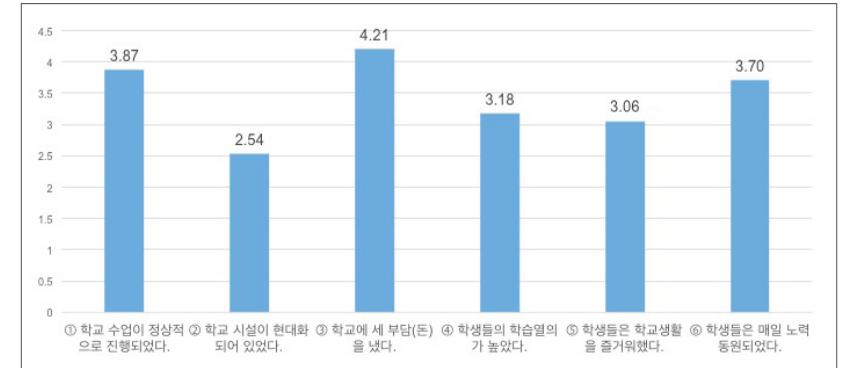
## 2) 중학교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 이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문의 공적 투자가 급격하게 회복되지 못했다. 국가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는 동안 사부담 공교육비가 급증했는데, 학생 개인이 소모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확보 등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sup>74)</sup>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화하고 정보화할 것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당국 차원의 지원을

74) 조정아, 111.

늘리기보다는 교장, 부교장, 교원들의 ‘학교 단위 자강력제일주의’와 학부모, 후원단체들을 통한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sup>75)</sup>

〈그림 5-6〉 탈북 직전 1년 중학교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본 연구 2020년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 본 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학교 수업 진행, 학생들의 학습열의, 학교생활의 즐거움, 노력동원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답변이 나온 반면, 학교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로 낮은 점수가 나왔고, 학교 세 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로 높은 점수가 기록되었다.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학교 수업 진행이나 학교 시설은 고난의 행군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에는 교원도 수업에 빠지거나 “시간 때우기 위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교원이 학교를 안 나오는 경우는 없으며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지역별로 차이

75) 김지수 외, 161-189.

가 있기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평균적으로 학교 시설이 충분히 현대화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자문회의 결과 전반적 시설은 과거보다 개선되어 학교에 컴퓨터, TV 등의 기자재가 갖추어졌다고 한다. 2017년 MICS는 15-19세의 청소년과 성인 중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비율이 여성 61.6%, 남성 63.7%라고 보고하고 있다.<sup>76)</sup> 청진 출신 20대 여성은 “괜찮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모두 노트북을 장마당에서 사서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시장화와 사유재산 축적으로 학생들의 정보화 기기 보유도 보편화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학교 시설 개선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보다 학생들로부터, 즉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세 부담에 대한 증언은 지역 구분 없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아래는 2019년에 탈북했고 학부모였던 혜산 출신 30대 여성과의 자문회의 내용이다.

우리 딸 (한국에) 오기 전에는 개학하면 아이들이 컴퓨터도 사야하고 학교 교육용 TV, 컴퓨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피아노? 풍금? 이런 교재를 사자면 그걸 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 명씩 풍기거든요? 누구한테 얼마라는 걸. 그래서 그 얼마라는 데에서 바치고 그게 이제 분단위원장하고 학급반장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제일 잘 살고 좀 공부보다도 경제적으로 담임선생님을 밀어주고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본 시키거든요. 부모 열성하고. 그니까 만

76)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7), 34-35.

약 그때 인민비 100원씩 낸다면 그 사람들은 자원적으로 300원 낼 수 있고, 500원 낼 수 있고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데 교육비에서 지원은 안 해주면서 이렇게 검열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걸 다 갖추어야만 되고 안 갖추면 또 지적을 하거든요.

위 자문회의 참여자의 진술은 북한 학교에서 세 부담을 걷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학기 초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걷어서 구비해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당국에서 검열을 나왔을 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청진 출신 20대 여성은 “교육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에 과제를” 주면 학교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학생들에게 세를 걷는다고 말했다. 한편, 혜산 출신 20대 남성은 세 부담을 많이 걷으면 학생들이 신소하기도 하고<sup>77)</sup> 교육당국에서 감사를 오기 때문에 시골 학교의 경우 돈을 걷기보다 학생들을 시켜서 들쭉등을 채집해 외화벌이를 한다고 증언했다. 학부모였던 평양 출신 40대 여성은 교원들이 “공적으로 돈 소리 했다가는 짤리니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뒷돈을 낸다고 말했다. 자문회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학교에서 세 부담을 과도하게 걷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그럴 경우 학생들이 교육당국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측이 관습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부터 지역의 행

77) ‘신소’는 북한에서의 ‘민원’, ‘제보’ 등으로 해석 가능하고,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 등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출처: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파주: 창비, 2020), 120,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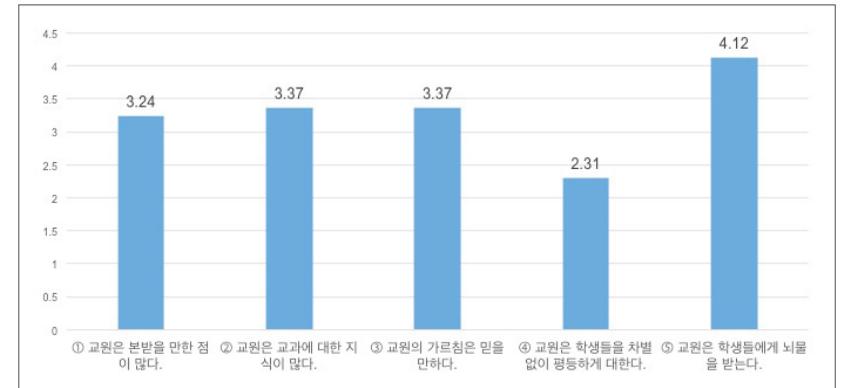
정기관, 기업소, 농장, 학부모 등의 지원으로 보통교육 시설을 개선해왔던 북한의 관습과 도농 간 격차를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주의 무상교육의 원칙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북한의 교원은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서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본보기가 될 것을 요구받아 왔으며, 그만큼 높은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 당시 교원들에 대한 배급이 끊기면서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물질 요구자 혹은 지시 전달자’가 되어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sup>78)</sup>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교원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교원들의 생활과 지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 본 결과는 <그림 5-7>과 같다. 본받을 만한 점이 많고,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교사의 가르침이 믿을 만하다는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답변이 나온 반면,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로 낮은 점수가 나왔고, 뇌물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로 높은 점수가 기록되었다.

78) 김정원 외,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그림 5-7> 탈북 직전 1년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모두 교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했다.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교육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들의 생계를 국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sup>79)</sup> 고난의 행군기에 시작된 교육 부패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원은 학생들에게 뇌물을 받는데, 4명의 자문회의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증언한 것은 그때 학급 반장과 분단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에 따르면 그들의 학부모는 학부형회 책임자인데, 그렇게 간부가 될 때부터 으레 담임교원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교원의 생일이나 결혼식 등이 있을 때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바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평양 출신 40대 여성은 교원들이 공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가는 학부모들에게

79) 김지수 외, 143-161.

신고당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풍긴다”고 했다.

교원들이 경제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권위는 하락해 있고,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한다. 2017년 탈북했고 학부모였던 평양 출신 40대 여성에 따르면 교원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뇌물을 받은 아이들은 잘 챙기고, 못 받은 아이들은 “소홀히” 하면서 차별한다. 그 자녀의 담임교원의 경우 “물건 양이나 돈 가치를 신경 안” 쓰고 “양말 하나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탈북했고 학부모였던 혜산 출신 40대 여성은 선생님들이 학급반장과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서 교원들에게 “고운 학생과 미운 학생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청렴과 공평을 요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평양 출신 40대 남성은 교원들이 뇌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다 보니 학생들 사이의 서열에서도 경제력이 중요해져 “물질적인 것으로 망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청진 출신 20대 여성은 과거에 교원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을 예뻐했다면, 요즘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돈이 검비돼야” 학급반장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러한 풍토를 이해하고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과 혜산 출신 40대 여성에 따르면 오히려 과거보다 낮아진 출산율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져 학부모들의 교원들에 대한 열성이 “기가 막히”고 학부모들 간 경쟁이 있을 정도로 고 한다. 지역에 따라, 교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하락한 한편, 일부 교원들은 학부모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아 “잘 사는 편”에 속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사교육 경험

고난의 행군기 이후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경제적 계층이 분화되면서 과거에는 예체능 분야를 중심으로 드물게 행해지던 사교육이 점점 더 확산되었다. 과학기술 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가 확대 설립되면서 중등 교육체계가 “일반중학교 - 구역 제1중학교 - 시·군 제1중학교 - 평양 제1중학교”로 서열화되었고, 자녀의 출세를 위해 교육비를 투자하는 부유 계층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시장이 양산되었다. 사교육 경험은 『북한사회변동』에서 2014년부터 조사되었으며, 2018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up>80)</sup> 2020년 조사부터는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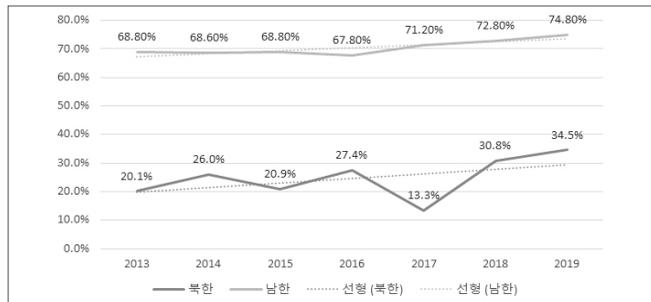
자문회의 참여자 중 자녀를 양육했거나 조카가 있던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문화가 생긴 지 오래 되었다고 증언했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에 따르면 “잘 사는 집은 다 개별지도”를 시킨다고 한다. 유치원생 때부터 악기 연주와 공부 지도를 받으며, 고급중학생이 되면 체육도 많이 시킨다. 학교 담임교원이 부업으로 방과후 돈을 받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일반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방처럼 집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교육비는 한 달에 중국돈 50원을 냈다는 혜산 출신 여성부터 200원을 냈다는 신의주 출신 여성까지 다양하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더 관심을 쏟는 이유로 자문회의 참여자 중 다섯 명은 고난의 행군 이후 출산율 감소를 지적했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은 “지금은 애를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식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

80) 김학재 외, 『북한사회변동 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67-69.

게 되었다. 경제적 계층의 분화가 나타나고 간부사업에서 학력을 중시하자 2000년대 들어 확산된 사교육 추세<sup>81)</sup>가 낮아진 출산율, 그에 따른 교육열과 맞물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사교육 경험과 남한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그림 5-8>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연도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비교해보면 남한은 68.8%에서 시작해서 2019년 74.8%까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20.1%에서 시작해서 2019년 34.5%까지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남한의 사교육 참여율이 북한이탈주민 사교육 경험율의 약 3.42배였으나, 2019년에는 약 2.17배로 여전히 차이가 크지만 간격은 줄었다. 남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66.5%로 급감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로 북한 상황에 대한 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8> 북한이탈주민의 사교육 경험 및 남한 사교육 참여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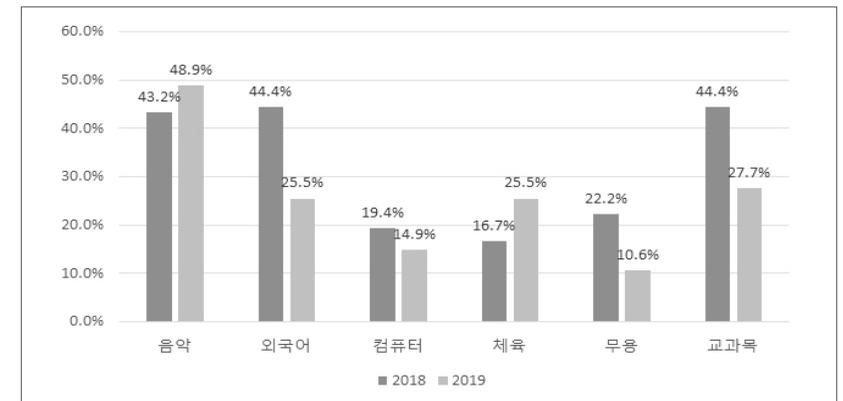


출처: 남한 데이터 - 통계청 KOSIS, <<https://kosis.kr>> (2021년 12월 21일 접속).

81) 조정아, 114-117.

2018,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사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과외공부를 시키거나 받아봤던 과목을 모두 선택해달라고 했을 때 결과는 <그림 5-9>와 같다. 빈도수가 적어서 북한 전반의 추세를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 2018년에는 ‘외국어’와 ‘교과목’, 2019년에는 ‘음악’이었다.

<그림 5-9> 사교육 분야별 경험 (탈북 연도 2018, 2019년 기준)



2014년부터 조사된 사교육 경험에 대해 결측치를 제외하고 2013-2019년에 탈북한 761명의 응답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사교육 경험을 대입하고 독립변수로는 교육수준, 성별, 연령대, 장사경험, 당원 여부, 장마당세대 여부, 남한친척 유무, 공식소득, 비공식소득을 설정하였다. 사교육 경험은 “있었다”를 1로 코딩하였는데, 2020년 조사를 제외하면 모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는지만 조사했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대부분 사교육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수준은 고등교육 이상일 경우 1로, 성별은 여성일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연령대는 탈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4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진다. 장사 경험은 “있다”를 1로, 당원 여부는 당원이었을 때 1로 코딩하였다. 장마당 세대 여부는 1985년 이후 출생자를 장마당세대로 보아 1로 처리했다. 남한 친척 유무의 경우 1이 “있다”에 해당된다. 공식소득, 비공식소득은 모두 로그화한 값이다. 이를 종합한 기술통계표는 <표 5-8>과 같다.

<표 5-8> 사교육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사교육 경험	857	0.254376	0.435764	0	1
교육수준	1,234	0.290114	0.453999	0	1
성별	1,241	0.600322	0.49003	0	1
연령대	1,167	1.268209	1.206419	0	4
장사경험	1,236	0.694175	0.460943	0	1
당원 여부	1,228	0.153095	0.360225	0	1
장마당세대	1,241	0.410153	0.49206	0	1
남한친척 유무	1,238	0.573506	0.494767	0	1
공식소득	1,203	3.399698	4.202564	0	16.1181
비공식소득	1,186	9.111736	5.992138	0	18.064

위의 변수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교육수준, 장사경험, 비공식소득이 사교육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사경험이 있을수록, 비공식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시장화와 그에 따른 계층 형성으로 자녀를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사교육이 확산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남한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결과와

도 일맥상통한다.<sup>82)</sup> 북한에서는 아직 남한에서만 사교육 참여가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사경험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고학력의 학부모일수록 자녀를 과외지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에서의 사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으나, 일반적 논리를 따르면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5-9> 사교육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	0.733** (0.281)
성별	0.421 (0.251)
연령대	0.183 (0.141)
장사경험	0.538* (0.274)
당원 여부	0.167 (0.174)
장마당세대	-0.280 (0.338)
남한친척 유무	0.0665 (0.205)
공식소득	0.0106 (0.0226)
비공식소득	0.0791*** (0.0101)
상수	-3.426*** (0.437)
관측치	761

=\* p<0.05 \*\* p<0.01 \*\*\* p<0.001"

82)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5), 1-27.

## 4. 제1중학교 및 대학 진학 요인

### 1) 제1중학교 진학 요인

엘리트 선발체계는 각국의 계층 이동성 및 교육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의 대학입학 제도는 1970년대까지 지원자의 출신성분, 조직생활 등을 고려한 추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예비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천을 받아 대학별 전형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sup>83)</sup>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수재교육도 197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평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체능분야 및 이과분야에서 비공식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0년대 김정일의 주도로 과학기술분야 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를 설립했다. 1984년 평양제1중학교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각 도에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했고, 1999년부터는 각 시·군·구역까지 200여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모든 중등학생들을 능력별로 선발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후 제1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군별 경쟁이 과열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낮아지자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고 수재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9년 도 제1중학교와 시 제1중학교의 일부만 남기고 제1중학교를 다시 일반 학교로 전환했다.<sup>84)</sup> 그러나 여전히 “누가 제1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질문이다. 즉, 북한에서 1970년대까지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이 엘리트 선발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83) 신효숙, “북한의 대학교육과 대학입시”, 『수행인문학』 제37집 제2호 (2007), 52-53.

84) 김유연, “북한의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2014), 3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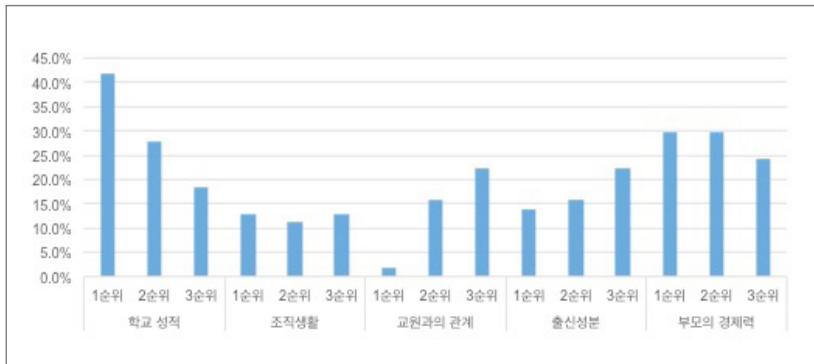
1980년대부터는 능력에 따른 선발기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본 조사에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1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1, 2, 3순위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림 5-10>과 같은 백분율로 요인들이 선택되었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학교 성적이었다고, 2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부모의 경제력이었다. 각 요인별로 1순위 빈도에 3점, 2순위 빈도에 2점, 3순위 빈도에 1점을 곱하면 학교 성적 72점, 부모의 경제력 62점, 출신성분 34점, 조직생활 27점, 교원과의 관계 21점 순으로 나타난다.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모두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면 학생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술했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과 평양 출신 40대 여성에 따르면 제1중학교 편입시험 강도가 셀 뿐 아니라, 입학해서도 매주 시험 본 결과를 학교 정문에 붙여놓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면 “자기 자존심이 망가지”고 자퇴를 하기도 한다. 이는 제1중학교가 “철저하게 실력에 기초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체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생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하면 제1중학교에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 역시 중요한 진학 요인이다. 혜산 출신 20대 여성은 자녀를 제1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과외지도를 시키는 부모도 많고, 제1중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더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야 하는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제1중학교 입학을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혜산 출신의 20대 남성에 의하면 제1중학교 학생들은 “잘사는 집 애들 하고 실력 있는 애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실력이 출중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도 집안에 재력이 있으면 입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혜산 출신 30대 여성은 제1중학교가 확대되면서 입학 부정행위가 생겨난 것이 제1중학교

를 다시 축소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은 오늘날에도 도 제1중학교는 실력만으로 모집하지만, 시 제1중학교 입시의 경우 비리가 많다고 증언했다. 시 제1중학교 학생들은 가정 경제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옷차림도 다르고 피부 톤도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1중학교 학생 선발에서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조사 및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제1중학교 진학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10〉 제1중학교 진학 요인 우선순위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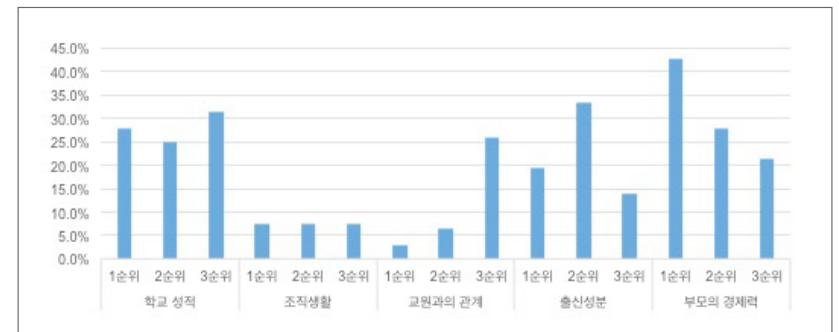
## 2) 대학 진학 요인

북한 당국은 1980년대부터 대학입시 제도를 능력 중심 선발체제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입학시험은 매해 11월에 지방 교육기관에서 전체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추천을 위한 예비시험을 치고, 학교 성적과 졸업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00년대 초반에

는 제1중학교가 확대 설립된 이후 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에 대학추천권이 많이 배정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학교에 적게 배정되었다.<sup>85)</sup>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 이후 초중등 교원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에 대한 배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대학 입시비리와 학생에 대한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본 조사에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1, 2, 3순위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림 5-11〉과 같은 백분율로 요인들이 선택되었다. 제1중학교 진학 요인과 다르게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부모의 경제력이었고, 2순위는 출신성분이었다. 학교 성적은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각 요인별로 1순위 빈도에 3점, 2순위 빈도에 2점, 3순위 빈도에 1점을 곱하면 부모의 경제력 74 점, 학교 성적 59점, 출신성분 50점, 교원과의 관계 17점, 조직생활 17점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5-11〉 대학 진학 요인 우선순위 (탈북 연도 2019년 기준)



85) 정근식 외, 『북한의 대학』 (과천: 진인진, 2017), 61-62.

제1중학교 진학 요인에서는 학교 성적이 1순위 요인으로 선택된 반면, 대학 진학 요인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1순위 요인으로 선택된 점이 흥미롭다. 학교 성적은 3순위로 많이 선택되었으나, 순위를 점수화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제1중학교에서보다 출신성분의 우선순위 점수가 높아 대학 진학에 가정배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김정일이 간부사업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원칙을 세울 것을 지시한 이후 북한 고등교육 진학률이 증가하였음에도, 2018년 기준 26.8%로 추정되는 고등교육 총 등록률은 같은 해 95.9%로 측정되는 한국이나 84.6%로 측정되는 러시아 등에 비해 여전히 낮다.<sup>86)</sup> 고등교육, 그 중에서도 대학에 진학할 기회는 더더욱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 결과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대학 입시비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 입시비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은 대학을 “돈만 있으면 가는 거”라고 표현했고, 혜산 출신 20대 남성은 각 대학의 학장, 당비서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학생 선발권을 얻는 것도, 학생이 그들로부터 추천권을 얻는 것도 “모든 게 다 뇌물로 이뤄지는” 거라고 진술했다. 평양 소재 중앙대학에 가려면 실력과 가정형편 모두 중요하며 실력만으로 가려면 “완전 수재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활에도 가정의 경제적 보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무상고등교육을 시행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교육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역 후원단체와 학부모들의 지원,

학생들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sup>87)</sup> 대학 교수가 배급이나 노임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 과목마다 시험을 볼 때마다 ‘과목 대처비’라고도 하고(혜산 출신 20대 남성), ‘도덕점수’라고도 하는(신의주 출신 30대 여성) 비용을 주어야 한다. 신의주 출신 30대 여성은 대학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학생들의 노력동원도 빈번하여 거기서 제외되려면 하루에 중국돈 30원씩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활을 뒷바라지해줄 수 없는 가정의 학생들은 진학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셋째, 혜산 출신 20대 남성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서는 또 뇌물을 쥐여야 하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은 대학 갈 필요가 없”다. 특히 간부를 하려면 토대가 좋아야 하고 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다. 청진 출신 20대 여성은 대학 졸업 후에 지방으로 ‘현실 체험’을 1-2년 나간 후 간부가 되는데, 그때도 “돈을 내야 좀 더 쉬운 데로” 간다고 증언했다.

북한 당국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2011년 제정된 보통교육법 제 52조 1항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학교 입학 및 수업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대의 입시비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간부들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보도된 사건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8)</sup>

86)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21년 11월 19일 접속, <http://uis.unesco.org/en/country/kp>.

87) 정근식 외, 32.

88) 손덕호, “국정원 ‘평양의대 입시비리 발생해 간부 직위해제’” 조선비즈 2020년 11월 27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23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234.html).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체계 구축에 공들여 온 북한은 입시비리를 방지하고 “실력 본위의 원칙”<sup>89)</sup>에서 신속·정확하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 대학입학원격시험을 도입했다. 2016년경부터 지역에서 실시했고,<sup>90)</sup>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중앙대학들의 대학입학 본고사가 원격시험으로 전환되었다.<sup>91)</sup> 2019년에 탈북한 청진 출신 20대 여성 자문회의 참여자는 2018년에 사촌 동생이 대학입학원격시험을 봤다며 원격시험으로 전환된 후 입시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증언했다. 시험 보기 전 친척이 당비서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어쩔 수 없다며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2019년에 탈북한 해산 출신 40대 여성은 아들의 대학추천권을 얻기 위해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아들과 함께 원격시험을 보고 점수를 비교해 본 학생이 신소를 해서 결국 아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털어놓았다. 즉, 대학입학원격시험 도입이 입시비리를 근절하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감소시키고 학생을 실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평가와 시사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기를 아동·청소년기에 보냈거나 그 후 태어난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10년 동안의 조사결과 중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 드러난 문항을 살펴 본 결과, 20대 조사 참여자들은 기성세

89) 김영수, “대학입학을 위한 우리 식의 원격시험체계” 교육신문 2015년 9월 17일.

90) 김지수 외, 173-176.

91)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서울: 통일연구원, 2020), 66.

대와 다르게 탈북 결심 이유로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10-30대 조사 참여자들은 기성세대보다 남한문화 경험도가 높았다. 남한문화 경험도의 경우 북한에서 외부 접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2015-2017년 ‘자주 접해봤다’의 응답률이 하락했는데,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10-30대 응답의 하락은 미미했다. 외부 정보와 문화 변화에 민감한 청년층은 북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남한문화를 향유하며, 과도한 사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체제를 기성세대보다 더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청년층이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학령기에 고난의 행군기를 겪으면서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붕괴를 경험했고, 그 중 일부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교육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 및 외부 데이터, 자문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노력이 출석률과 제도 구축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여전히 교육현실에 적용되는 측면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의 출석률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데, 본 조사결과 고난의 행군기 이전에 학교를 다녔던 세대에 비해서는 장마당 세대의 출석률이 낮았다. 또한 2019년 탈북한 조사 참여자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다는 응답은 낮은 반면 세 부담을 낸다는 응답은 높게 나왔다.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학교 시설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그것이 북한 당국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로부터 걷는 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감시가 행해지고 있으나, 해방 후부터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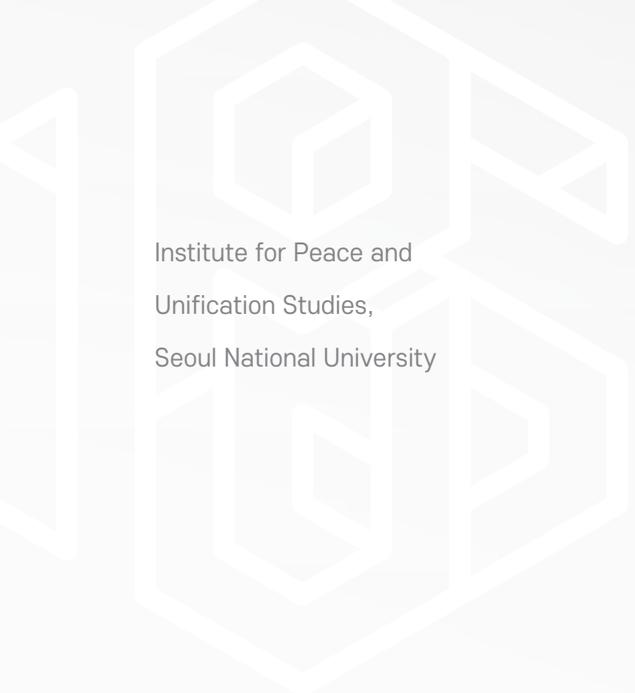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학교 시설을 개선해왔던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또한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응답은 낮은 반면 뇌물을 받는다는 응답은 높게 나와 교원이 본받을 만한 점이 많거나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느끼는 것과 별개로 교원들의 부정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처우를 개선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원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면 교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부정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편 북한 사회의 계층이 분화되고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2014년부터 조사된 사교육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사경험이 있을수록, 비공식소득이 높을수록 더 사교육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충분한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한 기회는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에서는 실력을 우선으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 입시비리가 존재하고 대학생들과 졸업 후 직장배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학입학원격시험을 도입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시비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본 장은 북한 새로운 세대의 특성과 교육 실태에 대해 축적된 조사결과 및 외부 자료, 자문회의 자료 등 파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하여 분석해보았

다. 어느 사회이던 그 미래를 예측하려면 청년세대에 주목해야 하듯이 북한의 새 세대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진행하지 않은 현재로서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퍼즐을 맞추듯 제도와 실태의 변화를 계속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심화분석 -  
대북제재와  
주민생활**

## 제6장

# 심화분석 - 대북제재와 주민생활

| 송원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1. 서론

이번 심화분석 장에서는 2017년 이후 대북 제재 심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2017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주민의 일상소비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제재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인과성 분석이나 추세 분석은 제재의 영향력, 북한주민의 인권(건강권, 생명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추세를 통한 분석이다.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소비와 지출구조(식사 횟수, 육류 섭취, 식비 지출, 문화생활 지출), 수입원의 변화(외화벌이와 해외 파견 등 해외 고수입원, 장사의 재료 출처, 물건과 원료 확보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인식(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와 외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순차적으로 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앞서 살펴본 수입원 변인들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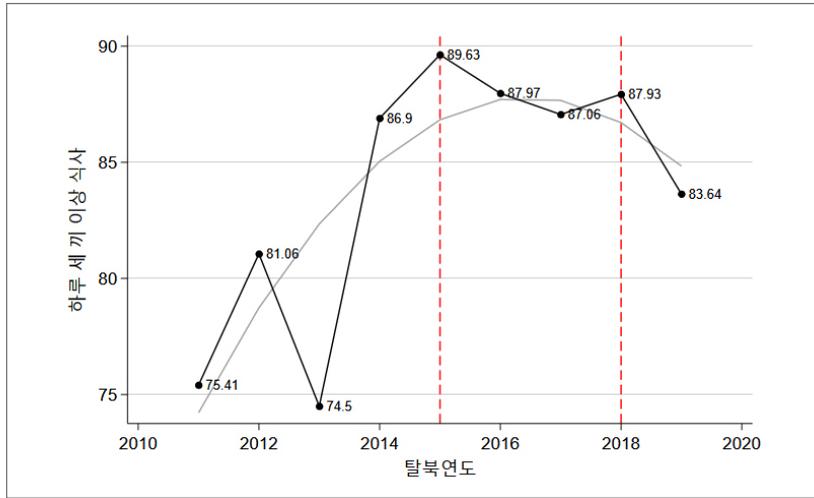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종속변수(북한주민 의식문항)의 종류에 따라 이항변수(문항의 응답 가짓수가 두 개)들은 로짓(logistic regression), 다항변수(문항의 응답 가짓수가 세 가지 이상)들은 순위형 로짓(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2. 생활상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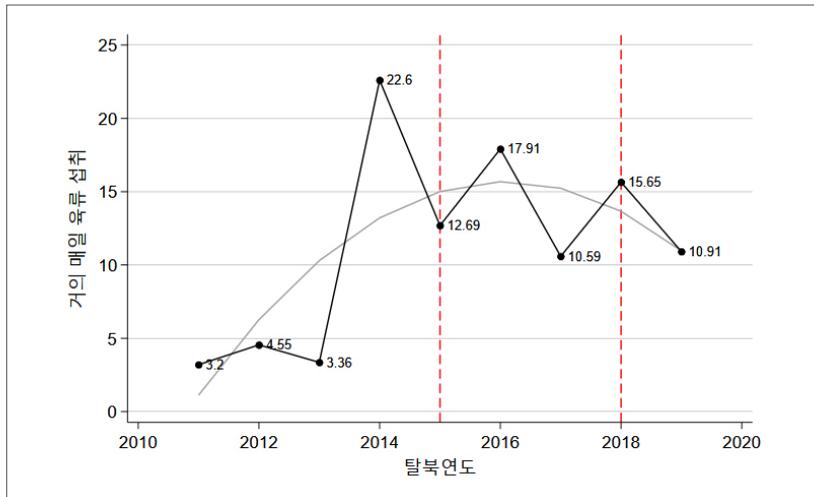
### 1) 소비와 지출구조

이 부분에서는 북한주민의 10여 년간 소비와 지출구조를 살펴본다. 우리가 볼 것은 식사 횟수, 육류 섭취 횟수, 식비 지출, 그리고 문화생활 지출이다. 만일 제재의 심화가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로 인한 영향이 추세선에 보여져야 할 것이다. 모든 추세선에는 fractional-polynomial fit(분수 다항식 적합선) 곡선을 추가하여 매해 변동을 억제하여 완만한 추세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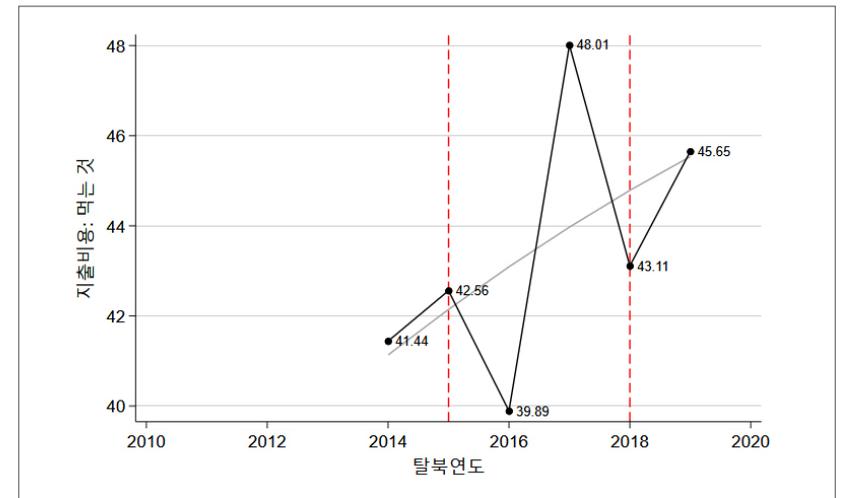
〈그림 6-1〉 하루 세 끼 이상 식사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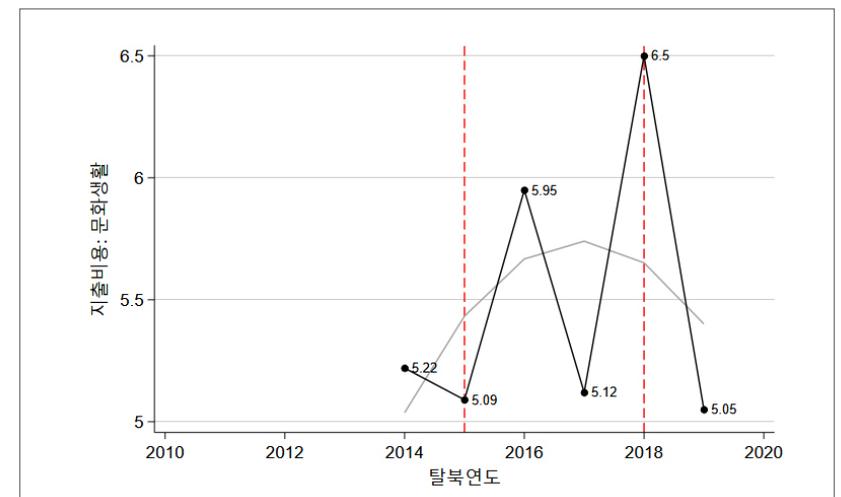
〈그림 6-2〉 거의 매일 육류 섭취 응답률



〈그림 6-3〉 식비 지출



〈그림 6-4〉 문화생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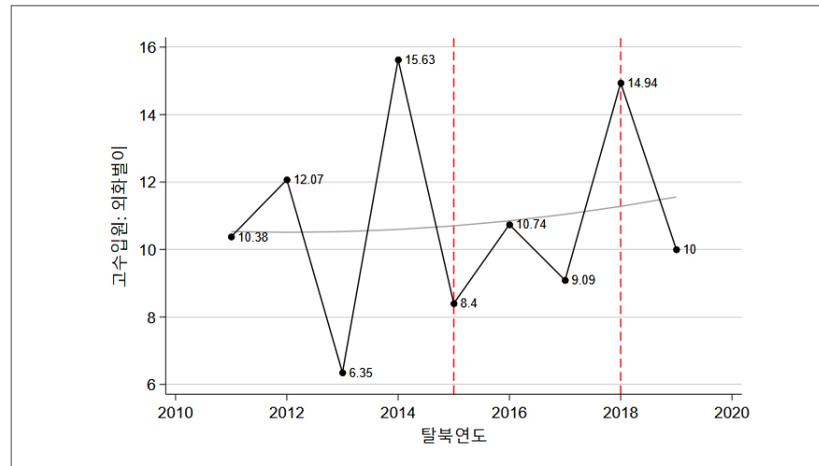


북한주민들의 소비와 지출구조를 볼 때 북한주민들이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하루 세끼 이상 식사를 한다는 주민들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편으로 거의 매일 육류를 섭취한다는 비율 또한 그렇다. 식비 지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문화생활 지출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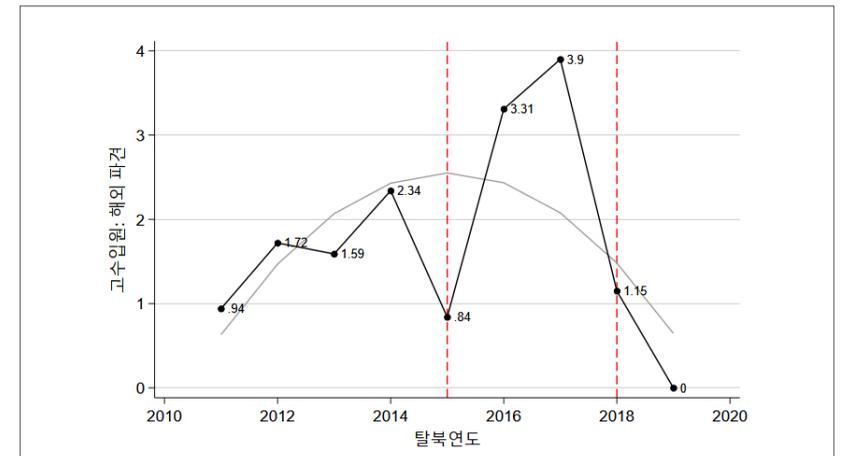
## 2) 수입원의 변화

수입원의 경우 연구진은 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가 무엇인지 선택하게 하였다. 그중 경제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 예상되는 '외화벌이 계통'과 '해외 파견노동 근무'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 살펴보았다.

〈그림 6-5〉 고수입원 중 외화벌이 응답률



〈그림 6-6〉 고수입원 중 해외 파견노동 근무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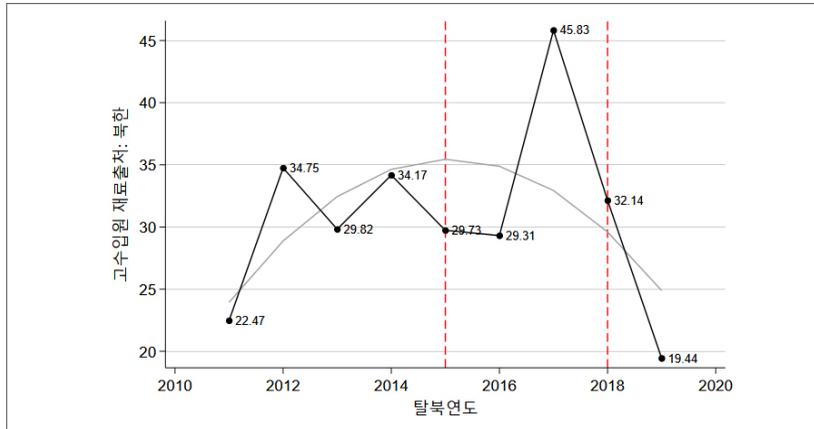


〈그림 6-5〉에 따르면 고수입원 중 '외화벌이 계통'이라 답한 북한주민의 수는 변동 폭이 커 쉽게 해석이 어려우며 제재가 매우 심화되는 2018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므로 2020년 이후의 자료를 보아야 확실히 알 것이다. 자료를 보면 고수입원으로 외화벌이의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에 큰 변화가 없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의 예술품 판매 등의 외화벌이가 대북제재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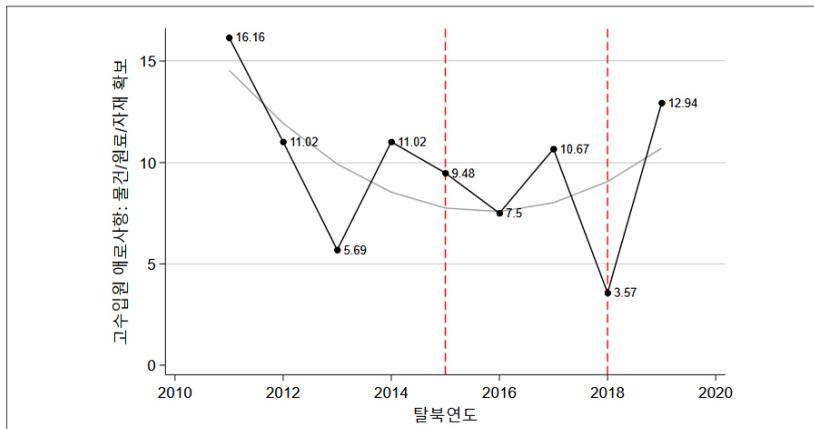
'해외 파견노동 근무'의 경우 별목, 건설, 식당, 의료사업 등을 통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근무 수입을 이르며 2017년부터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8월 이후 채택된 일련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를 신규로 받아들이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체류 중인

노동자도 2년 이내에 돌려보내게 되었다.<sup>92)</sup> 이에 따라 ‘해외 파견노력 근무’의 응답률도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7〉 고수입원의 재료출처 북한 응답률



〈그림 6-8〉 고수입원 애로사항 물건/원료/자재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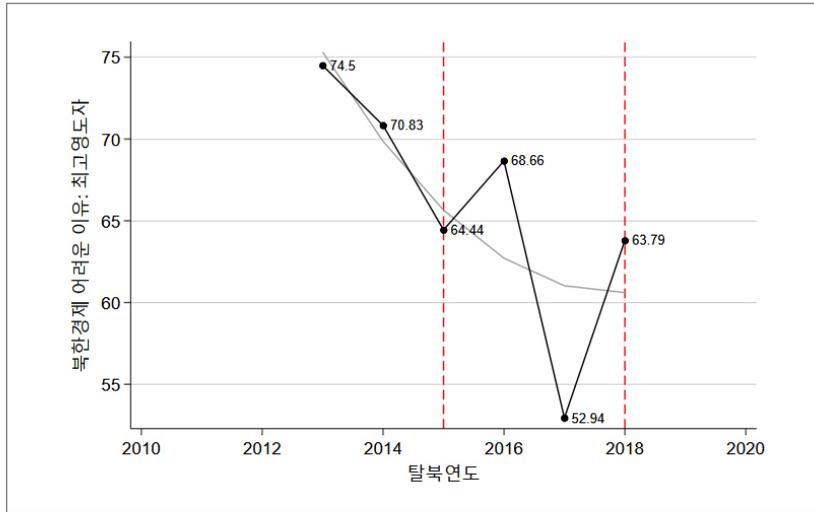
92)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KINU Online Series』 CO 21-12 (2021)

〈그림 6-7〉과 〈그림 6-8〉에선 제재의 국내시장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문항에서 “장사 물건이나 사업용 원재, 자재는 주로 어느 나라 것이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만일 제재의 영향이 강하다면 북한산 원료 출처가 증가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산 원료에 대한 응답률은 줄고 외국산 원료에 대한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한편으로 장사 물건이나 원료/자재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답변한 북한주민의 수는 2018년에 크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다 더 확실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 또한 2020년 이후의 자료가 더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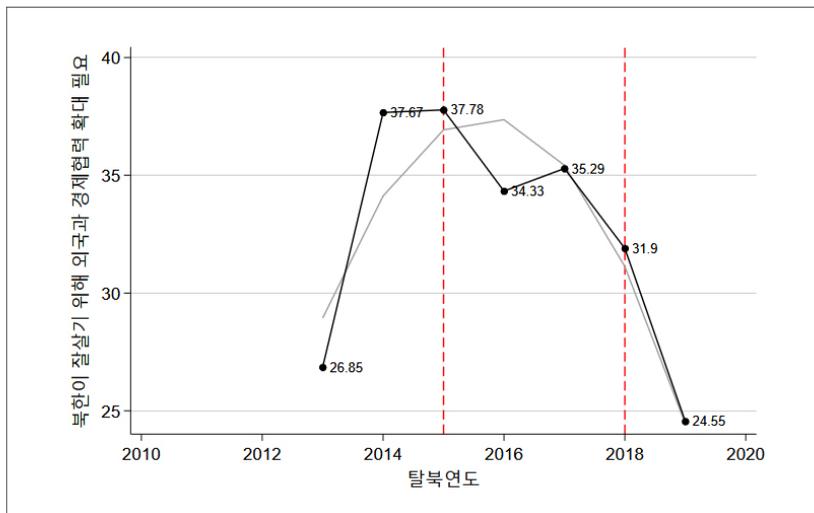
### 3) 북한 경제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대북 경제제재의 심화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북한 경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만일 제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따른 인식의 변화도 있으리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6-9〉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최고영도자



〈그림 6-10〉 북한이 잘살기 위해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필요



연구진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림 6-9〉는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최고영도자라 답한 이탈주민들의 수치이다. 최고영도자가 잘못이라는 응답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제재가 심화된 2018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자료가 없어 확실한 해석은 힘들다. 〈그림 6-10〉에 나타난 북한이 잘살기 위해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경제제재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북한 경제와 체제에 대한 변화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4) 소결

추세선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결을 (불확실하지만) 내려볼 수 있다. 첫째, 소비와 지출구조에서는 제재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끼 식사와 육류 섭취 응답률이 감소하였으며 식비 지출은 증가하고 문화생활 지출은 감소하였다. 둘째로 수입원의 변화에서는 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외화벌이나 해외 파견근무 계통에서 고수입원을 얻었다는 응답률은 감소하는 영향을 보이나 국내 시장적 영향은 제한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재료출처가 북한이라는 응답은 감소했고 고수입원 장사의 애로사항이 물건/원료/자재 확보라는 응답도 변동이 심해 쉽게 해석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경제제재가 심화된다고 해서 북한주민의 여론이 정권과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뀌는 일은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최고영도자라는 응답은 2018년에 크게 상승하나 그 이후 자료가 없어 추세가 불

확실하다. 제일 놀라운 것은 북한이 잘살기 위해 외국과의 경제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관적으로 하강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 주체, 자립 등을 강화하는 내부 담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 3. 생활상 변수들의 인식 결정요인

이 파트에서는 앞서 살펴본 생활상 변인들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sup>93)</sup> 회귀분석을 위해 또한 <북한이탈 주민 의식조사>에서 사용된 기본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추가하였다.<sup>94)</sup> 방법론적으로는 종속변수(북한주민 의식문항)의 종류에 따라 이항변수(문항의 응답 가짓수가 두 개)들은 로짓(logistic regression), 다항변수(문항의 응답 가짓수가 세 가지 이상)들은 순위형 로짓(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93) 수입원의 변화 변수 중 재료출처와 원료확보에 관한 변수들은 장사를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94) 사용된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 수준, 여성, 연령그룹, 장사 경험 유무, 당원 여부, 장마당 세대 여부, 남한 친척 유무, 공식소득, 비공식소득(소득의 경우 log값으로 변화하였음), 그리고 탈북 연도 연도 고정효과(year fixed effects).

<표 6-1> 생활상 변인들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최고지도자 지지도 (nk02)	김정은 직무평가 (nk02a)	사회통제 유지도 (nk04)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nk06)	북한 핵무기 보유 (nk07)
세끼 식사	-0.0915 (0.245)	-0.118 (0.416)	0.408 (0.254)	0.330 (0.259)	-0.153 (0.293)
육류 섭취	0.0923 (0.251)	-0.427* (0.188)	-0.0149 (0.189)	0.256 (0.196)	-0.0558 (0.223)
식비 지출	-0.00451 (0.00527)	-0.0138*** (0.00243)	-0.00251 (0.00613)	0.00139 (0.00412)	0.00169 (0.00348)
문화 지출	0.000470 (0.00760)	0.0100* (0.00466)	0.00356 (0.0150)	-0.0169 (0.0147)	0.00881 (0.00868)
외화벌이	-0.255 (0.232)	-0.587*** (0.115)	0.549 (0.381)	0.463 (0.244)	0.0173 (0.264)
파견근무	-0.590 (0.623)	-0.0293 (0.346)	0.268 (0.328)	0.368 (1.127)	-0.731* (0.335)
교육수준	-0.137 (0.192)	-0.536 (0.396)	0.0791 (0.132)	0.185 (0.121)	-0.0230 (0.135)
여성	0.117 (0.204)	0.305* (0.150)	-0.274 (0.217)	-0.226 (0.121)	-0.218** (0.0836)
연령그룹	-0.154 (0.123)	-0.127 (0.124)	0.126 (0.142)	-0.100 (0.0755)	0.0571 (0.0937)
장사경험	-0.497*** (0.134)	-0.632*** (0.0444)	-0.223 (0.172)	-0.158 (0.0873)	-0.202 (0.175)
당원	0.0841 (0.112)	0.290** (0.0898)	-0.249 (0.264)	-0.347 (0.244)	0.555* (0.259)
장마당 세대	0.0233 (0.325)	0.304 (0.293)	-0.315 (0.300)	-0.117 (0.133)	0.478 (0.265)
남한친척	-0.122 (0.200)	-0.276 (0.263)	0.100 (0.210)	0.180*** (0.0525)	-0.0177 (0.128)
공식소득	-0.00982 (0.0216)	-0.00392 (0.0174)	-0.0199 (0.0177)	0.00222 (0.0154)	-0.00398 (0.00761)
비공식소득	0.000491 (0.0208)	0.0402* (0.0203)	-0.00482 (0.0287)	0.0219 (0.0166)	0.0249 (0.0138)
상수					
관측치	574	334	576	576	576

=\*\* p<0.05 \*\*\* p<0.01 \*\*\*\* p<0.001\*

연구진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다양한 북한 정권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첫째로 ‘최고지도자 지지도’는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주민들의 최고지도자 지지가 어떠한 것 같은지 물어본 것이다. 여기서는 생활상 변인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둘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김정은 직무평가의 경우 거의 매일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과 식비 지출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화지출 예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으로 외화벌이를 가장 고수입원으로 응답한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와 넷째로 북한 정권의 사회통제 유지도와 북한정권 예상 유지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른 통계적 특성은 찾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파견근무 일꾼들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표 6-2〉 생활상 변인과 북한 경제에 대한 인식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최고영도자 (Q21_6)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필요 (Q22_4)
세 끼 식사	0.0423 (0.295)	-0.224 (0.273)
육류 섭취	-0.270 (0.271)	0.125 (0.274)
식비 지출	-0.00226 (0.00804)	-0.00238 (0.00589)
문화 지출	-0.00508 (0.0148)	0.00122 (0.0188)
외화벌이	-0.0305 (0.263)	-0.0414 (0.148)
파견근무	-0.229 (0.535)	1.436 (1.195)
교육수준	0.114 (0.410)	-0.517** (0.187)
여성	-0.455** (0.138)	0.506 (0.307)
연령그룹	0.239** (0.0903)	-0.0578 (0.101)
장사경험	0.322* (0.164)	-0.213 (0.218)
당원	0.144 (0.441)	0.0429 (0.319)
장마당 세대	-0.226 (0.468)	0.0736 (0.226)
남한친척	0.116 (0.268)	0.236 (0.221)
공식소득	-0.000512 (0.0260)	0.00154 (0.0154)
비공식소득	-0.0285 (0.0250)	0.00495 (0.0188)
상수	1.238 (0.843)	-0.469 (0.387)
관측치	497	573

=\* p<0.05 \*\* p<0.01 \*\*\* p<0.001\*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문항과 북한이 잘살기 위해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한지 묻는 문항의 경우 생활상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찾지 못하였다.

〈표 6-3〉 생활상 변인과 통일/대남/주변국 인식

	통일의 필요성(uni01)	남한적대(sk01_5)	미국적대(fp02_1)
세끼 식사	0.0730 (0.306)	-0.161 (0.254)	0.560 (0.351)
육류 섭취	0.224 (0.476)	0.324 (0.340)	-0.543 (0.365)
식비 지출	-0.00367 (0.00785)	0.00946 (0.00486)	0.00621 (0.00355)
문화 지출	0.0195 (0.0283)	0.0179 (0.0153)	0.0107 (0.0136)
외화벌이	-1.069*** (0.312)	0.324 (0.351)	-0.121 (0.474)
파견근무	-0.550 (1.178)	1.343 (0.876)	0.586 (0.570)
교육수준	0.352 (0.341)	-0.492** (0.164)	-0.771*** (0.171)
여성	0.0203 (0.304)	-0.130 (0.207)	0.882* (0.385)
연령그룹	0.0150 (0.246)	-0.00253 (0.247)	0.216** (0.0674)
장사경험	-0.0600 (0.0990)	0.843* (0.388)	-0.325 (0.272)
당원	0.136 (0.332)	0.435 (0.376)	0.480 (0.390)
장마당 세대	-0.707 (0.428)	0.126 (0.386)	0.619* (0.281)
남한친척	0.557*** (0.143)	0.269 (0.235)	0.518*** (0.127)
공식소득	0.0666* (0.0330)	0.0222 (0.0226)	-0.00153 (0.0280)
비공식소득	0.0243 (0.0351)	-0.000429 (0.0355)	0.0539 (0.0276)
상수		-3.130** (1.046)	-1.356 (0.917)
관측치	576	575	563

=\*\* p<0.05 \*\* p<0.01 \*\*\* p<0.001\*

연구진은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남한과 미국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문항의 경우 고수입원을 외화벌이라 답한 응답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변인들이 남한과 미국을 적대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결과는 생활상 변인들에선 찾을 수 없었다.

#### 4. 결론

이번 분석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세선을 통한 분석을 보면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력은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비와 지출구조에는 제재의 영향력이 적게나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보여준다. 또한 제재의 심화가 북한주민의 북한 정권과 경제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체제유지와 결속,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 하에 북한주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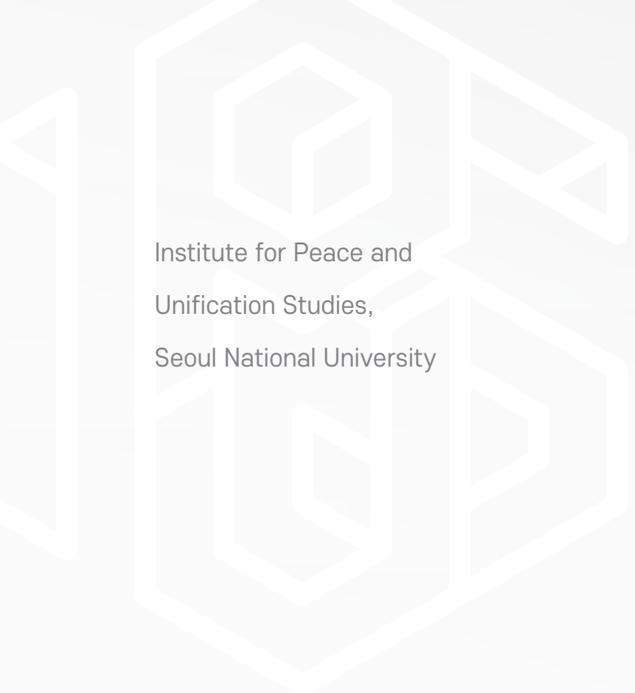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한편으로 생활상 변인들을 사용한 북한의 정권, 경제, 그리고 통일·대남·대미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에 있어서 주로 발견되는 패턴이 보여지는 변수들은 육류섭취 빈도, 식비와 문화비 지출, 외화벌이 일꾼과 해외파견 근무가 있다. 육류섭취 빈도와 식비지출 비율이 높은 사람들과 외화벌이 일꾼들은 감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문화지출 비율이 높은 경우 김

정은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외화벌이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본 심화분석 장의 분석은 한계 또한 존재한다. 첫째는 눈덩이 표본모집 (snowballing sampling) 과정을 거쳐 전체 이탈주민 모집단(population)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많은 경우 2020년 이탈주민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을 알기 힘든 점이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2020년 1월 25일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외국인 방북 금지, 물자 반입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동해 1월 30일에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단행하여 2021년 현재에도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탈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가 없어 몇몇 추세는 2018년부터 심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인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2020년 자료가 생산된다면 추세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표 6-4〉 종속변수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nk02	1,236	5.347896	2.624766	1	9
nk02a	443	1.191874	0.968615	0	3
nk04	1,240	1.390323	0.81999	0	3
nk06	1,237	2.52304	2.220563	0	6
nk07	877	2.435576	1.363923	0	4
Q21_6	765	0.669281	0.47078	0	1
Q22_4	870	0.329885	0.470442	0	1
uni01	1,240	3.866935	0.48633	0	4
sk01_5	1,241	0.198227	0.398825	0	1
fp02_1	1,112	0.756295	0.42951	0	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장  
**총론**

## 제7장

### 총론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매년 탈북 1년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한 누적 결과를 분석한 자료로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일관된 조사 기법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한다면 202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코로나 19 충격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포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은 철저한 국경 통제를 실시하였고, 대중 수출 뿐 아니라 대중 수입까지 급감하면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 소비재 공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들의 밀수 활동 또한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시장을 기반으로 생활하던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지난 9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 사회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북한의 의식주와 정보화를 분석한 정은미의 분석에 따르면 먼저,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집권 10년 내내 양적 그리고 질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식생활은 양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질

적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의류 소비 역시 초기에 비해 증기,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구입 횟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산 의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공업의 국산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산 경공업품의 생산 증가는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국영상점이나 직매점과 같은 사회주의상업망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현상도 포착되었다. 2019년 조사부터 포함된 살림집 내 내구재 보유 현황을 보면 저소득 개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전제품의 보유율이 비교적 높고 대부분의 내구재 보유율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 증가가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 증가는 국가의 정보화 정책, 정보기술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경제활동에서 정보화기기의 활용성 증가, 체면 중시 및 과시 소비와 같은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두 번째,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의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후기(2018~2020년)에도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는 대체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 조사 분석결과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기에 비해 후기에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 상층에 비해 중층과 하층의 소득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

세 번째, 계층 간 불평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산층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김정은 10년 동안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는데, 특히 중층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층의 소득 증가가 생활에 미친

영향은 의식주 생활 지표 개선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하지만 정박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생계에서 시장 의존율이 높은 중하층의 경우 방역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 수입의 존도가 높은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과 같은 기초 식료품의 수입 급감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국경봉쇄 해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개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하층 주민들의 경우 보유 현금의 고갈 및 소득 감소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박사는 권력자본과의 접근도에 따라 경제자원의 분배가 차등화되는 북한 사회의 위계 구조 속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이 우려스럽다는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소득 및 지출 분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추이를 파악한 이종민의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김정은 시대 들어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들의 현금 소득은 중간값 기준 2010년대 초반 45만원에서 중반 5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같은 시기 약 5%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 경제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 여건도 다소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이후 탈북민의 현금 소득 규모(intensive margin)는 중위소득 기준 제재 강화 직전과 동일하였으나, 유소득 응답자

비율(extensive margin)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시기 주민들의 소득 창출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농업 생산량과 식량 수입 확대에 힘입어 주민들의 식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구집단별 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북한에서는 대외무역과 장마당 경제에 깊게 관여할수록 고소득을 올릴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소득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80년대에 비해 시장화의 진전 이후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된 모습을 반영한다. 본고에서 추정된 북한의 지니계수는 0.513으로 콜롬비아(0.513), 브라질(0.534) 등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중남미 일부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된 이면에, 시장 제도 미비로 인한 불평등 확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분석한 박상민, 이해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엔제재와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과거 체제전환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만성적인 보건의료 재정부족으로 인한 비공식의료시장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북한의 봉쇄 정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비공식적 의료비용의 활성화는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제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료인들도 비공식적 의료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환자 진료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보

상을 기대하게 되어 환자의 경제적 수준은 북한 내 의료접근성의 괴리를 발생시켰고, 비공식적 선물은 환자 진료에도 차별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정망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공식 의료시장의 확대는 북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자가치료 행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방역에 대한 영역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지속적-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비감염성질환에는 의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유엔제재와 코비드 락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보건의료시장이 확대되고 빈부 및 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접근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추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이를 고려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에는 어떤 대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교육 부분을 다룬 김유연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기를 아동·청소년기에 보냈거나 그 후 태어난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청년층이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학령기에 고난의 행군기를 겪으면서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붕괴를 경험했고, 그 중 일부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교육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러한 노력이 출석률과 제도 구축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여전히 교육현실에 적용되는 측면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충분한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한 기회는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에서는 실력을 우선으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 입시비리가 존재하고 대학생들과 졸업 후 직장배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사경험이 있을수록, 비공식소득이 높을수록 더 사교육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학입학원격시험을 도입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시비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유연은 교육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쓰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 실태를 제재와 관계를 통해 항목 간 교차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한 송원준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첫째, 추세선을 통한 분석을 보면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력은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비와 지출구조에는 제재의 영향력이 적게나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보여준다. 또한 제재의 심화가 북한주민의 북한 정권과 경제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체제유지와 결속,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 하에 북한주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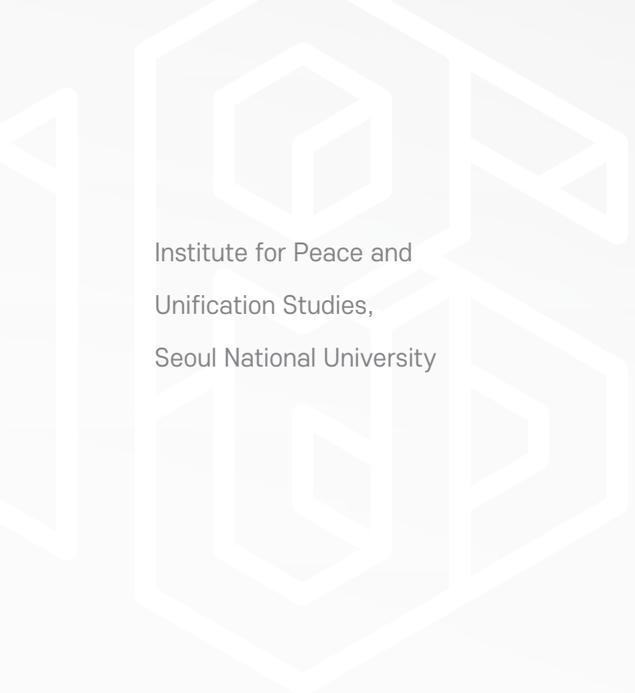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생활상 변인들을 사용한 북한의 정권,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에 있어서 주로 발견되는 변수들은 육류섭취 빈도, 식비와 문

화비 지출, 외화벌이 일꾼과 해외파견 근무가 있다. 재밌는 것은 육류섭취 빈도와 식비지출 비율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외화벌이 일꾼들은 감정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문화지출 비율이 높은 경우 감정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해외 파견근무 경험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외화벌이 노동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외 활동 경험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나 두 개 국가론에 대해 더 긍정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탈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송원준의 주장하는 몇몇 추세가 2017년부터 심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인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라 재구성한 감정은 시대 북한 체제의 사회경제실태(의식주, 소득, 교육, 정보통신 및 보건의료 등)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매우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은행 통계나 우리 국민의 일반 통념과 달리 감정은 체제가 사회경제적 지표를 짚은 시일에 향상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2017년 이후 대북 제재의 누적 효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시작된 셀프 록-다운 상황이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2020년 이후 탈북민 수가 급감함으로써 이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것이 그 이유이다. 향후에도 계기가 주어진다면 본 조사는 한국 내의 독보적인 민간 북한이탈주민 조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확인하며 본 조사 연구의 결과를 공개한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부록  
**설문지**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을 떠나오기 전 본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1.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의 귀하의 식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보통 하루 몇 끼를 먹었습니까?**

- ① 하루 세 끼 이상
- ② 하루 두 끼
- ③ 하루 한 끼
- ④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

**(2) 식사를 할 때 보통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

- ①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 ②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었다.
- ③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었다.
- ④ 강냉이 위주로 입쌀을 섞어 먹었다.
- ⑤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3)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 ① 거의 매일 먹었다.
- ②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④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⑤ 먹은 적이 없다.

**(4) 귀하가 북한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귀국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 ③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2.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의 귀하의 의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으셨습니까?**

- ① 한 달에 한두 벌 정도 또는 더 자주
- ②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 ③ 1년에 한두 벌 정도
- ④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 ⑤ 산 적이 없다.

**(2) 입은 옷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① 장마당(시장)에서 사 입음
- ② 국영상점(직매점 포함)에서 사 입음
- ③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에서 사 입음
- ④ 직접 또는 친척을 통해 외국에서 사 입음
- 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음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3) 입은 옷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 ② 중국
- ③ 남한
- ④ 일본
- ⑤ 러시아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3.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 귀하가 살았던 살림집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어떤 형태의 살림집에서 사셨습니까?**

- ① 아파트
- ② 하모니카집(연립주택)
- ③ 독집(단독주택)
- ④ 기타 살림집 (적어주세요: )

**(2) 살았던 살림집은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 ① 국가에서 배정받음
- ② 돈 주고 샀음
- ③ 직접 지었음
- ④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받음
- ⑤ 친척이나 주변 사람한테 받음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3) 다음 중 살림집에 있었던 것을 모두 골라 표시해주세요.**

- ① 텔레비전
- ② 냉장고(냉동고 포함)
- ③ 전기밥솥
- ④ 세탁기
- ⑤ CD 플레이어(알판 재생기, 노트텔, 녹화기 포함)
- ⑥ 집전화
- ⑦ 손전화(휴대전화)
- ⑧ 컴퓨터(노트북 포함)
- ⑨ 자전거
- ⑩ 오토바이
- ⑪ 가축(집짐승)
- ⑫ 텃밭
- ⑬ 태양광 전지판

**4. 북한에 살았던 당시 귀하의 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북한에서 본인의 손전화가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1)~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2)로 이동)

**(1)~1. 손전화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 ① 장사 또는 사업일
- ② 일상적 대화나 소식 주고받기
- ③ 직장 등에서 공적인 업무
- ④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놀이(게임) 등 오락용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1)-2. 손전화기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및 수금하거나 물건 값을 결제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2) 북한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질문 (2)-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3)으로 이동)

(2)-1. 컴퓨터는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였습니까?

- ①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 ② 본인의 집
- ③ 이웃, 친척, 친구의 집
- ④ 기타 (적어주세요: )

(3) 북한에서 인터넷(해외접속이 차단된 북한 내부망)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질문 (3)-1로 이동)
- ② 없었다(☞ 질문 (4)로 이동)

(3)-1. 인터넷을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였습니까?

- ①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 ② 본인의 집
- ③ 이웃, 친척, 친구의 집
- ④ 기타 (적어주세요: )

(4) 북한에서 남한산 물건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질문 (4)-1로 이동)
- ② 없었다(☞ 질문 (5)로 이동)

(4)-1. 사용해 본 적이 있던 남한산 물건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의류
- ② 식품
- ③ 잡화(화장품, 신발, 시계, 귀금속 등)
- ④ 가전제품(TV, 라디오, 밥솥, 녹화기, 손전화기, 컴퓨터 등)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5) 일상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돈 버는 것
- ②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 (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
- ③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 ④ 조직생활
- ⑤ 출세
- ⑥ 자녀 교육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6)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편과 부인 중 누가 주로 결정하였습니까?

(기혼자의 경우는 본인의 경우에 대하여,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경우에 대하여 답해 주세요)

- ①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 ②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③ 부인이 주로 결정하되 남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④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 ⑤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7)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돈을 주고 자녀에게 따로 과외공부(개인강습)를 배웠거나, 자녀에게 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질문 (7)-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5.로 이동)

(7)-1. 귀하가 배웠거나 자녀에게 시킨 적이 있는 과외공부(개인강습)가 있으면 모두 골라 표시해주세요.

- ① 음악(악기, 성악 등)
- ② 외국어(영어, 중국어, 노어 등)
- ③ 컴퓨터
- ④ 체육
- ⑤ 무용
- ⑥ 교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5.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월평균 수입 중에서 아래 제시된 것들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예시에 나온 것처럼 적어주세요.

(※ 총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숫자로 적어주세요.)

\* 예시: 총합: 100%

① 먹는 것 (30%)	② 입는 것 (10%)
③ 살림집 (20%)	④ 자녀교육 (10%)
⑤ 저축 (15%)	⑥ 문화생활 (10%)
⑦ 기타 (5%)	

- ① 먹는 것 ( )
- ② 입는 것 ( )
- ③ 살림집 ( )
- ④ 자녀교육 ( )
- ⑤ 저축 ( )
- ⑥ 문화생활 ( )
- ⑦ 기타 ( ) ☞ ①~⑥에 사용한 것 이외의 모든 것(병원비, 약값, 교통비, 통신비 등)을 합한 액수를 비율로 적어주세요.

6.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북한주민의 계층 비중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 중층, 하층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주세요.)

- 상층 ( %)
- 중층 ( %)
- 하층 ( %)

7.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 상자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 가장 못사는 도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평안남도	② 평안북도	③ 함경남도
④ 함경북도	⑤ 자강도	⑥ 양강도
⑦ 황해남도	⑧ 황해북도	⑨ 강원도

- (가) 가장 잘 사는 도 ( )
- (나) 가장 못 사는 도 ( )

(1) 그럼, 평양을 제외하고 아래 상자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 가장 못사는 시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신의주	② 청진	③ 라선	④ 혜산
⑤ 원산	⑥ 남포	⑦ 평성	⑧ 사리원
⑨ 개성			

- (가) 가장 잘 사는 시 ( )
- (나) 가장 못 사는 시 ( )

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잘사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중앙당 간부
- ② 지방당 간부
- ③ 법기관(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간부
- ④ 인민위원회 간부
- ⑤ 전문직(의사, 교수, 기술자 등)
- ⑥ 외화벌이
- ⑦ 군관
- ⑧ 시장 상인 (장사)
- ⑨ 기업소·공장 간부
- ⑩ 기업소·공장 노동자
- ⑪ 농장 관리일꾼
- ⑫ 농장원

(가) 가장 잘사는 직업  
1순위 ( ) 2순위 ( )

(나) 중간 정도 사는 직업  
1순위 ( ) 2순위 ( )

(다) 가장 못사는 직업  
1순위 ( ) 2순위 ( )

(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경제 활동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사람들 중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당 일군
- ② 법기관 일군(보위부, 안전부, 검찰기관 등)
- ③ 인민위원회 일군
- ④ 지배인
- ⑤ 조직생활 일군(직업동맹, 농근맹, 여맹, 청년동맹 일군)
- ⑥ 인민반장
- ⑦ 돈주

1순위 ( ) 2순위 ( )

(2)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사람들 중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당 일군
- ② 법기관 일군(보위부, 안전부, 검찰기관 등)
- ③ 인민위원회 일군
- ④ 지배인
- ⑤ 조직생활 일군(직업동맹, 농근맹, 여맹, 청년동맹 일군)
- ⑥ 인민반장
- ⑦ 돈주

1순위 ( ) 2순위 ( )

9. 귀하는 현재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는 차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 ① 정치사상성의 차이 때문에
- ②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 ③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 ④ 가족관계(친척 포함) 때문에
- ⑤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때문에
- ⑥ 사는 지역의 차이 때문에
- ⑦ 개인 성격 또는 자기 노력의 차이 때문에
- ⑧ 출신성분의 차이 때문에
- ⑨ 운수소관(자기 팔자 때문에)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의 세 시기에 각각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로 표시해주세요.

(가) 2000년~2004년	(나) 2005년~2009년
① 상층	① 상층
② 중층	② 중층
③ 하층	③ 하층
(다) 2010~2014년	(라) 2015년~탈북 직전
① 상층	① 상층
② 중층	② 중층
③ 하층	③ 하층

1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 국гар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총합은 북한 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족 총수는 \_\_\_\_\_명이고 그 중 \_\_\_\_\_명이 직장을 나가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12.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장사를 하거나 다른 부업(더벌이)을 했고, 그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입이 북한 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 만일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 아무도 장사나 다른 부업을 한 사람이 없었으면 0원이라고 써주세요.)

가족 총수는 \_\_\_\_\_명이고 그 중 \_\_\_\_\_명이 장사나 부업으로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13.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벌어들인 전체 수입 중에서 각종 뇌물로 고인 액수의 비율은 얼마나 되었는지 골라주세요.

- ① 10% 이하
- ② 20%이하
- ③ 30% 이하
- ④ 40%이하
- ⑤ 50% 이하
- ⑥ 50% 이상
- ⑦ 전혀 없음

14.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한 개를 골라 V로 표시해주세요.

- ① 소매장사 (시장 매대장사, 달리기, 행방 등)
- ② 개인 편의봉사 (이동 미용사, 전자제품 수리공, 집 수리공 등)
- ③ 개인 (임)가공 (의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 수공업)
- ④ 식당, 상점 임대 운영
- ⑤ 되거리장사 (차판장사, 도매장사)
- ⑥ 외화벌이 계통 (수출 원천동원이나 대치물자 수입 등 포함)
- ⑦ 돈장사
- ⑧ 샅벌이 (가대거군, 소토지 임시노력, 바다 임시노력 등)
- ⑨ 해외 파견노력 근무 (벌목, 건설, 식당, 의료사업 등)
-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⑪ 해당없음 (☞ 질문 19로 이동)

15. 위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③ 1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16. 위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① 자신의 사업 수완 부족
- ② 사업자금(밀천)을 마련하는 일
- ③ 장사 물건이나 원료, 자재를 확보하는 일
- ④ 같은 업종의 경쟁자들과나 수입상품과의 판매 경쟁
- ⑤ 도로, 철도 사정
- ⑥ 전기 사정
- ⑦ 법기관의 단속이나 뇌물 고이는 일
- ⑧ 기타 (적어주세요: )

17. 14번 문항에서 ① ~ ⑥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1) 장사 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느 나라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② 중국 ③ 남한 ④ 러시아
- ⑤ 일본 ⑥ 기타(적어주세요: )

(2)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 ① 공장기업소 ② 무역회사 ③ 말수
- ④ 도매시장 ⑤ 간부 ⑥ 화교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18. 14번 문항에서 ① ~ ⑦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위의 일을 할 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질문 19로 이동)

(1) 18.질문의 ①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가) 연간 평균 몇 명을 고용했습니까?  
(약 명)

(나) 연간 평균 얼마 동안 고용했습니까?  
(약 일 또는 개월)

19.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②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③ 누구나 자유롭게 공장이나 기업소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④ 누구나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⑤ 개인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2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① 사상성(수령·당에 대한 충실성, 자력갱생 정신 등) 강화
- ② 과학기술 발전
- ③ 경제관리방법 개선
- ④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 ⑤ 자본주의 도입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21.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전에 이용한 의료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나올 때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이 없다'를 선택해 주세요)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시·군(구역) 인민병원

-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도 중앙병원

-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22.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진료소(치과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2-1번으로)
- ② 아니오
- ③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1) 북한에서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증상이 가벼워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 ③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 ④ 교통편이 불편해 병의원 등에 가기 힘들어서
- ⑤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 ⑥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 ⑦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워서
- ⑧ 병원에 가도 적절한 장비가 없어 치료받을 수 없어서
- ⑨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을 수 없어서
- ⑩ 기타 (적어주세요: )

23. 귀하는 호담당 의사, 진료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뒷돈(고인돈)을 내거나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선물을 준 경우, 무엇을 주었는지 적어주세요: )
- ② 아니오
- ③ 병의원 치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24.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호담당 의사, 진료소, 병원 개인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장마당, 또는 개인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 본인이 장마당, 개인약국 등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병의원, 진료소에 약이 없어서
- ② 병의원, 진료소에서 처방한 약을 사기 위해서
- ③ 병의원, 진료소 약보다 효과가 좋아서
- ④ 기타 (적어주세요: )

26. 다음 시기 별 귀하의 키(신장 cm)와 몸무게(체중 kg)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키(cm)	cm
몸무게(kg)	kg
북한 출국 당시 _____년 _____월	
키(cm)	cm
몸무게(kg)	kg

27. 북한 병원에 약이 없어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진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_\_\_\_\_년

28. 북한에서 중학교(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면 얼마나 자주 학교에 갔습니까?

- ① 거의 매일 출석
- ② 한 달에 1~3일 결석
- ③ 한 달에 4~10일 결석
- ④ 한 달에 11일 이상 결석

29. 북한에서 제1중학교(1고중)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① 학교 성적
- ② 조직 생활
- ③ 교원과의 관계
- ④ 출신성분
- ⑤ 부모의 경제력

30. 북한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① 학교 성적
- ② 조직 생활
- ③ 교원과의 관계
- ④ 출신성분
- ⑤ 부모의 경제력

31.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1	2	3	4	5
②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었다.	1	2	3	4	5
③ 학교에 세 부담(돈)을 냈다.	1	2	3	4	5
④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높았다.	1	2	3	4	5
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했다.	1	2	3	4	5
⑥ 학생들은 매일 노력동원되었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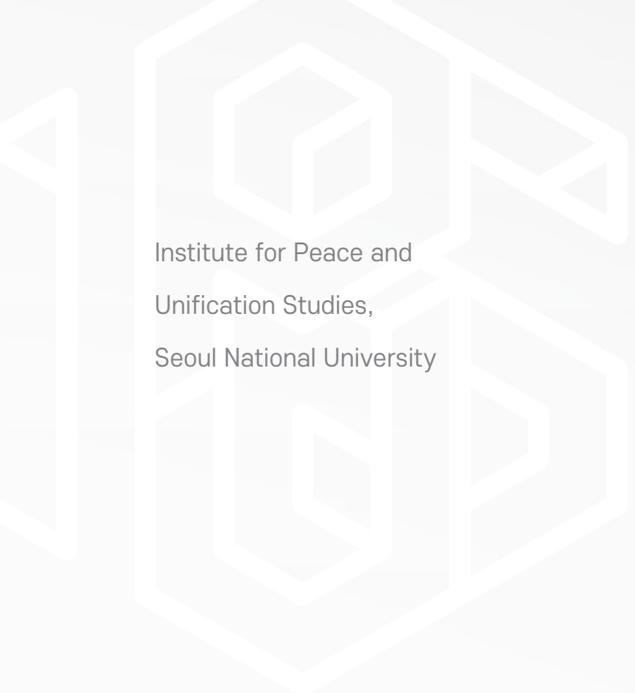
32.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교원은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	1	2	3	4	5
② 교원은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다.	1	2	3	4	5
③ 교원의 가르침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④ 교원은 학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1	2	3	4	5
⑤ 교원은 학생들에게 뇌물을 받는다.	1	2	3	4	5

33.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조금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① 사회보장	1	2	3	4	5
② 무상치료	1	2	3	4	5
③ 무상교육	1	2	3	4	5
④ 무상보육	1	2	3	4	5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제1장 연구 개요 |

- 김병연 외,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18-12 (2018): 35-64.

### | 제2장 의식주와 정보화 |

-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2면.
- 식약일보,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식약일보*, 2021년 12월 17일, <http://www.kfdn.co.kr/54983>.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UNICEF DPRK, June 2018.
-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 FAO, *202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ome: FAO, 2021.
-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 Quarterly Report No.3-4*, Rome: FAO, December, September 2021.

### | 제3장 경제 - 소득과 지출 |

- 김규철,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0-04 (2020).
-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KINU연구총서』 2016-10 (2016).
- 식약일보,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식약일보*, 2021년 12월 17일, <http://www.kfdn.co.kr/54983>.
- 이종민 · 김민정, “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 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제2022-9호 (2022).
-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7집 제2호 (2015): 74-109.
- \_\_\_\_\_, 『북한사회변동 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중 “의식주와 정보화,”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 \_\_\_\_\_, 『북한사회변동 2020: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중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시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1.
- 정은찬, “북한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경북대학교, 2012.
- 홍제환 · 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KINU 연구 총서』 21-13 (2021): 133-143.
- DailyNK
- FAO and 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me: FAO and WFP, November 2012.
-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The World Bank, “Gini index (World Bank estimate),” The World Bank, accessed 2021,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

### | 제4장 보건 의료 |

- 진숙, “북한 의약품 정책의 특징과 한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2012).
- 류국현,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고려대학교, 2016.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북한 보건의료 백서(2019년 개정판)』,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9.
- 설송아, “北돈주, 의료시스템장악?...“약국’ 직접운영 성행” *Daily NK*, 2016년 11월 16일.
- 질병관리청, “2020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 『건강과 질병』 제14권 제17호 (2021).
-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 “Enhancing Institutional Capacities in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Food Security in the DPRK roadmap,” 2015.
- FAO. *Midterm Strategy Pla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Sector DPRK, 2016-2020* (FAO, n.d.)
- IHM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HME, n.d., <http://www.healthdata.org/north-korea>.

- Kondrashin et al., "Mass primaquine treatment to eliminate vivax malaria: lessons from the past," *Malaria Journal* 13(1) (2014).
- WHO, *Noncommunicable Diseases (NCD) Country Profiles 2018*, WHO, September 2018.

### | 제5장 교육 - 새로운 세대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5), 1-27.
-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파주: 창비, 2020.
- 김영수, “대학입학을 위한 우리 식의 원격시험체계,” 『교육신문』, 2015년 9월 17일.
- 김유연, “북한의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2014.
- 김정원 외,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3).
- 김지수 외,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9.
- 김학재 외, 『북한사회변동 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박형중·전현준·박영자·윤철기,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손덕호, “국정원 “평양의대 입시비리 발생해 간부 직위해제”, 『조선비즈』, 2020년 11월 27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23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234.html).
- 신호숙, “북한의 대학교육과 대학입시,” 『수행인문학』 제37집 제2호 (2007).
- 정근식 외, 『북한의 대학』, 과천: 진인진, 2017.
-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151-191.
- 이항규,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중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형성: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서울: 경인문화사, 2006, 9-21.
- 정동준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8』,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09-131.

-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채경희,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2019).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7.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21년 11월 19일 접속, <http://uis.unesco.org/en/country/kp>.

### | 제6장 심화분석 |

-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KINU Online Series』 CO 21-12 (202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56

## 북한사회변동 2012-2020

발행일	2022. 05. 13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김병연
저 자	김유연, 박상민·이혜원, 송원준, 이종민, 정은미, 이정철*
조사원	김경민, 김덕우, 노현종, 박형준, 신은영, 이정옥, 이혜선, 오은경, 조용신, 최경희, 최은정, 한승대
연구보조	김민지
주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화로 173, 교육협력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화	031-5176-2332~3
팩스	031-624-4751
홈페이지	<a href="https://ipus.snu.ac.kr">https://ipus.snu.ac.kr</a>
디자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02-2268-1968)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저자: 김유연, 박상민·이혜원, 송원준, 이종민, 정은미, 이정철\*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 56)

권말부록: 설문지

ISBN 979-11-978812-1-3 : 비매품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